

독일 통일 백서 (1999)

2000. 3

통 일 부

- 이 책자는 독일 연방수상실이 작년 말 발표한 「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정부의 1999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 이 연례보고서는 1998년 9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보고서로서, 그 동안의 독일통합(변화)과정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일부가 기 발간한 「독일통일백서」('94), 「독일 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 「독일통일백서」('95~'97)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0. 3.

통 일 정 책 실 장

목 차

책을 내면서

제1장 분단의 극복과 결속의 지원	1
1. 10년 전 구동독에서의 민주적 출발-현재를 위한 출발점	1
1.1 평화적 혁명과 통일	2
2. 사회적 통일의 과제	4
2.1 사회적 결속의 강화	5
2.2 사회적 정의와 조화	6
2.3 성과에 대한 인정	7
2.4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행위 청산과 전제정치의 희생자에 대한 공동의 추모	8
2.5 희생자의 복권	10
2.6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대-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반대	12
2.7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범죄원인과의 전쟁	13
2.8 연방군-통일군대	14
3. 사회적 연대 과제로서 신연방주 재건	14
3.1 연대협약의 고수	16
3.2 동독재건 실적 설명에 있어서의 진실	17
3.3 재정상의 구부채에 대한 규정	18
3.4 주정부 재정의 개선	19
3.5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	20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22
1.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	22
1.1 최초 재건단계에서의 발전과 높은 성장률	23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오가 발생	23

1.3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것들	25
2.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동인	27
2.1	잘못된 발전의 수정	28
2.2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9
2.3	직업훈련 일자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노력	31
2.4	동독재건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신뢰	32
2.5	미래영역의 규정과 전망의 진전	32
2.6	직업, 직업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합	33
3.	1999년 연방재정에 나타난 동독지역 재건의 안정	34
4.	동독지역 재건에 있어서의 전략적 접근분야	38
4.1	효율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향한 지원정책	40
4.2	경쟁력 장애요인의 제거	41
4.3	이노베이션지원 :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중요한 중점과제	42
4.4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43
4.5	인프라와 주거환경의 계속적 개선	44
 제3장 경제와 고용 강화, 환경보호		47
1.	신연방주의 경제적 재건과 고용창출의 목적과 원칙	47
1.1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것들	47
1.2	주목할 만한 진전	48
1.3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	48
1.4	향후 경제정책의 원칙	49
1.5	연방정부에 의해 설정된 주요 진로	50
1.6	지원수단의 효율성 제고	51
2.	산업기반의 강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지원, 통일관련 특수업무청	52
2.1	산업기반의 강화	52
2.2	중소기업의 지원	54
2.3	창업과 기업의 정착, 자기자본	55
2.4	통일관련 특수업무청	56

3.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정책	57
3.1 인프라의 확충	57
3.1.1 철도	58
3.1.2 횡단철도	59
3.1.3 연방간선도로(국도)	60
3.1.4 연방수로	60
3.1.5 화물교통센터	61
3.1.6 근거리 공공여객 교통	61
3.1.7 항공교통	62
3.1.8 해로교통과 항만산업	63
3.2 에너지정책	64
3.2.1 갈탄에 의한 발전의 확보	64
3.2.2 전기료의 서독수준으로의 조절	65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촉진법의 개정	66
4.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6
4.2 고용촉진법 개정	67
5. 지방경제의 강화와 농업보호	68
5.1 경제 발전	69
5.2 과거 국영 농업 및 임업토지의 사유화 현황	70
5.3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결합	71
5.4 구조조정 지원	72
5.5 구부채의 정리	74
5.6 공동 농업정책의 개혁-지원규정의 적응	74
6. 생태파괴의 개선과 자연과의 지속적 친화	75
6.1 인접국가와의 관계 재건과 공동작업 : 엘베강과 오더강의 수질 개선 프로그램	76
6.2 접경 하천에 대한 폴란드 및 체코와의 공동작업	78
6.3 갈탄탄광의 정상화	78
6.4 산업용지의 개발	79

6.5 오염의 정화	80
6.6 광산의 방사선 오염	81
6.7 방사능 오염의 조사	81
6.8 우라늄광산 유산의 해체와 정상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	82
6.9 원자력발전 시설의 해체	83
6.10 자연보호	83
6.11 보호지역의 매각금지	84
6.12 생물서식공간의 연결체계 형성	85

제4장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진전 86

1.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직업교육과 재교육의 강화, 청소년 실업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86
1.1 1998년 직업교육상황	86
1.2 청소년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87
1.3 고용과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	88
1.4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그 밖의 프로그램과 자발적 시도들	89
1.5 직업교육의 혁신	92
1.6 구동독에서의 직업적인 전문자격의 인정	92
2. 동독지역 연구부문의 확충	93
2.1 동독 대학의 현대화	93
2.2 대학특별프로그램(HSPⅢ)	93
2.3 교육의 장려	93
2.4 대학확충의 강화	94
2.5 대학 교육의 현대화	94
2.6 국제적 수준의 학위과정	94
2.7 “통신대학교육”의 장려	95
2.8 새로운 교육매체의 투입	95
2.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자	96
2.10 대학의 연구 강화	97

2.11 국제적 대학협력	98
2.12 동독의 연구환경의 확장	98
2.13 연구 하부구조의 증축	99
2.14 기반 연구의 강화	100
2.15 기술지향적 연구의 강화	101
3. 기업의 창의성 강화, 지식의 교환	103
3.1 기업관련 혁신지원정책의 새로운 역점들	104
3.2 “Inno-Regio-지역을 위한 혁신적 동인” 프로그램	106
3.3 정보교환을 위한 또다른 프로그램들	106
3.4 연구와 발전 그리고 혁신의 장려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107
제5장 사회 보장과 삶의 질	109
1. 지불 가능한 주거지와 살 가치 있는 도시, 과거 부채	109
1.1 주거는 지불가능하다	109
1.2 주택지의 현대화 진행	110
1.3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111
1.4 자가주택소유의 촉진	111
1.5 부채탕감을 통한 건설부문의 효과적인 작업보장	112
1.6 부동산 법률의 정비	113
1.7 살 가치가 있는 도시들	114
1.8 연방수도 베를린의 증축	116
2. 연금보험, 노령층의 자립성, 시민참여	117
2.1 연금보험	117
2.2 추가·특별구호체계를 위한 권리의 법정연금보험으로의 전이	118
2.3 노인의 사회적 참여	119
2.4 노년층의 주거	120
2.5 노인을 위한 새로운 체제	121
2.6 자발적 참여의 촉진	121
2.7 복지후생사업의 체계구축	122

3. 광범위한 건강보호, 재정지원	123
3.1 보건복지	125
3.2 장애인 돌보기, 재활 및 적응	128
3.3 법정 의료보험에서의 재정	130
4.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의 여성	132
4.1 사회적 변화 속의 여성	132
4.2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행동계획	133
4.3 경제적인 개혁 내의 여성	134
4.4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135
4.5 여성의 창업	135
4.6 자립여성이 지역의 구조발전을 형성한다	136
4.7 여성의 직장생활로의 편입을 돕는 다른 자발단체들	136
5. 청소년 및 가족정책	137
5.1 모든 가정의 승인과 지원	137
5.2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개선	140
5.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회	142
5.4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의 수립과 수행	143
5.5 일일탁아시설	144
5.6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의 만남	145
5.7 청소년 실업 문제 제거	146
5.8 청소년 폭력, 외국인에 대한 적대 그리고 범죄 예방	147
5.9 어린이 권리 강화	148

제6장 예술, 문화, 체육분야 통합을 위한 기여 150

1. 독일 통일에 의한 문화적 확장	150
2. 문화적 명소와 건축물의 보전, 새로운 프로젝트	151
2.1 전국가적으로 의미있는 문화 시설 지원 “등대-지원”	151
2.2 “신연방주의 문화” 건설프로그램	153
2.3 기타 투자자금	154

2.4 베를린	155
2.5 기념물 보호	156
2.6 문서관리	157
3. 체육, 황금 빛 동부계획	158
3.1 황금 빛 동부계획	159
3.2 스포츠학 기관	160

제1장 분단의 극복과 결속의 지원

1. 10년 전 구동독에서의 민주적 출발 - 현재를 위한 출발점

“분명한 것은 독일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그 이전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독일을 지나쳐 갈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분단과 철조망 그리고 사형이라는 억압으로 유지되는 분단이 역사의 강풍에 견디지 못하리라고 저는 항상 확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저는 다시 새롭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를린은 살아 남을 것이고 장벽은 붕괴될 것이다..”

빌리 브란트가 1989년 11월 10일 쇠네베르크 시청 앞에서 행한 “이제 함께 성장할..”이라는 연설 중에서

10년 전에 베를린장벽은 무너졌고, 그것은 통일의 서곡이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평화혁명과 통일은 동독지역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민주적 관계, 개인적·정치적 자유를 증대시켰다. 이전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강렬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범한 재건 능력과 적응능력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 재건 과정을 끝마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독일의 내적인 통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철저한 경제적·사회적 변혁은 많은 시민들의 개인적 삶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가의 통일, 의회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결합된 희망이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다. 급격한 변혁과 수백만의 실업은 실망감을 낳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동독의 상황을 미화하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멈추어 서 있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내적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1.1 평화적 혁명과 통일

당시 동독에서 용감한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에 앞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독주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권위주의적 정권을 흔들었고, 마침내는 붕괴로 이끌었다. 또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기여가 있었고, 이것이 동구국가의 개혁세력에게 활동 공간을 넓혀 주었다.

구동독의 실질적 변화의 원동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었다. 「평화와 시민의 용기」가 저항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처음에는 수천명이 나중에는 수십만명이 1989년 가을에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완고한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갔다.

사태의 진전은 급격히 활기를 띠었다. 그것은 1989년 5월 7일의 지방선거 결과의 조작에 대한 항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사회주의통일당이 일상적으로 취해온 활동에 대해 더 이상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1989년 6월 4일 북경 천안문에서의 학생시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에 대한 동독 지도부의 지지표시는 시민들에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반개혁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점점 더 많은 동독주민들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또는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가 외국으로의 이주를 요구하였다. 서쪽 방향으로의 급작스런 물결이 몰아쳐 그 수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약 225,000명으로 증대되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동독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

들 나라의 상황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려 하였다.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구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동독의 도시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결연한 변화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9월 4일 라이프찌히에는 니콜라이 교회에서의 평화의 기도가 끝난 후 최초로 1,200명의 사람들이 월요시위를 위해 모였다. 이 평화적 시위는 몇 차례 경과되면서 급속히 팽창되었다. 10월 9일의 라이프찌히 대규모 시위에는 70,000명이 참석하였고, 드레스덴, 프라우엔 등 다른 도시로 번져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전 동독을 뒤덮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분적으로는 정당 형태로, 또는 시민운동 형태의 모습을 띠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9월 9일에는 「신광장」, 9월 12일에는 「민주주의 지금」, 10월 7일에는 「동독지역의 사민당」, 10월 29일에는 「민주주의 출발」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민주적인 반대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통일정권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거세어졌다. 에곤 크렌츠 등 당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다시 선심을 얻기위해 마련한 새로운 여행법의 공포가 1989년 11월 9일 저녁에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다. 28년만에 철조망과 사살명령에 의해 강요된 분단이 마침내 극복되었다. 그리고 곧 국가적 통일을 열망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독일, 하나의 조국”이라는 구호가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었다.

구지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탁회의」가 국회에 앞선 사전 심의기관으로 만들어 졌다. 원탁회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과정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법의 길을 만들었다.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 총선은 동독에서의 평화적 혁명의 중요한 결과로서 의회민주주의 재도입의 증표가 되었다. 1990년 7월 1일의 경제·화폐·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1990년 8월 23일의 서독 기본법하에서 동독의 편입에 관한 인민회의 결정,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은 양국의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국가통일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완전한 주권회복은 외교정책적으로 “2+4” 회담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이웃 국가의 지원과 동독과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시민의 용기, 평화애호는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힘이였다. 그러므로 전독일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에 의해 주어진 선물 또한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 조국의 반쪽인 동독지역에서 투쟁하여 얻은 것이다. 소비에트 점령시절이나 구동독 시절의 시민들은 이러한 가치를 위해 많은 희생을 스스로 떠맡아야만 하였다. 이 용감한 시민들의 운명과 참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빛이 바래서는 안된다. 1989년 가을 그들의 평화적 혁명의 결과가 통일된 독일의 민주적 기초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을 만들어 냈다.

2. 사회적 통일의 과제

공동의 역사에 대한 의식, 혈연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년간 분단된 두 국가에 대한 공동의 소속감이 통일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통일은 독일인에 의해 환영받고 지지받은 정치적 경험이었다.

통일에 대한 최초의 환희가 지나가자, 많은 사람들에게 곧 실망감이 찾아왔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는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 일자리의 상실, 급작스럽게 변화된 경제·법·행정체제에 적응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 점점 더 감소되는 신연방주 주민들의 수입이 많은 부담이 되었다. 또한 동독의 재건에 걸리는 많은 시간에 대한 서독주민의 조급증 등이 그 이유였다. 거리감이 생겨났고 때때로 많은 비판자들은 심지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동의 발전과 결속에 대한 수많은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다. 많

은 일상적인 일들, 즉 자동차 차종이나 여행목적지와 같은 것에서는 동서독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게 되었다. 동서독 지역간의 이사를 통한 교류, 직장에서의 동료적 협동과 다른 많은 사건들은 상호간의 대화와 서로를 알게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 통합의 심화를 모든 독일인들 공동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연대성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독지역 주민과 서독지역 주민 사이에 이해의 심화와 대화가 필요하며, 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 또한 필요하다.

이 장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인 「사회적 결합의 강화」, 「상호존중과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한 인정」, 「동독 재건에 대한 재정 확보」, 「시민권과 관용 특히 외국인에 대한 관용」, 「사회주의통일당 정권하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보상」 등은 연방정부의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다.

2.1 사회적 결속의 강화

독일통일의 실현은 재정적 지원과 경제적 성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내적 통일은 감정적 기반과 공동의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필요로 한다. 경쟁에도 불구하고 연대감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회적 결속의 촉진이 중요하게 되며, 사회적 결속이 결국 독일의 내적 통일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동서독의 주민들은 분단된 과거로 인하여 각양각색의 기억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연대감 속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차이나 각자의 이해 혹은 개인적 소망과 사고를 천편일률적화 하지 않으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내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사회적 정의와 책임이라는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였던 사회에서 공동의 소속감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또한 개인적 자유, 다른 국적을 가진 시민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공동의 사회적 의식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2.2 사회적 정의와 조화

통일 이후 동서독간 생활조건의 격차는 많이 시정되었다. 신연방주의 수입은 현저히 증대되었다. 연금 지급액은 짧은 기간 내에 3배나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사이의 경제 및 사회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격차는 지난 2년 사이에 근소하지만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오늘날 구연방주에서는 5,256 마르크이고 신연방주는 3,853 마르크이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시정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목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있어 항상 특별한 경제적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간격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간격이 즉시 메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체 독일의 생활조건을 균등화하는 법령이 지역적 편차를 시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역적 격차는 대부분 지역의 특별한 경제적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신연방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을 계속 증대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경제적 업적과 고용의 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당사자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계속 사회적·경제적 발전이 저해될 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신연방주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시장에 해당되는 말이다. 사회적 결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와 범죄율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높은 실업과 직업훈련분야에서의 많은 결함들이 시정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청소년실업에 대한 긴급계획으로 금년에 200만 마르크를 배정하였고, 학교졸업생과 견습생 신분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의 40%를 신연방주에 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의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하고, 새롭게 200만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 직업, 경쟁력을 위한 연대의 범위 내에서 기업과의 직업훈련자리를 합의한 것이다. 이 또한 독일 사회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다.

2.3 성과에 대한 인정

동서독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달성한 것에 대해 우리는 자주 과소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양측 주민에 의해서 성과가 빈번히 과소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 놓은 업적과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소홀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 주민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룩된 막대한 비중의 재정적 업적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 특히 기억할 것은 신연방주 주민들의 재건을 위한 노력,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과 급속히 변화된 세계의 일상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 같은 것들이다.

통일로 인해 직장과 개인적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조직되어야만 하였으며, 동독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수년전부터 세계화의

요구와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신연방주 주민들에게는 거대한 적응에 대한 압박을 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연성과 민첩성이 요구되었다. 동서독인 사이의 생활체험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한편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와 기술부문에 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사회 전체에 대한 변화의 적응력은 동서독 사이의 경험의 교환을 통해 계속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신연방주의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의 과정을 엄청난 정도의 개혁의지와 배우려는 의지, 민첩성, 유연성으로 감당해냈다. 노동환경의 변화에 있어서의 거대한 도전,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과 보수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수 년간에 걸쳐 붕괴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값진 도시들이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값진 물건으로 변하고 있다. 약 50만 개의 자영업이 설립되었고 특히 수공업, 서비스업은 몇 년 만에 서방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사회시설, 국민보건제도, 아동보호와 다른 많은 분야에의 참여도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으로부터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적, 개인적 또는 봉사적인 참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의 공동의 성취를 통한 가능성에 대한 자의식은 대단히 크다. 서로간 일상의 접촉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자의식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적인 사회적 통일에 이르는 길은 상호간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4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행위 청산과 전제정치의 희생자에 대한 공동의 추모

구동독정권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구동독정권의 실제적 구조와 정치적 메카니즘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기억도 적

어도 과학적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 꾸며진 이야기와 추후의 정당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당독재의 원인, 구조 그리고 작용 메카니즘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동독의 체제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국가 내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업적을 적합하게 평가해 주는 것도 필수 불가결하다.

독일하원은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의 역사와 결과의 처리”에 관한 최초의 Enquete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정치·도덕적 판단이 독재체제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대한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소련점령시기나 동독정부에서의 독일인은 독일 전후사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내야만 하였다. (...) 정치·도덕적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구동독정권하의 시민들 스스로에 의해 요구되어야 한다.”

“합의는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의 경험에서 나온 기본적 콘센서스의 바탕위에 성립해야 한다. 사회가 경험한 반전체주의에 대한 의견일치는 내적으로 확고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된다.”

소련점령기나 동독 그리고 독일의 두 개 국가에 대한 역사의 처리는 전체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1998년 독일하원의 당시 네 개 정당은 연방법을 통해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 처리”를 위한 재단설립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재단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모색해야만 한다. 재단의 업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 개인적 자료, 희생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치적·역사적 규명, 학술적 활동, 관련된 자료의 보전과 수집·평가에 대한 지원, 전체주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행사의 공동개최, 독재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공동작업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재단은 1998년 가을 활동을 시작하였고 긴급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다수의 업무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관리청 업무의 중요성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동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작성되었다. 비밀경찰 및 국가보위부의 자료를 피해당사자와 학문적 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한 것은 독재 청산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전체주의 지배체제의 메카니즘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지배체제의 희생자에게 정당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2.5 희생자의 복권

동독의 과거를 청산하고, 원인과 과오에 대해 알아보고, 억압과 향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민주적 구조와 민주적 의식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내적 통일과 과거에 대한 화해는 동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각에서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같은 정도로 정치적 박해자에 대한 복권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되기 얼마전인 1990년 3월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된 동독의 인민회의는 복권법을 의결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복권과 보상을 전체 독일의 과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 개의 복권법 - 형사법적 복권법, 행정법적 복권법, 직업적 복권법을 제정하였다. 1992년 6월 17일의 명예회복공개선언에서 개인적 희생으로 분단 40년의 독일을 통일시킨 데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였다.

박해 희생자와 그 단체는 복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에 대해 항상 불충분한 것으로 비판해왔다. 이 비판은 한편 정당한 것이었다. 복권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는 박해로 인한 고통과 그들의 저항에 대한 인정이 나타나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를 특히 형사법적인 복권법은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동독치하에서의 정치적 구금자들은 이 법을 통한 보상이 자신에게 충분치 못한 것으로 여겼다.

1998년 11월 10일의 정부성명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수상은 “우리는 동독정부

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복권에 관한 규정에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정치적 박해자 대표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연방정부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들의 정당한 기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았다.

연방정부 내각은 1999년 7월 28일 이에 해당되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 규정은 구금자지원법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복권법의 영역 안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1) 형사법적인 복권법에 따른 금전배상금은 과거의 정치적 구금자에 대해 한 달간의 구금에 대해 균등하게 600 마르크로 인상한다. 지금까지의 규정(한달간의 구금에 대해 300 마르크의 금전배상금에 250 마르크까지의 가산금을 받았으며, 이 가산금은 장벽 붕괴까지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정당한 수령자로 지불되었다)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자유의 박탈이 차별적으로 측정될 수 없고 구금조건에 있어서도 동일 기간에 모든 정치적 구금자들에 대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유효한 법에 따라 이미 금전배상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면 적절한 추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정치적 박해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의 유족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되었다. 사형집행자, 구금도중에 또는 구금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들의 친척 및 장벽 희생자의 친척들은 「과거의 정치구금자들을 위한 기금(Stiftung für ehemalige politische Häftlinge)」에서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처럼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받게 되었다.
- (3) 박해로 인한 건강상의 손상을 판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즉 형사법적·행정법적 복권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을 적용하는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신청이

기각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전문가와 담당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의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박해 희생자의 신청이 거절된 건은 직무상 다시 심사하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재교육행사를 통해 주정부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4) 동독의 동쪽 국경선인 오더강과 나이세강 저편의 지역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도 개선될 것이다. 「과거 정치적 박해자를 위한 기금」에 대해 지금까지의 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제공될 것이다.

(5) 신청기간은 세 가지 복권법 모두 균등하게 2년간 연장될 것이다. 연금수혜자에 대한 조건도 개선될 것이다. 즉 연금보험에 있어서 불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복권의 신청을 만료기간 이후에도, 즉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복권법 부문에서 쟁점이 되었던 결함이 제거되었고 희생자단체의 중요한 요구도 충족되었다.

2.6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대 -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반대

모든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민주적 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치적 믿음이며, 두 번에 걸친 독재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중요한 법칙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관용과 수용없이는 다원적 사회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사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상호 결합된 사회적 법치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종종 만족하지 못하고 급진적 물결이나 단체의 영향에 내맡겨진다.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경제적인 대변혁과 서구식으로 독일에 각인되어 기초가 된 가치와 태도에 대하여 많은 동독주민들은 친숙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용인과 안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행동양식을 익히는 것이 더욱 필

요하다. 극단주의, 외국인혐오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사회 전분야에 걸친 노력의 강력한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즉 가족, 학교, 교회, 체육단체, 노동조합, 기업 등이 연결되어야 한다. 1999년 5월 연방정부에 의해 제기된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대 -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반대”의 목표하는 바가 위와 같은 것이다. 목표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공공에게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7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범죄원인과의 전쟁

독일의 대변혁,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좌절 및 확대된 개인적 자유는 범죄 유발의 잠재력을 늘려 놓았다. 이것은 동독지역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에도 마찬가지로인 전반적 사회현상이다. 연방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 즉 범죄의 원인에 단호히 대처하고 법령위반은 철저히 처벌하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보다도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이 영역에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범죄 형태에 있어 현실과 일치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인 「정기치안보고서」는 과학과 연구의 지식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범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만이 목적에 적합한 조치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치안정책(Sicherheitspolitik)의 중요한 핵심은 효과적인 범죄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은 전체 사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학교, 사회화기관, 교육훈련 관계자 모두의 공동작업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야의 국가 및 사설기관의 긴밀하고 신뢰감있는 공동의 작업이 요구된다. 광범위한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주정부 내무장관회의」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독일포럼이 설립되었다.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 포럼에는 동과 서의 모든 관련된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야 한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척도는 현실, 즉 자치단체에서의 실제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업무를 시민들의 필요에 더욱더 부합하게 추진하는 것도 범죄예방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의 거리에 경찰과 질서유지기관의 가시적 존재를 강화 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지역공동체에 의한 치안과 질서를 위한 공동작업은 이에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특히 국경경비대원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8 연방군 - 통일군대

동서독의 공동작업과 통합의 성공 사례로 연방군대를 들 수 있다. 동독 인민군대에서 약 10,000명의 군인과 50,000명의 군무원이 통합되었는데 이는 인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유일무이한 성과이다. 그 사이에 약 40만명의 신연방주 출신의 병역의무자가 연방군에서 복무하였다. 일상적 복무와 국제적 분쟁지역에서의 도전에 대한 공동의 대처는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수많은 중요 군사시설들이 신연방주로 이전되었다.

연방정부는 통일군대의 재건을 앞으로도 시종일관 확고히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군사시설 등의 발주시 신연방주의 기업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연방군대는 동독지역의 재건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었다. 연방군대가 군막사의 건설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확보한 자금의 40%가 신연방주에 투자되었다.

3. 사회적 연대 과제로서 신연방주 재건

신연방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는 풍부한 자원조달이다. 연방정부와 구

연방주는 재정수준에 따라 지원해왔으며, 연방공고화프로그램(연대협약)과 함께 1995년 초부터 2004년 말까지 구속력 있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국가적 수준의 재정조달 이 외에도 중기의 개발지원책을 실현하는 것도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방정부는 연대협약을 고수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연대협약은 동독지역 재건에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척추의 구실을 하고 있다. 연방건설화계획 및 연방정부의 재정균형제도에서 신연방주를 위해 고려한 정치적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부유한 주들의 행동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성급히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면 심각한 경제발전의 지연과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들이 지금까지 신연방주 스스로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지원계획의 틀 안에서 목표가 명확한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경제성장과 경제의 기반으로서 풍부한 창의성개발을 위한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틀안에서 적절한 사회적 추가보완장치를 위한 지원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물론 지원시 목표 적합성과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미래계획 2000」으로써 동독지역의 재건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기 위한 재정정책적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연방재정의 건설화 없이 동독지역의 재건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우선 연방재정의 건전성은 연방정부에게 재정적인 조정가능성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경제 사회적인 평준화과정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향후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1999년 3월 26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에 의해 결정된 『아젠다 2000』은 자기자본결정의 변경 및 농업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에는 분담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혁협약은 2006년까지 확고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지원목표의 축소를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집중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신연방주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는 2006년까지 완전히 「목표 1 개발지역」에 속하게 되며, 동베를린은 「목표 1 개발지역」에서 제외되지만 1억 유로화의 특별지원을 포함하여 7억2천9백만 유로화의 과도기적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은 매년 총 28억5천만 유로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예년에 비해 매년 약 3억7천만 유로화를 추가로 받는 것이 된다.

3.1 연대협약의 고수

연대협약에서 합의되었고, 1995년 이래 유효한 재정균등화정책을 통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는 전체 독일의 연방재정균등화의 틀 속으로 완전히 동등하게 포섭되었다. 수평적인 판매세 분배와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1998년 총 250억 마르크의 금액이 신연방주로 흘러 들어갔다(연방정부의 보충할당액 제외). 이 금액 중에서 신연방주가 주정부간 재정균등화로 받은 금액은 110억 마르크이다. 연방정부는 판매세의 주정부 몫을 7% 인상시켜줌으로써 구연방 주정부의 비용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방교부금의 액수도 특히 신연방주를 위해서 현저히 확대되었다. 1998년에 지불된 연방교부금 257억 마르크 중에서 약 185억 마르크가 신연방주의 몫이 되었다. 이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등화 및 분단으로 인한 특별부담의 제거를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신연방주에만 보장된 특별수요 연방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은 매년 140억 마르크에 달한다.

또한 경제력 강화를 위한 보충적 조치로 연방정부는 「동독재건축진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동안 신연방주에 매년 66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의 연방-주정부 재정관계의 새로운 규정을 위해 사민/녹색당의 연립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였다. 재정이 취약한 주정부와 특히 신연방주의 이해를 특별히 배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연립정부의 협약에서 밝힌 것처럼 2004년에 만기가 되는 재정균등화체제의 중요한 요소를 대치하는 시기적절한 후속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임무분담과 재정관계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 연방 상원과 하원의 합동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합동 정부위원회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3.2 동독재건 실적 설명에 있어서의 진실

새정부는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연방예산의 집행실적을 설명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향후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에 유용한 지불의 흐름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전의 연방정부는 항상 ‘거대한 숫자의 범칙’에 좌우되었으며, 신연방주에서의 업적은 가능한 높이 평가되었고 감명을 줄 수 있는 큰 업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매년 1,000억 마르크 이상이 동독재건에 투입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동독지역을 위한 연방예산으로부터의 모든 지불흐름에 대한 구별없는 축적총액의 표시는 동독지역 본래의 재건 업적에 관해서 대중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었다. 특히 사회보장적 지출이 이러한 사례의 예가 될 수 있다. 동독과 서독지역 모두의 주민들에게 그 조건에만 해당되면 당연히 주어지는 국가의 지출, 예를 들면 아동보조금이나 장학금지원과 같은 것은 단지 양쪽지역 모두에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연방지역을 위한 실적으로서 통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주민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출, 즉 국방인프라 구성을 위한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동독지역 재건과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지불된 막대한 금액은 통일비용에 관한 사회의 비판적 토론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동독지역의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에 따라 지원금액을 계산한다면, 지출액은 3조 1천억 마르크로 평가될 수 있다.

신연방주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실적만이 동독지역 재건에 사용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정된 실적은 동독지역 재건의 지출이며, 이는 다섯가지의 지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999년에 다섯가지 영역에 지출된 액수는 다음과 같다.

-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지원금 32억 마르크
- 지역경제지원금 26억 마르크
- 인프라지원금 189억 마르크
- 노동시장지원금 137억 마르크
- 신탁관리청 후속기관과 동독의 구부채 16억 마르크

여기에 연대협약의 일환으로 신연방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교부금 140억 마르크가 추가된다. 따라서 연방예산으로부터 1999년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약 400억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3.3 재정상의 구부채에 대한 규정

구동독의 부채정리를 위해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의 후속기금으로 1995년 1월 1일 연방특별재산으로 「구부채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동독 구부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부채상태는 2002년에 거의 3,60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 1998년 말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청산기금의 부채 : 1,127억 마르크
- 신탁관리청의 부채 : 2,044억 마르크(차입부채, 인수부채, 신탁관리기업의 부담조정요구액 등으로 구성)
- 구부채지원법에 따른 동독의 주택회사로부터의 구부채 : 282억 마르크
- 공공기관 건설 관련 부채 : 84억 마르크

1998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위해 「구부채변제기금」은 매년 부채부담액의 7.5%를 연방예산으로부터 할당받았다. 여기에 매년 연방은행 수익금으로부터 70억 마르크를 공급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건설 관련 부채청산으로 주정부로부터 3억 마르크를 수령하고 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기금 상태가 양호해짐에 따라 1997년에는 연방의 보조금액을 60억 마르크 인하하였다. 1998년의 삭감액은 51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연방부채의 제도적 구분과 연방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재산의 부채를 연방부채로 편입시키는 법률을 통해서 199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공동채무자로서 연방이 「구부채변제기금」 및 두 개의 별도 특별재산을 떠맡았다. 또한 「구부채변제기금」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부채에 대한 주정부의 몫뿐만 아니라 70억 마르크가 넘는 연방은행 수익금이 투입될 것이다. 「구부채변제기금」의 이자부채는 앞으로 연방예산으로부터 채워지게 된다.

3.4 주정부 재정의 개선

신연방주(전체 베를린과 지역 자치단체 포함) 공공재정의 운영과정은 부족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전개되었다. 신연방주 주민 1인에 대한 예산 지출액은 1993년부터 구연방주의 그것보다 약 25%가 높다.

신연방주의 회복노력은 1인당 투자지출에서도 두드러진다. 1인당 투자지출은 1994년부터 구연방주와 비교해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개인적 지출 역시 신연방주에서 가장 큰 지출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찰된 기간동안 신연방주의 개인적 지출 비율이 구연방주에 비교하여 예외없이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개인적 지출은 구연방주와 비슷하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왜곡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연방주에서의 많은 지출은 자기부담에 의해 이루어지나, 신연방주에서는 그렇지 못하므로(채무부담 등을 통한 지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연방주에서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개인

적 지출비율은 어느 정도의 인원감축을 통해 임금수령자가 다시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독일통일기금의 폐지와 신연방주가 연방정부의 재정균형체도로 편입된 이후 중요한 수입원은 연방교부금으로 대체되었다. 신연방주의 1인당 세금수입은 구연방주보다 상당히 적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세금에 의한 재정비율」(지출에서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8년 약 42%로 확대되었으나, 구연방주의 68%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독경제의 구조적 결함의 극복을 위해 상당한 회복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연방정부에 의한 지원이 신연방주의 재정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5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

지방자치단체는 신연방주의 부분으로서 연대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히 연방정부를 통해 신연방주는 여전히 감소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등화제도의 틀에서 배분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회복노력에는 높은 투자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재건으로 행정재정의 건실화가 수반된다. 즉, 이를 통해 결국 커다란 진전을 성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제고와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 또는 공동투자를 확보하는 일 또한 요구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의 틀을 통해 신연방주 지방행정의 건실화와 재건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구부채를 경감시키는 것은 동독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능력과 도시건설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구부채는 통일조약에 따라 학교, 유치원, 스포츠시설, 보건시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

다.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 3월 6일의 「구부채규정법」에 따라 「구부채변제기금」으로부터 차입이자를 포함하여 총 84억 마르크를 넘겨받았다. 이를 통해 동독 지역도 부채의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1. 경제·사회분야의 근본적 변화

10년전의 정치적 변혁은 구동독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9년 말 동독의 경제는 중앙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경제적 파산에 직면해 있었다. 1,2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200억 달러의 대외부채 외에,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사실은 동독기업의 생산성이 1980년 이래 약 50%가 감소되었고 급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지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동독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미 1990년 2월에 경제·화폐·사회통합체의 창설을 위한 양독정부간의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외에도 급격한 통일의 기회는 서독 마르크를 법정지불 수단으로서 동독지역에서도 가능한 빨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독 마르크의 도입 및 임금과 화폐의 1:1 교환비율은 극도의 현실주의적인 조치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극적으로 악화시켰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쇼크에 대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실업률은 급격히 그리고 현저히 높아졌다. 1990년 말까지 순사회총생산은 18.5%나 감소하였다.

경제구조의 파괴와 사회변혁은 강력한 것이었다. 구동독 900만명의 일자리중 단시간내에 약 1/3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근로자 2명중 1명 이상이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었다. 명백한 실업률을 인식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실업률이 곧 수백만 한계를 넘어섰고, 노동시장정책적인 부담감소조치는 1992년 2백만 고용인의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적·사회적 변혁이 얼마나 사람들의 개인적 생활조건까지 변화시키며, 불안감을 증대시켰는지는 출생률의 현저한 감소에서 읽을 수 있다. 출생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지금도 구연방주의 수준보다 낮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상황이 특히 어렵다.

1.1 최초 재건단계에서의 발전과 높은 성장률

1991년 이후로 신연방주는 높은 성장률과 경제재건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졌다. 신연방주에서 사람들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구매력과 소비의 가능성을 경험했다. 인프라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새로워지고 현대화되었다. 11,700km의 국도와 간선도로, 그리고 5,400km의 철도가 현대화되거나 건설되었다. 특히 우선순위가 도시간 교통로를 다시 연결하는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 주택의 절반 이상이 현대화 내지 재개발되었다. 60만호 이상의 주택이 지금까지 새롭게 건설되었다. 환경파괴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일련의 환경보호 응급조치가 취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식수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공기정화 그리고 경제적 에너지사용 분야 등에 있어 현저히 개선되었다.

신연방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경제적 진전은 50만 이상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수공업과 자유직업분야에 있어 현저한 성장이 있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오가 발생

처음부터 경제전환 과정에서 일련의 잘못된 조정과 잘못된 평가의 징후가 나타났다. 가장 낙관적 환상은 재건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서독 수준의 생활수준으로 근접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3년에서 5년이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임금협상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임금협상당사자들은 기업의 생산성 발전을 훨씬 앞서는 임금을 결정하였고, 이것은 결국 실업문제 발생에 기여한 셈이 되었다.

90년대 중반이래 경제적 왜곡 하에서 개별기업의 규정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 구조 현상이 나타났다. 또 하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방향설정은 사유재산권의 규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정에서 나타났다. “보상보다 반환”이라는 원칙은 경제적 재건을 장기적으로 방해하였고 수년동안 당사자들을 불안으로 이끌었다.

모드로우 정권하에서 설립된 신탁관리청은 콤비나트와 국영기업의 분할을 통해 13,800여개로 분리된 기업을 사유화하는 과제를 담당하였다. 구동독의 거의 모든 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독의 기업들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으므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였다. 동독 산업설비의 약 29%가 11년 - 20년 된 것이었고, 21%는 심지어 20년 이상 된 것이었다. 동독의 경제는 수년전만 해도 이러한 설비에 의존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별적 사유화는 서독 기업수준의 자기자본설비를 확보하며 구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제전문가의 압도적 다수는 신탁관리청을 통한 신속한 사유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신탁관리청을 통한 신속한 사유화만이 동독 경제의 시장경제구조로의 신속한 결합과 이를 통한 동독경제의 팽창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속한 사유화전략은 국가의 책임범위 내에서 구사회주의 기업에 대한 개조와 유지조치를 위한 여유를 너무 적게 허용하였고 초기에 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 이해를 따랐으므로 사유화 이전에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한편으로 동독경제의 구조조정은 신속한 사유화만이 동독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확신에 근거하였다.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 가장 빨리 시장관계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다.

이것은 사유화가 실패하였고, 일자리 보장과 투자약속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살해된 신탁관리청 청장 Detlev Rohwedder는 신탁청의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신속한 사유화, 확고한 정상화, 신중한 청산”을 모토로 하여 내걸었다. 이에 반해 과거의 정부는 신탁법에 의거한 정상화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였다.

1995년에 신탁청에서 개칭된 「통일관련 특수업무청(BvS)」은 신탁정책 실수의 결과로 계약관리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추가적 재정지원, 재사유화 등의 추가협상에 관한 업무들이 이에 속한다. 계약관리 업무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약속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의 계약의무 이행과 통일관련 특수업무청을 통한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관리는 지역정책과 구조정책의 문제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특수업무청은 자신에게 위탁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을 위하여 유럽연합이 새로 도입하는 정책노선이 연방과 주정부가 지원책을 추진하는데 점차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정부는 생산성과 구조적 측면에 있어 앞으로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져있는 구 신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약의 틀내에서 최대한 활동할 것이다.

1.3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것들

수많은 과오를 지닌 경제재건 정책은 산업생산의 대량과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연구부문의 위축을 가져왔다. 지금까지도 신연방주의 경제는 독립적인 대기업의 두드러진 부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구조, 지역적 특징 그리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결이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도의 경제적 구조변혁은 오늘날까지 역사적 선례가 없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한 경제성장 지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10% 미만이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건축경기의 확대에 유지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비율은 급락하여 1997년에는 1.7%, 1998년에는 2%로, 심지어 서독의 성장비율보다 낮기도 하였다. 1999년 동독지역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2%미만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독의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잘해야 근

소하게 앞설 것이다.

결국 4년전부터 신연방주의 전체 경제의 회복과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7년과 1998년에는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오히려 다시 벌어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아직도 동독은 서독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결함, 즉 공개되거나 감춰진 실업은 모든 직업활동인구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전체 경제의 관찰측면에서 부분적으로는 매우 동적인 발전과 성장과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의 성장률이 평균 10%에 이르고 있다. 수출부문의 성장도 두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아직도 너무 적은 숫자의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동독의 회사가 독일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전체 잉여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은 단지 7%에 머무르고 있다.

1998년 독일의 전체 수출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6%이며, 서베를린을 제외하면 단지 3.8%뿐이다. 또한 많은 신생기업들이 아직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였으며, 시장에서 오랫동안 안정화된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몇 배 힘들고 대부분 초기에 거쳐야만 하는 손실단계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다는 사실 또한 덧붙여진다. 이러한 비교적 허약하고 불안정적인 산업기반은 건축경기 구조조정 위기로부터의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성장시 아주 미미하게 혹은 노동시장에서는 아예 보충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유사한 진전이 동독기업의 생산성 부문에서도 눈에 띈다. 비록 그 사이에 서독기업을 따라 잡거나 또는 앞서는 동독기업이 있을지라도 그 숫자는 대단히 적다. 생산시설이 광범위하게 현대화되어 있을지라도 동독기업은 제조업분야에 있어 평균적으로 서독기업 생산성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지난 3년간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발전도 없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신연방주 근로자의 능력과 준비자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교적 낮은 동독경제의 자본총량, 시장개척에 요구되는 동독기업의 낮은 가격전략, 서독의 경제구조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능력있는 하청기업과 서비스기업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연계 부족 등이 주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에 의한 경제성장과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너무 적으며 서독에서와 같이 대기업에 의해 뒷받침되는 연구인프라 구조의 결핍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연구시설과 창조적 기업의 연결망도 너무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성 있는 지방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는 전자산업, 자동차 조립산업, 화학산업 등을 들 수 있다.

2.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동인

동독경제의 발전은 90년대 말 여러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와 재건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발전은 아직 계속해서 광범위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점점 더 견고해진 높은 실업률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과의 전쟁은 신연방주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성공할 때에만, 많은 주민들 사이에 지금까지 퍼진 광범위한 불만족과 실망의 중요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의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건전하고 적합한 경제구조에 도달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종합적 구상을 발전시켜 왔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발전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동시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에 정책변화가 신속히 필요한 부문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전체 독일의 구조개혁 정책을 위해 중요한 계기를 확보할 “미래계획 2000” 또한 동독의 재건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것은 신연방주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지원을 위한 재정경제적 기반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투자진흥계획, 경제의 창의성과 연구의 증대를 위해 연방정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초지역적인 판매의 증대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내용이 충실한 대화전략이라는 중요하고 새로운 요소를 위해 신연방주 정부 사이의 각료모임이 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전체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된다. 각 주정부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사업들이 협의되고 있다. 회의는 드레스덴에서 1998년 12월 16일, 슈베린에서 1999년 2월 17일, 에어푸르트에서 4월 13일, 포츠담에서 6월 2일, 막테부르크에서 9월 28일 개최되었다. 금년 말에는 베를린에서 개최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연방주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라인강으로부터 슈프레강으로의 연방정부 정치기구들의 이전(본으로부터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말함)도 이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다음해에는 동독지역의 모습과 동독 주민의 자화상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신연방주를 지원하고 나아가 신연방주의 장점과 강점을 지금까지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할 것이다. 모든 사회집단은, 그것이 정치적이거나 노동조합적이거나 기업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개인적일지라도, 동독지역이 현대화된 생활공간과 경제공간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2.1 잘못된 발전의 수정

우선 과거의 연방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연립정부 성립이래 새로운 정부는 일련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구부채지원법」의 지도

위원회가 제안한 구부채지원법의 완화를 통해 많은 동독의 주택건설회사에게 미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전망을 심어 주었다. 1999년 9월말까지 전체 약 960개의 기업은 자신의 사유화의무를 달성하거나 불이행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하였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경감된 부채의 일부를 지불해야만 하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난 연말 유럽연합에 의해 구법령이 정지된 이후, 「토지취득프로그램」과 「능력균등화법」의 수정을 통해서 동독의 농장경영자에 의한 농장구입시 평등한 권한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투자우선규정의 연장이 2000년말까지 확실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분명한 소유권의 문제가 더 이상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의 정부 아래에서 「통일관련 특수업무청」이 예정보다 빠른 해체를 위해 추진한 전략을 중지시키고 이전의 신탁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뢰있게 계속 추진하는 결정은 높은 연쇄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곤경에 처한 기업들이 특수업무청의 재정적 지원의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연방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연대협약을 위한 정치적 협상을 분명히 확정지어 명백히 하였다. 연대협약은 신연방주의 재정지원자금을 위한 재정의 중추로 남아있게 되었다. 연방과 각 주는 이번 입법부의 임기 중에 2004년 이후를 위한 후속규정을 준비하기로 타협하였다.

2.2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새로운 연방정부의 중요한 임무와 목표는 동독지역의 극히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순수한 물질적 생계목적은 넘어서서 개인적 존중과 자기결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상적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연방주 경제의 지속적 강화문제가 전면에서 나서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미래계획 2000」의 틀안에서 경제정책적 개혁조치와 신연방주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과 함께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14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소위 감춰진 실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고용상태를 가까운 장래에 개선시키기 위한 경제발전은 제조업분야에서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은 어떤 관측자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연방정부는 지난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단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정책은 노동, 교육, 경쟁력이 결합되어 일치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신 일자리를 통한 재정자립이라는 기본명제가 성립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통합을 지원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채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 바로 계속적이고 믿을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추진된 번덕스러운 정책(Stop and Go Politik)을 종결시켰다.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후퇴시킨 후, 1998년에는 고강도 정책으로 실업의 감소를 두드러지게 성취하였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1999년에는 가능한 신규취업 감소와 실업률의 통계상 증대로 인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새로운 연방정부에 의해 16%에 이르는 노동시장정책의 막대한 자금 증대가 없었다면 1999년 신규취업의 감소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에서의 일자리 지원에 있어 상당한 붕괴 및 이루어 놓은 구조조정조차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어려운 시작조건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택된 노동시장정책은 현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평균적으로 수혜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1998년보다 노동시장의 부정적 요인을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노동시장정책의 개혁과 효율성 제고로부터 형성된 이러한 노선은 재정의 건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2.3 직업훈련 일자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노력

청소년 실업과 직업훈련 일자리 부족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연방정부의 중심이 되는 관심사이다. 점차 악화되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연방정부는 구체적 조치 및 노동계와 경제계의 제휴 속에서 개선책을 제안함으로써 명백한 정책노선 변경을 실행하였다.

연방정부는 금년 초에 20억 마르크가 소요되는 청소년 실업과 직업훈련 일자리 부족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프로그램을 가결하였다. 이 프로그램 자금의 40%는 신연방주에 쓰여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커다란 지지를 얻어 왔으며 1999년 중반까지 신연방주 6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성공적인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지역의 견습공 일자리 창출도 주정부와 함께 계속 추진할 것이다. 17,000명의 청소년을 위한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 일자리도 추가로 만들어 낼 것이다.

작년 신연방주에서는 기업내부의 직업훈련 일자리에 대한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견습공의 부족현상이 증가하였다. 경제구조의 저변에까지 미친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는 수요에 상응하는 견습공 일자리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 새로이 체결되는 기업 직업훈련계약의 70%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훈련분야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직업훈련교육에 경제계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노동,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연대를 대표하는 파트너에게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요구했다. 공동으로 합의한 직업훈련협약은 모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이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훈련 일자리를 주선할 수 없었던 지원자에게 가능한 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원하는 직업의 훈련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4 동독재건을 위한 정책에 대한 신뢰

현재까지의 사실과 분석은 동독경제가 자신의 능력에 의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한다.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작년에 작성한 1998/99 연례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신연방주의 재건은 비교적 장기적 전망에서 구연방주로부터의 재정이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동독지역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에 의한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구연방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동독지역의 재건은 또한 사회연대성을 띤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과제는 연방과 주의 재정건전화 요구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특별한 도전이 된다. 연방정부에 의해 「미래계획 2000」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전략은 동독지역 재건에 도움이 된다. 우선 사회보장과 세금체제의 구조개혁, 그리고 재정건전화라는 전체적 구상은 향후 경제성장의 여지를 개선해 주며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국가의 재정능력의 회복은 중기적으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틀을 확보해줄 수 있다. 2000년도 연방재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결정은 재정건전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배정된 자금이 1998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2.5 미래영역의 규정과 전망의 진전

현재의 현상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동독지역의 재건은 몇 년만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 세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신연방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이 변화없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변화와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일상적 과제에

속하고 있다. 신연방주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확정지어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신연방주는 일련의 특별한 강점과 장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결점을 제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연방주의 강점과 장점을 지금까지보다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광범위한 부문에서 현대화된 인프라, 가장 현대화된 통신시설과 특히 광범위한 국가적 지원제도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동기부여를 제공해준다. 더욱이 근접한 곳, 즉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 새로운 판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점차적으로 독일경제의 강력한 성장동인이 되는 수출시장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성장의 가능성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 가능성이 신연방주에게는 의심의 여지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6 직업, 직업훈련 그리고 경쟁력을 위한 연합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새로운 자극과 추진력은 내년에 신연방주의 발전이 가야만 하고 가고자 하는 전망과 표상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인 공동의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1998년 12월 선거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직업,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연합」에는 의장으로서 연방수상 및 노동계와 경제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높은 실업률의 극복, 직업훈련의 개선,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연방정부는 전체 독일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정책의 속행과 효율성 제고 외에도 법정화되어 있는 수당의 계속적 인하, 기업활동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세제개혁,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정책, 기업의 성장과 설립에 방해가 되는 구조적 장애의 제거,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경쟁력 개선 등이 속한다.

신연방주의 업무 관련 대리 의장인 수상실 장관 볼프 쉬바니츠의 지도 아래 「직업,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연합」의 작업팀은 신연방주의 특별한 문제를 다룬다. 신연방주 정부 역시 이 작업팀에 협력하고 있다. 임무는 혁신적 문제해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결 방안을 공동으로 의논해서 만드는 것이다. 금년 업무의 중점은 특히 직업훈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창의성 개발, 동독기업의 초지역적 판매의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다.

동독경제의 이노베이션 능력의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는 기업의 연구와 발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구연방주와 비교하여 발전의 지체현상이 신연방주에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수준에서의 이노베이션 능력 강화는 동독경제의 경쟁력 획득과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래서 일련의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동작업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이제 자신을 현대화하고 생동력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수도 이전에 따른 정치기관의 이전도 이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다가오는 해에 동독주민들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동독지역의 모습을 점차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도록 신연방주를 지원하며 특히 신연방주의 장점과 강점을 지금까지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할 것이다. 모든 사회집단들이 동독지역을 현대화되고 생동력 있는 생활 및 경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1999년 연방재정에 나타난 동독지역 재건의 안정

연방정부의 공적 부문에의 급부는 분명한 우선권 부여를 통해 동독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동화과정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1999년도 연방재정으로부터 연방정부의 급부는 1998년의 수준보다 훨씬 많다. 다섯 가지의 중점부문에서 재정자금이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다.

<이노베이션, 연구,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이노베이션, 연구, 발전	2,900	3,200

경제, 사회, 정치의 이노베이션 능력은 중요한 지표이며 미래를 위한 산업투자시 신연방주에 매력을 부여하는 경쟁력의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의 정책 목표방향은 동독기업의 이노베이션 능력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으나, 동독지역에 연구능력과 발전능력을 재건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에 경제정책의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정된 재정자금이 계획된 프로그램의 착수를 위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빠듯한 연구자금으로 사적 부문에서의 연구를 최대한 자극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진흥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경제진흥	2,800	2,600

지방에 대한 경제지원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다. 공동의 과제인 “지방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연방의 지원 부분은 작년 회계연도의 부담에 비해 약화되었다.

내년에 신연방주에는 「아젠다 2000」에서의 결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매년 3억 마르크가 제공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 조성	18,400	19,700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교통인프라의 재건과 현대화는 우선권이 있다. 약 200억 마르크에 달하는 교통인프라를 위한 자금이 동독지역의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되었다.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는 우선권이 부여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30억 마르크를 공급받는 총 61억 마르크 규모의 연방정부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은 가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경제구조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년의 동독지역 교통인프라 재건은 강화될 것이다.

도시건설진흥은 1999년 역시 연방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지원되었다. 내년에는 5억 2천만 마르크의 신규 투자약속액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신연방주의 주거개량을 위한 투자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러므로 「주거현대화프로그램」의 신용기금의 존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신용기금액은 1999년에 90억 마르크가 추가되어 790억 마르크로 증액되었다. 신연방주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주거건축에 대한 산업적이고 사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1999년의 투자법과 함께 주거개량과 현대화가 한 단계 발전되었다.

2000년부터는 새로운 「주거현대화 프로그램II」의 신용기금이 제공될 것이다. 총 100억 마르크의 대부금에 의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대화와 수리조치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자할인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원>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9,900	13,700

* 연방노동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포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선거기간에 없어진 연방노동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1999년에는 110억 마르크로 결정되었다. 연방노동청의 예산 중에서 단지 신연방주에만 예정된 부분이 5억 7천만 마르크가 늘어나 136억 마르크로 증대되었다. 전체 자금 중의 50%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구조조정조치(SAM)를 위한 연방노동청 예산(35억 마르크)중 32억 6천만 마르크가 동독지역을 위해 지출될 예정이다.(93% 이상) 그것은 1998년보다 7억 6천만 마르크(30%)가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연방재정의 구조조정 조치 지원자금 18억 마르크(20억 마르크의 90%)가 신연방주에서 지출되었으며 그것은 전년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1998년 상반기 특히 높았던 수요로 인해 구조조정조치를 위한 기금이 연간 8억 마르크 증대되었다.

연방재정에서 고용창출조치(ABM)에 대한 보조금의 2/3인 약 4억 마르크가 신연방주로 배정되었다. 매년 7억 5천만 마르크의 기금이 조성되며, 2002년까지 연장된 「장기실업대책」은 동독지역 실업문제 해결에 2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문제 해결은 연방정부의 중심이 되는 관심사의 하나이다. 그래서 청소년 실업의 해결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에 의해 내년에 20억 마르크가 투입될 것이고, 40%는 신연방주에 투입될 것이다.

동독지역의 견습생 일자리 확보 조치는 보완되어 계속될 것이다. 17,500명의 청소년을 위한 직장 외부의 직업훈련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신탁청의 후속기관과 동독의 부채		1,500	1,600

「통일관련 특수업무청(BvS)」의 예산에서 적극적 계약관리에 대한 지출이 4억 6천만 마르크가 늘어나 16억 5천만 마르크로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과 수익성 있는 신탁기업이 특수업무청의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특수업무청의 예산은 약 10억 마르크가 늘어나 42억 마르크로 증가되었다. 남아있는 신탁청 후속기업을 위해 연방재정으로부터 11억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4. 동독지역 재건에 있어서의 전략적 접근분야

신연방주의 계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는 위에서 언급한 목표와 기본원칙을 지향하는 연방정부의 전체적 경제정책 구상이다. 미래의 경제구조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조건의 개선이 중심이 되는 사안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포함한다.

- 한편으로는 연방정부가 「미래계획 2000의」 틀에서 결정한 것처럼 전체 독일의 경제조건의 개선 및 고용지향적 틀의 형성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제개혁으로부터 특히 신연방주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기업의 유보이윤에 대한 25%의 세율인하, 임금외 비용의 감소, 공공재정의 건전화에 이에 속한다.
- 이미 의결된 1999/2000/2001년 「조세경감법」에 의해 신연방주는 서독 지역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에 대한 세금상의 이윤확정이 경제 업적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세원칙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 신연방주에서 비균형적이거나 대표되지 않는 분야(원자력, 보험, 은행)는 할당이 확대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 저소득자를 목표로 하는 소득세율의 개혁과 아동보조금의 인상은 이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다.

국가재정의 건실과 이를 통해 도달가능한 재정정책의 조정영역 확대는 내년에 동독지역에 대한 재건지원의 계속을 위해 필요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

-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연방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결점의 해체에 관한 것이다. 동독경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특별한 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 경제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특히 인프라의 확대, 자기자본 취약부문의 정리 또는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 경쟁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 예를 들면 마케팅 또는 연구, 개발분야가 이의 대상에 속한다.
- 비용과 임금외 비용에 대한 경감, 즉 동독과 서독지역의 전기료의 균등화 또는 신연방주에서의 높은 실업률에 근거한 보건의료에서 임금외 비용의 급등을 막기 위한 법정의료보험에 있어서 위험발생구조의 균등화의 지속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지원프로그램의 신뢰있는 지속과 개선이 중요한 전제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와 목표정확성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이것은 유사지원프로그램 또는 불분명한 지원목표의 제거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임무의 부여, 예를 들면 지역적 개발특색의 강화와 연결망의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유효하다. 주정부와 지방과의 긴밀한 합동작업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높은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속과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직업훈

런자리의 창출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또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직장이 없는 많은 노동자를 위한 책임있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다.

4.1 효율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향한 지원정책

수년에 걸쳐서 신연방주 경제발전의 추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구분된 지원정책수단이 생겨났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지원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올바른 목표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프로그램 사이의 서로 모순되는 지원목표는 앞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지원정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정부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연방정부와 함께 좀더 낫은 상태의 투명성과 간소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수단의 중심은 앞으로 투자지원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산업기반의 강화와 생산지향적인 서비스산업의 지원이 핵심이 된다. 연방정부의 견해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하다.

- 신연방주를 위한 지원책의 우선권이 내년 연방정부의 계획안에 유지되어야 한다.
- 지역적 경제정책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 임무의 틀 안에서 동독지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과 1999년부터 시작되는 선택적 임금보조금지원이 강력한 지원책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에 강력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젠다 2000」에서의 결정에 근거하여 내년 신연방주에 50억 마르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기금이 제공되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매년 7억 마르크가 더 제공된다.

- 신연방주에서의 투자지원의 핵심, 즉 「투자추가지원법」을 새로운 토대위에 제정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조정을 통해 지원정책의 효과는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앞으로 초기투자자와 대체투자자는 구별된다. 초기투자자는 기업의 설립과 확장 또는 생산물이나 생산과정의 기본적 변화와 관련된 투자를 말한다. 신연방주 국민경제의 자본스톡을 확대하거나 현대화하는 이런 종류의 투자는 특히 지원할 가치가 있으며, 2000년부터는 25% 상승된 투자보조금이 지원될 것이다. 기본적 보조금이 10%에서 12.5%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20%에서 25%로 증대될 것이다. 대체투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2000년부터 기본적 지원은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미 1999년 1월 1일부터 투자지원금에서 15%에 이르는 지원요율을 지원받는 주택건설투자자가 포함되었다. 건축영역에서의 특별공제는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하면서도 목표지향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연방주의 경제개발에 있어 특별한 결점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적 발전의 중점은 경쟁력과 관리능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결 즉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신연방주와 함께 새로운 구상을 만들 준비를 갖추고 있다.

4.2 경쟁력 장애요인의 제거

신연방주에서의 경제발전은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계속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연방정부는 다음에 기술되는 영역에 특별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 특히 수공업분야에서 가중되고 있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지급결제여건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주정부와 공동으로 효율적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 금년에 적절한 법적 규정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 신연방주 보건제도의 높아진 임금외 비용에 의한 동독 소재 기업의 특별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조달에 있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사이의 위험발생구조의 균등화 유지를 결정하였다.
- 주정부와 공동으로 연방정부는 전기료를 서독 평균수준과 같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전기공급업체 스스로가 소비자와 경제를 위해 경쟁력있는 전기료 수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된다.
- 수도료와 하수료의 가격인하 또한 필요하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4.3 이노베이션지원 :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중요한 중점과제

독일내 모든 기업의 연구비 지출 중 단지 5%만이 신연방주에서 지출되고 있다. 동독경제의 빈약한 연구경향은 우선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중간규모 이상의 기업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대학과 대학외의 공적 연구인프라는 잘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경제계와의 연계가 결핍되어 있다. 이노베이션 능력과 미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확실한 고용창출을 위한 결정적 전제조건이다.

창의적 기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특히 제품화 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연방주는 발전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높은 생산성, 그리고 증대된 수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연방정부는 특별히 신연방주를 위해 이노베이션 지원영역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취하였다.

- 새로운 프로그램 「창의적 지역(InnoRegio)」의 계획, 즉 그것은 연구기관, 견습시설, 창의적 기업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역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적 발전 패턴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총 25개의 지역적 창의성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이를 위해 총 5억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 신연방주가 우대되는 전체독일 차원에서의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2억 5천만 마르크의 자금으로 이제 막 시작된 「친 창의성 계획(Pro Inno)」 중에 약 40%가 신연방주로 투입된다.

 - 「창의성 연결(Inno Net)」 프로그램은 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비용보조금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지원과 같이 특별히 신연방주를 위해 유효성이 증명된 지원프로그램은 계속되며, 지원조건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4.4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동독경제는 중소기업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320만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53만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들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기업내 직업훈련 일자리의 거의 80%가 중소기업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업, 무역,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과 서비스업과 연구지향적인 창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은 고용과 직업훈련 일자리에 대한 계속적 발전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히 중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 기업설립시 자기자본금의 개선(특히 유럽부흥계획의 지원프로그램의 무기한 지속을 통한 방법, 독일청산은행의 새로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창업시 100,000 마르크에 달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개선된 재정지원방식)
- 유럽부흥계획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자본참가 변수의 도입을 통한 창의적기업의 자기자본금 개선
- 일시적 유동성 악화상태에 있는 성장 기업과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건설화기금과 성장기금(새롭게 만들어진 독일청산은행의 자본참가기금)
- 재건신용청(KfW)과 독일청산은행을 통해 벤처성 자본을 가진 기업의 자본금 지원을 위한 동독지역의 자본참가기금 유지
- 효율적인 법적 규정을 통한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 기업설립 과정의 관료적 장벽의 제거, 간소화된 허가과정의 도입, 독일청산은행과 주정부에 의한 공동의 지원프로그램 도입

4.5 인프라와 주거환경의 계속적 개선

인프라, 특히 교통, 통신, 주택과 도시건축이 경제적 역량과 생활조건 개선의 발전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 통일 이후 상당한 투자재원이 인프라의 개축, 잘못된 도시건축의 해체, 주거환경의 개선에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제공간의 개발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사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건축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의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통부문의 인프라》

-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될 것이다.
- 30억 마르크를 유럽연합의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공급받는 전체 61억 마르크의 투자액이 소요되는 연방 특별계획인 「교통인프라」와 함께 지원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의 완공이 가속화될 것이다.
- 「투자지원법」에 의한 지역간 간선도로의 개발은 매년 66억 마르크씩 2004년까지 계속 지원될 것이다.

이전 연방정부에 의해 수립된 연방교통계획은 재정공급이 완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연방정부는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처음으로 연방정부는 세가지 영역, 즉 철도, 연방간선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1999-2002년 사이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방교통계획의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계획의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투자프로그램은 필요하다. 신연방주의 인프라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주택과 도시건설 부문》

- 주택 증·개축 등은 단독주택지원보조금과 사회주택건설자금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강력히 지원될 것이다.
- 신연방주에서의 주거의 현대화와 개축,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취해질 것이다.
- 아직 운용중인 재건신용청(KfW)의 주거현대화계획은 90억 마르크로 증액되었고, 2000년부터 새로 도입될 새로운 재건신용청의 「프로그램 II」는 신용기금의 총액이 100억 마르크에 달하게 된다. 이 기금은 특히 심하게 훼손된 주거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 중점과제로서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균등화

- 도시건설지원도 감소되지 않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최초로 제시되는 프로그램 「사회적 도시(Die soziale Stadt)」를 통해 보완될 것이다.
- 전체 독일에 적용되는 주택수당개정법이 시행될 것이다.

제3장 경제와 고용 강화, 환경보호

1. 신연방주의 경제적 재건과 고용창출의 목적과 원칙

경제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경제정책 전문가위원회는 핵심적인 경제 과제를 “신연방주의 경제적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이 완전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방정부는 이의없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선된 경제 조건을 통해 동독지역의 계속적 재건을 위한 명백하고 신뢰있는 전망을 부여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것이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목적이다.

1.1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것들

아직도 남아 있는 결점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높은 실업률은 낮은 성장률로 말미암아 구조화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지난 3년간 전체 경제적 차원에서 멈춰버렸고,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경제적 업적에 있어 격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독경제는 아직도 비정상적인 건설경기의 과열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 산업과 서비스부문은 이에 비해 아직도 충분히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덧붙여 너무 적은 대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분야에서 동독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독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분야의 종사자들은 중소기업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어,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는 서독에 비하면 대단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성에서 동독기업은 서독기업에 비해 훨씬 뒤쳐지고 있다. 동독기업에 의한 산출량은 지난해에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안정

되지 못하고 있다. 동독기업의 광역적인 마케팅 능력이 서독기업에 비해 미약한 것은 여전하다. 제품의 질 보다도 마케팅 능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마케팅에 관한 한 아직도 많은 기업이 취약하다.

동독지역에서는 여전히 인프라 부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인프라는 아직도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인프라 부족은 교통분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간 연결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의 도로와 철도에 많은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동독지역의 연구개발도 계속 강화되어야만 하고, 사적 연구와 공적 부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노베이션 연결망이 조직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

1.2 주목할 만한 진전

신연방주에서 성취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전체적 성과는 불완전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경제적 혁신은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재건이다. 현재까지 32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약 55만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의 상당수는 현대적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미 경쟁력측면에서 앞서있다. 통신시설은 그 사이에 현대화되었다. 교통인프라, 주택건설과 도시건설, 그리고 환경파괴의 복구에 있어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연구개발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도 이제 더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젊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점점 더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이래 연구종사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1.3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재건을 향한 긴 여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진로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경제구조와 고용창출에의 전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러한 발전이 동독지역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하다. 이러한 여정에서 국가적 지원은 방기될 수 없다.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창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1999년 6월 23일 연방정부에 의해 의결된 포괄적인 「재정 건설화 및 세계개혁안」은 이를 위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업,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 또한 신연방주에게는 의미있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노동조합은 동맹의 틀 안에서 실업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맹의 틀 안에서 수상실 장관 쉬반니츠를 의장으로 하는 「동독 재건(Aufbau Ost)」이라는 작업팀은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점과제를 결정하였다. 동독경제의 이노베이션과 경쟁력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결제방법의 문제점 개선, 동독지역의 제품 및 서비스의 동독지역을 넘어서는 전지역 판매지원 같은 것이 다루어졌다.

1.4 향후 경제정책의 원칙

동독지역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우선이 보장되고 높은 목표지향과 효율성에 대한 재건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 산업기반은 강화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인프라의 확장이 특히 중요하다.
- 특히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 능력과 자기자본 비율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 동독지역 연구여건의 개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1.5 연방정부에 의해 설정된 주요 진로

《산업기반의 강화》

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지원은 내년에도 중점과제가 될 것이다. 점차 생산에 기반을 둔 서비스산업과 지식과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지원되고 있다. 투자지원의 중심적 조치는 공동의 과제로서 “지역적 경제구조의 개선”에 있다. 여기에 2004년까지 세제지원으로서 투자지원이 추가되고 있다. 투자지원은 공업, 수공업, 도시간 소매거래 그리고 생산지향적 서비스부문에 있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지원되고 있다. 투자보조 비율이 2000년 1월 1일부터 초기투자에 대해서는 12.5%로, 제조업 분야와 생산지향적인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로 증가된다.

《초지역적인 판매의 강화》

동독 제품과 서비스 판매의 안정적 증가는 기업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된다. 많은 동독기업 특히 신생기업들은 이제야 비로소 초지역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의 진입은 점차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국내시장에서의 초지역적인 판매와 국제시장의 진입을 위한 Know-how와 자금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연방정부는 「직업, 직업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의 틀 안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와 연합회의 조언, 박람회 참여지원, 수출지향적인 신연방주 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외 접촉점 구축 등이다. 2000년 초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경험과 성과가 보고될 것이다.

《연구와 이노베이션의 강화》

연방정부는 1999년의 예산에서 교육과 연구에 대한 향후 투자액을 거의 10억 마르크 가량 증대시켰다. 이로써 명백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교육과 연구분야가 독일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미래계획 2000」에서는 교육과 연구분야의 향후 투자가 매년 증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10억 마르크가 증가된다. 그리고 2003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연방내각의 결정으로 이 계획은 집행된다. 경제부와 재무부의 개별적 계획에서 공급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동독의 몫이 되었다. 신연방주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해 이미 효용성이 입증된 특별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다. 여기에 지역적 연결에 있어 창의적 발전을 강화할 완전히 새로운 지원모델(Inno Regio)이 생겨났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 사이의 협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친 창의성계획(Pro Inno)」이 시작되었다.

《과거 신탁기업의 지원》

정상화 능력과 정상화 가치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특수업무청(BvS)」에 필요한 재정협상과 결정영역을 허락해주었다.

《중소기업의 강화》

투자자본과 기업자본의 충분한 공급은 중소기업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독일청산은행(DtA)과 재건신용청(KfW)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동독의 자본참여기금과 건설화기금의 중기적인 지속은 연방 주요 대출기관의 자기자본금의 증액을 통해 보증하고 있다.

1.6 지원수단의 효율성 제고

제14대 연방하원 임기 동안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안에 따라 연방경제기술부는 연구개발, 판매지원, 「재건신용청」과 「독일연방은행」의 재정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신연방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연방지원은행과 주정부 관련기관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원프로그램의 개선 가능성이 모색되었는 바, 이는 지원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각

중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1999년 11월 1일부터 「독일청산은행」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투자은행」은 주요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공통신청양식을 도입하였다.

2. 산업기반의 강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지원, 통일관련 특수업무청

2.1 산업기반의 강화

신연방주에서의 산업기반의 강화는 한 단계 진척되었다. 동서독 사이의 경제구조 적응과정에서 제조업분야가 득세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동독지역 순가치생산의 1/3을 담당하게 되었다. 산업분야의 고용인력은 약 200만명으로 안정되고 있다. 서독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동독기업의 성공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쟁력 증대에 대한 긍정적 증거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연방주 산업 발전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지속되는 구조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독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장주도적 그룹에 속하는데 성공한 일련의 동독기업들이 생겨났다. 몇몇 분야에 의해 동독지역 산업의 재건을 위한 특별하고 명백한 동인이 발생하고 있다.

약 70억 마르크의 투자를 통해 독일 자동차 생산 및 공급업체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기업에 속하는 자동차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신연방주의 자동차산업은 약 55,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로써 자동차산업은 신연방주에 대한 최초의 투자산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민간투자 분야이기도 하다.

전자산업의 영역에서 경쟁력의 중심은 드레스덴이다. 기존 기업의 구조전환과 새로운 투자자의 유치를 통해 전자산업기반에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에서 신연방주를 넘어서는 이노베이션에의 동인을 제공하는 수천개의 신생기업과 역동적 기업이 설립되었다. 최초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원조치가 이러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동독지역의 화학산업에는 지금까지 인프라와 환경과괴의 개선 및 생산설비에 약 20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그 사이에 분명한 성과를 가져왔다. 1994년 이래로 생산은 매년 증가했다. 1997년 이래 생산은 다시 1991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고, 고용인력 또한 안정화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조선산업이 중추산업이 되고 있다. 사유화와 구조전환 이후 경제영역에서의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생산성 및 생산비용 수준에서 동독의 조선산업이 유럽에서 최고로 높게 나타났다.

섬유와 의류산업 역시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인 「자립을 위한 지원(Hilfe zur Selbsthilfe)」에 의해 신연방주의 생산과 고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1998년 320개의 기업과 22,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산업기반의 지속적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지역적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이다. 공동과제는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지원의 중심적 도구이다. 산업과 경제지향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원되고 있다. 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금의 최고 비율은 신연방주의 구조취약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50%까지이고 대기업은 35%에 이르렀다. 구조양호 지역에서의 지원금 최고 비율은 중소기업은 43%까지이고, 대기업은 28%이다. 이러한 지원의 틀안에서 산업경제의 영역에 1999년까지 약 440억 마르크의 투자자금이 승인되었고, 이를 통해 2,030억 마르크 이상의 투자가 유발되었다. 이러한 투자효과로 신연방주에서 전체 약 130만개의 안정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확보되었다.

연방/주 계획위원회는 1999년 3월에 2003년까지의 향후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독지역 전체가 투자지원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동독지역 재건의 공동과제」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동 결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가능성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금관련 투자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인적 자본의 강화와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일자리에 집중된다. 지역적 발전을 위한 주정부와 유럽기금의 자금을 합쳐서 금년 신연방주에 약 60억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동독경제에 능력 있는 산업기반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초지역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과제」는 1999년 이후에도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2.2 중소기업의 지원

위험자본의 획득여부는 기업설립자나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위험자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설립에 있어 위험자본 공급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점과제는 직업훈련센터와 기술이전센터의 건설과 시설외에도 기업과 기업설립에 대한 지도, 기업소유자와 근로자 그리고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

모든 지원조치의 중심적 사상은 「자립을 위한 지원」이다. 지원이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존립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기업을 시장에 정착시키고 능력과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가능성에 따라 증대시키는 일은 우선 기업가 자신의 과제라는 것이다.

2.3 창업과 기업의 정착, 자기자본

신연방주의 기업 설립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의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이율이 유리한 용자인 유럽부흥계획 특별자산의 지원자금은 이미 1990년 이래 신연방주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재건에 결정적기여를 하고 있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1999년 3월 말까지 437,60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763억 마르크의 유럽부흥계획의 대출과 자기자본지원이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20만건 이상의 창업을 지원하였고, 약 1,850억 마르크의 투자가 창출되었다.

현존하고 있는 기업의 안정적 시장확보와 확장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업의 창업이후 처음 몇 년간의 안정을 위한 투자는 유럽부흥계획의 자기자본지원과 창업대출을 통해 지원되었다. 그외에도 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모든 투자를 위해 「재건신용청」의 중소기업프로그램과 유럽부흥계획으로부터의 무기한 저리용자가 제공되었다.

향후 몇 년간에도 기업 창업과 안정화 분야에 대한 지원자금이 신연방주를 위해 제공될 것이다.

계속적 성장에 장애가 되며 자주 불만이 제기되는 기업의 자기자본 취약에 대처하기 위해 「동독지역 자본참여기금」이 계속 운용될 것이다. 개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에 의해 모여진 자금은 독일 청산은행과 재건신용청을 통해 중소기업의 책임자본 강화를 위해 투입될 것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자금이 인적자본(Humankapital)에 큰 역할을 하는 조치, 예를 들어 제품개발, 시장개척, 기업능력에 대한 조치와 같은 계획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소위 「유연투자(weichen Investitionen)」는 안정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프로그램에 의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투자는 유럽부흥계획의 이노베이션프로그램과 재건신용청과 독일청산은행의 자본참가프로그램

을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다.

「동독지역 자본참여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13억 마르크의 자본이 지원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5억 마르크의 세계혜택자금의 소진 이후 두 개 지원기관의 자기자본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기업 창업과 혁신적 기업의 위험자본 용자에 새로운 강조점을 두었다. 재건신용청에 의해 실행되는 유럽부흥기금의 이노베이션프로그램은 1999년 1월 1일까지 변형된 형태의 자본참가(은행의 대부 대신 완전한 책임 위험자본)에 의해 보완되었다. 중소기업의 설립자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5월 독일청산은행의 창업자금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은행(Hausbank)은 일괄하여 위험으로부터 80%까지 책임이 면제되고, 일회에 한하여 처리대금으로 1,000 마르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잘 시행되고 있다. 금년 6월에 시작된 독일청산은행의 자회사인 자본참여 유한회사(gbb Beteiligungs-AG)의 건설화기금과 성장기금으로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및 신연방주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은 자본참여자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금총액은 2억 5천만 마르크에 달하며, 위험자본출연자(신연방주의 지원은행, 은행, 개인)는 위험자본의 40%까지 제공가능한 형태로 참여해야만 한다.

최근의 조사는 이제 더 이상 자기자본 부족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개별적인 분야와 그러한 분야 내부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자기자본 비율보다 결정적인 것은 기업의 수익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만족할 만한 상황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2.4 통일관련 특수업무청

신탁관리청의 가장 중요한 후속기관은 「통일관련 특수업무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이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특수업무청이 잔여 임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 특수업무청의 업무능력은 조직·인사·재정적 시각에서 1999년을 거치면서 안정화되었다.
- 특수업무청은 계약관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조치들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실현가능성 있는 구상을 지닌 과거 신탁기업이 특수업무청의 부족한 재정참여로 인해 파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모든 기업에게 정상화 능력이 전제된다면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수업무청의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는 결과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야기하여 효율적인 임무완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정책

3.1 인프라의 확충

서독지역과의 연결과 유럽을 관통하는 연결 및 동독지역 내부의 인프라의 확충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체 독일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동독지역을 관통하는 교통로 확충의 주목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주 내부의 지역과 주요한 간선도로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신연방주 인프라의 확충이 정책순위에 있어 우선권을 향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년과 내년에 교통분야를 위한 모든 투자자금의 약 40%인 약 200억 마르크를 신연방주에서의 교통인프라 확충에 공급한다. 중심적 조치로서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는 이로 인해 중요성에 걸맞는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구조기금(2000년 - 2006년)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는 「목표 1 지역」을 위한 연방계획인 「교통 인프라구조」와 함께 초지역적인 교통 인프라구조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투자지원법의 틀 안에

서 주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프라조치를 위해 2004년까지 매년 66억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도 동독지역의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해 도입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교통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연방정부는 충분치 못한 조치로 재정공급에 대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명확한 계획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신연방주의 교통로 확충에 대한 현실적인 우선권과 시간적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경제인프라 개선」이라는 공동 과제의 틀 안에서 그것이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한, 투자보조금에 의한 경제발전지향적인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원금의 비율은 최대 투자비용의 80%에 이르고 있다. 산업용지의 개척, 방치되어 있는 산업용지의 재정비, 산업을 연결하는 교통을 묶어주는 교통연결망의 구축,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하수정화시설의 확충 또는 설치, 항공 등 국제운수회사에 의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직접적 의미를 지니는 국제교통연결망의 지원이 인프라조치의 지원영역에 속한다. 신연방주에서는 1998년까지 약 260억 마르크가 경제발전지향적인 인프라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약 390억 마르크에 이르는 투자가 유발되었다.

연방군대 또한 광범위한 투자조치와 신규건설조치를 통해 인프라 재건에 기여하였다. 내년에도 연방군은 신연방주의 인프라에 약 10억 마르크를 투자할 것이다. 투자는 경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투자계약은 주로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해 이루어진다.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이 구조취약 지역에서 실행되었다.

3.1.1 철 도

철도 연결망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건설하고 동서독지역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행해졌다. 이를 위해 1998년 말까지 약 35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현재까지 투자 실현액이 170억 마르크로 나타난 「독일통

일 교통프로젝트」만을 통해서도 교통연결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운행단축 시간이 50%에 도달하고 있다.

철도연결 요지인 베를린에서의 철로망 정상화와 확충을 위해 1992년의 연방 교통계획에서는 연방의 지출분으로 약 100억 마르크를 계획하였다. 1998년 말까지 이미 40억 마르크 이상이 투자되었다. 이로써 장거리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통도 이미 상당한 운행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철도연결 요지로서 베를린이 적절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때 베를린 중심에 교통시설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또다른 투자의 중점과제는 신호체계와 운영기술, 경사면차량, 교차역과 연결역의 구축, 도로교통과 철로 관련 시설의 건설 및 현존하는 선로의 정상화와 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3월부터 독일철도 유한회사외에 개인도 철도연결의 터미널에 대한 투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베를린 근교의 화물교통중심지인 부스터마르크를 들 수 있다.

3.1.2 횡단철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의 형태로 계획된 「프로젝트 함부르크-베를린」의 실현 문제는 1997년 4월 연방과 독일철도 그리고 기업 사이의 협상과제로 되어 있다. 이 협상에서는 프로젝트 파트너로부터 넘겨받은 보장과 위험 및 재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주행거리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제시된 비용계산은 횡단철도의 주행거리에 대해 견적으로 산출된 비용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공급의 공백을 민간 자본의 투입으로 상쇄하려는 집중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사와 협상이 종료되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에 대한 수익성 있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는지 알게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계획확정 단계에 있다. 20개의 계획확정항목 모두에 대하여 공공설명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다.

3.1.3 연방간선도로(국도)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신연방주의 연방간선도로에 대한 투자로 250억 마르크 이상이 지출되었다. 여기에 역시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지금까지 약 105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이미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에 의해 도로의 반이상이 완성되었거나 건설중이다. 120Km의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540Km의 6차선 도로확장을 마쳤으며, 450Km의 고속도로가 건설중이다. 또한 660Km의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다.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외에 1998년 말까지 연방고속도로 구간, 즉 A11 베를린-슈테틴, A12 베를린-프랑크푸르트(오더), A13 베를린-드레스덴, A19 베를린-로스톡 그리고 A24 베를린-함부르크의 고속도로가 확충되었고 이외에도 39곳의 우회도로 건설을 마쳤다.

2000년에는 중요한 고속도로망이 확충되거나 건설되어 개통될 것이다. 이 중에는 특히 새로 건설되는 A14 막테부르크-할레, A20 쾰른-로스톡 구간, 6차선으로 확장되는 A2 하노버-베를린, A4 아이제나흐-괴르리츠, A9 베를린-뉘른베르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3.1.4 연방수로

연방수로망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동독 내륙수로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현대화를 통해 내륙항로의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항구의 수송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바다항구인 오스트제의 로스톡, 비스마르, 볼가스트의 진입수로는 완성되었다. 또한 슈트랄준트의 확충도 시작되었다. 항해표지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여기에는 3억 6천만 마르크가 투자되고 있다.

내륙하천 부문의 확충과 대체투자에 현재까지 약 17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 17번으로서 하노버-막테부르크-베를린 사이의 수로연결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막테부르크까지의 독일 중부운하와 가장 긴 운하 다리를 가진 막테부르크의 수로교차로는 2003년까지 개통될 것이다. 베를린에서는 2002년까지 샤로텐부르크와 슈판다우의 수문이 완공될 것이다.

슈테틴과 오스트제에 이르는 북로로서 하벨-오더 수로의 부분적 구역은 현재까지 보완되었으며, 이를 통해 폴란드까지의 운행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내륙항구로 브란덴부르크, 에버스왈데 그리고 쉬베트가 생겨났으며,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전에 있다.

3.1.5 화물교통센터

교통수단인 철도, 도로, 수로 및 운하 사이의 연계를 발전시키며 화물 교통로를 통해 도시에 물품을 공급하여 시내교통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음과 공해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화물교통센터(GVZ)」의 설립은 중요한 진척이다. 로스톡, 라이프치히, 에어푸르트, 그라우하우, 막테부르크, 드레스덴 그리고 집결지 베를린에 화물교통센터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3.1.6 근거리 공공여객 교통

연방정부는 1991년 이래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연방주, 베를린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였다. 「기초자치단체교통재정지원법(GVFG)」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00억 마르크를 넘는 건설자금이 투입되었다.

GVFG 자금 전체 예산의 20%를 유보한 보충적인 연방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근거리 교통선로를 지원하였다. GVFG 연방프로그램은 도시간 및 도시내부 전동열차 선로의 확장과 개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개혁(1993년 말)의 틀 안에서 의결된 「지방화법」과 함께 연방정부는 매년 120억 마르크를 투입하여 근거리 공공여객 교통에 참여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몫(베를린을 포함하여)은 연간 약 40억 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베를린 교통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는 과거 동서독 국경으로부터 생긴 도시철도(S-Bahn)의 단절부분을 연결하는 것과 1961년까지 운행되었던 교통망을 적절한 교통수요에 맞추어 재개통하는 것이다. 긴급히 시행된 공백연결프로그램의 틀에 의해 지금까지 약 80Km의 선로가 다시 개통되었다.

이외에 성과가 있었던 프로젝트로는 라이프치히와 할레 및 드레스덴과 프리나의 도시철도, 드레스덴에서의 도시철도 확충, 라이프치히의 전람회 연결 도시철도, 할레, 에어푸르트, 로스톡에서의 교통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3.1.7 항공교통

항공교통은 신연방주에서 점점 더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4개의 거대 공항, 즉 베를린-쇠네펠트, 라이프치히/할레, 드레스덴, 에어푸르트에서 1998년 670만의 승객을 맞이하였다. 현대화와 확장공사가 끝나면 신연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 공항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터미널의 신축 및 증축, 이착륙장의 개선, 관제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의 새로운 이착륙장은 2000년도에 운행에 들어간다. 에어푸르트 공항은 1999년 3월부터 「단계 3」의 상황, 즉 기후조건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도 항공운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맡긴다는 결정은 상당한 범위까지 진척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 1999년 8월 위임결정('99.3)이 파기된 후, 위임절차를 속개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8 해로교통과 항만산업

해운기업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해로교통과 항만산업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중심이 되는 경제기반에 속한다. 동시에 중소항구는 유럽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분기점이 된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항구진입로의 개선, 항구 배후지역 연결망의 건설과 확충, 항구인프라 투자지원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과제 틀 안에서 지원자금이 16개 항만의 총 118개 항만프로젝트에 대해 7억 마르크가 승인되었고 이를 통해 약 10억 마르크의 간접투자를 유발하였다.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

- 카페리운행 관련 독일에서 가장 큰 환적장으로 발전되어, 1998년에 가동된 차량도선항 자스니츠에 있는 선착장
- 로스톡 항구에 있는 바르노프-카이스를 현대화된 카페리 터미널로의 개축

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경제성장의 결과로 해상화물의 물동량이 총 2천3백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카페리에 의한 여객수송이 매년 거의 3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장래에 대한 전망에서 연방정부는 다음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계획된 항만진입로와 항만 배후지역의 연계 완성(뤼겐 섬의 연결을 포함)
- 유럽횡단망(TEN)의 틀에서 교통인프라의 확충에 대한 유럽계획에 항만의 연결
- 도로수송에서 해로수송으로의 이전을 위한 집중적 노력

연방정부는 향후 더많은 국가의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고려하여,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의 해상교통과 항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2 에너지정책

신연방주의 에너지산업에서 광범위한 현대화가 일어났다. 통일 이후 500억 마르크가 이 부문에 투자되었다. 투자는 전력발전과 관련하여 현대화된 에너지공급의 발전원으로 갈탄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높은 비율의 원격 난방공급은 계속 확충되었고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높은 효율성을 지니는 발전-난방 연결과 새로워진 에너지가 특히 빠르게 발전되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기여는 새로 건설된 도시발전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력생산시설의 건설 및 발전과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현저한 개선이 이룩되었다. 단지 갈탄발전소의 재건과 신축을 통해서 배출가스가 1989년을 기준으로 먼지 99.6%, 유황 88.4%, NOx 73.6%가 감소되었다.

3.2.1 갈탄에 의한 발전의 확보

변화된 에너지 사용구조와 전체적 산업발전에 따라 감소된 에너지 수요로 인해 갈탄탄광지대는 새로운 적응과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래 연간 3억 톤의 갈탄채굴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제 6천5백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되어 100,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갈탄채굴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태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몫을 유지하고 갈탄의 경제적 장점 특히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부문에 대한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1994년에 라우지츠와 신연방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갈탄탄광의 사유화가 결정되었다. 사유화는 갈탄발전소와 함께 수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갈탄 채굴의 90% 이상이 전력에 사용된다.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와 환경기술

의 추가시설 문제가 결정되었다. 포괄적인 신축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었다. 1998년 여름 가동에 들어간 2×800MW의 펌프가 설치된 슈바르체 발전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갈탄발전소이다. 슈바르체 발전소는 40%의 효율에 도달하였다. 또 다른 새로운 발전소가 리펜도르프와 복스베르크에 있다.

신설 및 현대화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연방주는 약 10,000MW의 전력을 갈탄 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것은 구연방주의 갈탄발전소 발전용량에 해당한다. 신연방주의 발전소프로그램만도 200억 마르크의 투자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70%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와 갈탄광산기업에 도입된 합리화조치에 의해 동독지역의 갈탄을 이용한 발전은 자유화된 전력시장의 과도적 단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미 현재 전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상황은 신연방지역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독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의 차이는 서독지역에서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2.21Pf/kwh에서 1.22Pf/kwh로 접근하였다. 동독기업, 농업기업, 그리고 여타의 전력소비자를 위한 전기료 인하에 대한 동독지역 에너지공급기업의 추가적 조치로 신연방주의 경제적 상황은 계속 호전될 것이다.

3.2.2 전기료의 서독수준으로의 조절

전기료의 서독수준으로의 조절은 향후에도 연방정부의 목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공급기업은 동독지역의 경제장관회의에 설치된 작업팀 「동독지역의 에너지콘센서스」에서 1999년 4월 전기사용자를 위해 전기료를 서독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예고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 전기료 인하 문제가 전기공급업체에 의해 발표되었다. 연방정부는 가격조정이 단지 특별계약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가정 전반에 걸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촉진법의 개정

4.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신연방주에서 계속 높아가는 실업률에 직면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상당히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1998년 동독지역의 평균실업률은 서독지역의 9.4%보다 두배나 많은 18.2%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수는 1997년보다 11,400명이 늘어난 1,375,000명에 달하였다. 1999년 6월말 실업자 수는 1,33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1년 전보다 약 19,000명이 늘어난 것이었다. 실업률은 17.4%로 서독지역의 9.6%의 거의 두 배이다.

「직업, 직업훈련교육, 경쟁력을 위한 동맹」의 회원들은 노동시장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였다. 자금은 정확히 목표대상에 집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필요한 노동시장의 질적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는 향후의 전문인력 수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것이다.

1998년 평균적으로 전체 독일의 실업자의 수 32.1%가 거주하는 신연방주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지출은 50.9%에 달하였다. 금년 노동청의 예산과 연방의 예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453억 마르크가 준비되었다. 이 금액은 전년에 비해 63억 마르크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신연방주를 위한 몫은 228억 마르크로 약 50.4%이다. 1999년 독일에서 약 145만 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조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숫자는 1998년보다 20만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를 통해 1998년 가을부터 노동시장정책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연방정부는 굴곡이 심했던 노동시장정책을 마감하고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적 기초를 강화하였다.

신연방주에서 1999년 하반기 노동시장정책의 참여자 수가 1998년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났다. 1999년 8월 현재 이 정책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재교육 : 127,000명(지난달보다 6,600명이 적고 전년보다 26,700이 적음)
- 고용창출조치(ABM) : 150,900명(지난달보다 7,200명이 적고 전년보다 48,100명이 적음)
- 구조조정조치 : 177,100명(지난달보다 3,100명이 적고 전년보다 15,100명이 적음)

1999년 연평균 700,000명이 노동시장정책의 지원을 받았다. 동시에 좀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창출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노동시장정책은 다양한 임금보조금으로서 실업자들에게 고용의 정당한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1999년 7월 다음과 같은 수의 사람들이 정규적 노동시장에서 지원을 받았다.

- SAM OfW : 132,000명
- 편입보조금 : 27,100명
- 신설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 2,300명
- 장기실업프로그램 : 10,100명

이외에도 15,400명이 신설기업에 지원하는 임시보조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특히 경제적 회복과정의 재돌입을 위한 기회를 강화하였다.

연방정부는 직업재교육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실업에 대한 응급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제4장 1절 참고).

4.2 고용촉진법 개정

1999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사회법 제3편 개정법률과 함께, 고용촉진법을 효

을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령개정의 중점과제는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도구를 새로이 만들고 보완하는 것에 있다. 관련조치들의 목표근접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고령 실업자의 신속한 노동시장에의 재편입에 기여하고, 장기적 실업상태에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국내고용시장 정책을 장기적 실업을 방지하려는 데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노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각각의 정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수혜조건으로 장기실업이 요구되는 고령 실업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주에게 제공하는 「편입보조금」은 장기실업을 막기 위하여 6개월이면 지급가능하게 된다. 또한 「편입보조금」의 수혜연령도 노동사회부의 법령을 통해 1999년 8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5세에서 50세로 낮춰진다.
- 55세로 종료되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조치에 의한 지원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신연방주나 노동시장에 도입되면 근로자의 고용은 앞으로 5년(일반적으로 36개월)까지 지원된다. 제도의 도입전 6개월 동안의 고령근로자의 실업률은 구연방주 평균보다 30%나 높았다. 구조조정조치의 지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면, 고령근로자를 위한 정책의 지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진다.

5. 지방경제의 강화와 농업보호

정책의 특별한 관심사는 지방의 지원과 발전이다. 신연방주의 인구 과소지역은 대개 실업과 인구유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요 관심사는 동독지역의 농업과 지방을 위한 성장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젠다 2000」을 위한 베를린

에서의 연방과 주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구조지원은 신연방주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아젠다 2000」에서의 농업에 관한 결정은 동독지역 농업의 다양한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지방영역에서 계속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방수준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통합된 발전의 개념 안에서 유럽과 국가와 그리고 지역적 지원을 묶어내는 것이다.

특히 「공동의 과제」 틀 안에서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의 지원을 위한 연방의 자금이 제공되고 있다. 농업구조지원에는 생산물의 현장에서의 가공과 판매를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동독지역 농업기업구조를 고려하였다.

5.1 경제 발전

농업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구동독 5,100개의 협동조합과 국가경영의 대회사로부터 1998년까지 1헥타 이상을 소유한 약 32,000개의 회사가 생겨났다. 구조는 법의 형태, 회사 규모, 소유관계에 있어 이전의 연방지역의 형태로 부터 벗어났다. 총 560만 헥타 중 54% 이상의 경지가 법인의 소유 형태로 되어 있다. 경지면적(LF)의 약 23%는 개인기업과 조합회사의 형태로 되어있다. 평균적인 경지소유 규모는 1,013 헥타를 지닌 법인형태가 가장 높고 조합회사가 417 헥타, 그리고 개인회사가 49헥타로 되어있다.

개인기업의 71%가 부업, 29%가 주업인데, 주업으로 경영되는 회사의 평균 경지면적은 127헥타로 부업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15헥타보다 훨씬 크다. 전체 경지면적의 91%가 임대차계약에 속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력이 광범위하게 해고되었다. 1989년에 비농업부문의 부업회사를 포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 약 850,000명 중에서 1998년까지 약 705,000명이 해고되었다. 특히 통일 후 최초 몇 년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기준 신연방주의 농업회사에 약 145,000명이 고용되어 있었고 그중의 94,000명이 협동회사의 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2/3가 정상적 근무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농업 고용의 28%가 가족노동형태와 파트타임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주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개인기업은 구조조정의 장점으로 인하여 단위기업 및 1인당 수익에 있어 이전의 연방지역보다 높다. 이전의 연방지역과 비교하여 동물의 품종개량은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에서의 부분적이지만 현저한 수익상승은 주로 농업과 낙농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 졌다. 농업 수확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999년 연방정부 농업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5.2 과거 국영 농업 및 임업토지의 사유화 현황

농업 및 임업분야의 과거 국영 토지에 대한 사유화 작업은 연방의 토지매각 관리회사(BVVG)가 위임받았다. 토지의 95% 이상이 장기 임대차 계약으로 넘겨졌다. 동독 국영농장의 사유화도 계속 진척되고 있다. 사유화 실시 이래 토지매각관리회사는 173건을 시장에 내놓았고 지금까지(1999년 8월 31일 기준) 162건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였다. 토지매각관리회사는 1999년 8월 31일까지 「보상 및 배상법(EALG)」에 따라 약 15,500건을 시장에 내놓았다. 1998년 말까지 42,314헥타의 농경지와 약 184,567 헥타의 임야를 보상 및 배상법의 규에 따라 판매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999년 1월 20일의 결정을 통해서 특전이 부여되는 토지구입은 공동시장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보상 및 배상법의 규정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의 법적 검증과정을 마쳤다. 유럽연합은 토지구입의 참여를 위한 자격을 1990년 10월 3일 당시의 지역거주자로 한정된 것과 농경지 판매가격이 유럽연합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보조금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보상 및 배상법의 기본원칙, 즉 토지구입시 임대차 우선권을 포함하여

신연방주의 국영토지 사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연방정부는 1999년 9월 1일 보상 및 배상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을 통해 농경지의 통일적인 판매가격이 확정되었다.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구입자의 전제조건으로 1990년 10월 3일 현재의 동독거주자뿐만 아니라 농경지 구입시 1996년 10월 1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사람도 유효하게 하였다. 과거에 보조금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된 판매계약은 판매가격 추가청구가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법률안 승인에 따라 토지사유화 중지는 가능한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야기된 동독기업의 불안정성 제거를 위해 연방정부는 토지매각관리회사의 장기 용역계약을 기본적으로 12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연방정부는 특전을 부여하는 토지구입의 형태에서 현재의 농업구조 지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국영토지의 신속한 사유화는 적절한 소유지 확보를 통해 농업회사 및 임업회사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3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결합

토지와 건물소유의 결합문제에 있어 신속한 조치는 특히 지방에서도 필요하다.

동독시절에 행해진 토지와 건물소유의 분리에 대한 폐지는, 유산이나 판매의 방법을 통한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 및 투자를 위한 토지의 신용설정 등 경제적 이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규정은 법적인 구성요소 외에도 중대한 노동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장애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투자의 실행은 특히 해당 지역의 수공업회사와 건설회사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준다. 타인소유 토지에 있는 약 300,000채의 단독주택 및 약 70,000동의 동독시절 농업생산조합의 건물과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지방에서의 소유권 결

합문제 중 1/3만이 해결되거나 소송절차에 계류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법 64조에 따른 소유권 결합과정에 있어서 연방-주-조정그룹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4 구조조정 지원

유럽연합, 연방 그리고 주의 농업구조조정 지원은 독일통일 이후 성장능력을 가진 농업의 발전과 지방에서의 생활조건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원 조치는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GAK)」이라는 공동과제 계획과 지역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실천되었다. 1991년과 1999년 사이에 연방정부는 GAK를 위해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자금으로 약 83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와 유럽연합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지원의 중점과제는 개인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1998년까지 약 22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가족영농회사의 재설립과 현대화, 법인과 합자회사의 구조조정 부문에 주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능력과 경쟁력이 있는 신연방주 기업구조의 재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시장구조 개선조치를 통해 1998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약 10억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또다른 중점과제는 불리한 농업조건하에 있는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조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8년까지 약 11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치수와 문화재건축 및 경지정리, 농촌마을 개축과 지방도로건설과 같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조치가 개별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보충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지난 2년간 더욱 강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으로서 개별기업의 투자지원 조건은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에서 통일되었다. 다른 조치의 지원조건도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경지정리, 마을개축과 지방도로 건설과 같은 개별기업을 넘어서는 조치에는 구연방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외에도 건설정책, 개발정책 그리고 해체정책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제1목표지역으로서 신연방주에는 농업경제에 대하여 특별지원이 관철되었다. 1999년까지의 지원기간에 유럽연합은 지역발전 및 농업, 가공업, 농업생산물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해 구조기금에서 약 60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 중 지금까지 80% 이상이 승인되었고 약 65%가 지출되었다.

시행중인 지원책에 대한 중간 평가에 의하면 독일의 제1목표지역에서는 「유럽농업설립보장기금(EAGFL)」의 구조지원을 통해 특히 농업 생산물과 가공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제1목표에서 제안되어 통합된 프로그램의 틀에서 개별기업의 지원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와 같은 지원은 신연방주 지방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을 위해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들이 존재한다.

제1목표에 따른 자금지원의 보완으로서 지방의 발전과 창의적 조치를 위한 공동이니셔티브 리더(LEADER)II의 틀에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으로부터 약 1억 8천4백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신연방주에는 49개의 리더-활동그룹이 만들어졌다. 조치의 중점과제는 농업과 관광 부문에 있으며 자연보호활동과 경관보호활동을 연계하였다.

리더-중간평가의 결과는 구조기금의 투입을 통해 이들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수많은 단초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이니셔티브 리더 및 제1목표의 틀에서 신연방주의 농업 구조조정 지원은 새로운 지원기간(2000-2006)동안에도 계속 될 것이다.

5.5 구부채의 정리

신연방주 농업기업의 구부채는 1990년 7월 1일 기준으로 약 76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그중에서 14억 마르크는 신탁관리청이 인수하였다. 35억 마르크는 순위해약협상 과정에서 지불유예되었고 대차대조표 상에서 정리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독일 마르크 대차대조표법 3장 16항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 4월 8일의 헌법결정에서 구부채의 정리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입법자에게 정상적인 기업경영시 다수 기업이 적절한 기간내에 구부채를 분할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 연방정부는 당시 신연방주 농업기업의 구부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가 근거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부채 정리의 효과에 대한 관찰을 위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정화된 기간을 2000년 말까지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려운 투자단계와 재건단계후에 다가오는 해의 경영성과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 더욱 그러하다.

5.6 공동 농업정책의 개혁 - 지원규정의 적용

「아젠다 2000」의 농업부문에 대한 결정으로 유럽 농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확정되었다. 농업부문에 새로운 판매기회를 열어주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시장가격 수준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럽연합이 금년 말에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개혁결정은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협상을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개혁조치에 대한 단계적 조치들과 최초의 위원회 제안과 비교할 때 지지가격인하를 일부분 자제시킨 것은 농업회사의 적응능력에 심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특별지원금에 대한 직접지불의 의무적 삭감이 저지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연방주의 농업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규정이 관철되었다면 구조조정에 직면한 신연방주의 농업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젠다 2000」의 틀에서 집중적인 협상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낙농업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위한 적법한 전제가 마련되었다. 연방정부는 우유생산 규정에 있어서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규정이 2000년 3월 31일로 종결된 후에 전체 독일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할당량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6. 생태파괴의 개선과 자연과의 지속적 친화

신연방주에서의 환경상태는 독일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의 환경상황의 평균화도 높은 수준으로 확실히 진척되었다. 1989년 이래 시작된 생산패턴의 변화, 기업의 조업정지,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성과있게 추진된 지역자치단체와 기업에서의 하수정화시설의 개선은 환경훼손의 감소를 이룩하게 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데, 하천이 확실히 맑아졌고 먼지와 악취도 감소되었다.

신연방주를 위한 환경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하천의 보호이고 특히 엘베강과 오더강의 경우 인접국가와 공동작업을 요하며, 갈탄탄전의 오염된 지표면의 정상화와 경작지 만들기, 우라늄광산의 처리 그리고 환경보호프로젝트의 지원과 같은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개별적인 부담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복합적 과제이다. 이것들은 특히 기후보호와 생물 종의 보호, 자원보호 그리고 환경우호적인 역동성을 지원하는 데도 해당된다.

6.1 인접국가와의 관계 재건과 공동작업 : 엘베강과 오더강의 수질 개선 프로그램

《엘베강》

신연방주 지역 수질의 근본적 개선은 유역의 75%가 동독에 속하는 엘베강의 경우 특히 두드러졌다.

1990년 이래 엘베강 유역에 160개의 정화시설이 설치되었다. 그중 124개는 독일지역에, 36개는 체코지역에 설치되었다. 각각의 정화시설은 20,000명분 오염물질 정화능력에 해당하는 수용력을 가졌다. 그 외에도 20,000명분 이하의 정화능력을 가진 정화시설이 설치되었다.

산업폐수의 27개 주요 물질 중 25개 물질의 오염이 감소되었다. 1990년 이후 엘베강 오염에 있어 수은은 약 80%, 카드뮴은 약 20%, AOX는 약 50%, 인과 질소는 각각 약 30%가 감소하였다.

엘베강을 따라 리젠산맥으로부터 노르트제까지 222개의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종의 서식공간이 장기적으로 확보되고 서로 연계되고 있다. 엘베강과 강의 습지대는 유럽에서 유일한 사례의 하천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엘베강의 어류군은 1998년 7월 엘베강유역의 주 장관회의에서 완공식을 가진 제타하트의 독에 만든 어류 서식지의 신축으로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종의 어류들이 이제 엘베강에 다시 서식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엘베강 보호 국제위원회가 결정한 “엘베강 실행계획”은 첫 번째 단계로 2000년까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 엘베강 어귀의 물을 간단한 정수과정을 통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엘베강의 수질 개선을 통해 어부가 고기잡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엘베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0년까지는 두번째 단계로 다음의 사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 퇴적물을 농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서생물의 군락체에 원래 서식하였던 종이 살 수 있도록 한다.

《오더강》

1996년에 서명된 「오더강 오염방지과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에 관한 조약」이 1999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조약 당사자는 폴란드, 체코, 독일 그리고 유럽공동체이다.

조약의 시행 전에 이미 조약당사자들은 조약을 적용하여 4개의 그룹으로써 일을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업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방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 집행계획이 곧바로 제시되었다. 오더강 유역과 오염시설에 대한 감시를 위한 국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 7/8월에 발생한 홍수분석을 토대로 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전략을 공동 작업으로 마련하였다.

《하천수질의 개선》

독일의 생물학적 하천수질카드에는 신연방주에서 그간 이룩한 실적을 매우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엘베강에서 가장 오염되었던 피르나/드레스덴 구역이 III-IV 단계로 현저히 개선되었다. 현재 엘베강은 체코의 국경으로부터 노르트제 하구까지 전구역에 걸쳐 하천수질등급은 II-III단계(조금 오염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엘베강의 지류인 몰데강과 쉬바르츠 엘스터강은 강하류에서 수질등급이 IV(지나치게 오염된 상태)단계에서 II단계 또는 III단계로 개선되었다. 역시 엘베강의 지류인 자레강의 하류에서의 수질은 III단계(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II-III단계로 좋아졌다. 1990년 엘베강 유역이 추가적

으로 도입된 카테고리인 “생태적으로 파괴된 상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러한 정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오더강은 오스트제의 하구에까지 수질 등급이 II-III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6.2 접경 하천에 대한 폴란드 및 체코와의 공동작업

폴란드와 체코의 접경 하천에 대한 치수 공동작업을 위해 이들 국가와 쌍무적인 접경하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작업의 근거는 1996년 효력이 발생한 독일-폴란드 접경하천조약과 1997년 효력이 발생한 독일-체코간의 접경하천조약에 두고 있다. 공동작업은 접경하천의 치수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즉 수문, 하천에 관한 의견교환, 하천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하천 보호와 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오염원에 대한 투쟁까지 포괄하고 있다.

6.3 갈탄탄광의 정상화

구동독지역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갈탄탄광 해체와 개량은 중요한 생태과괴를 가져왔다. 중부 독일과 라우지츠 지역의 갈탄광에 의한 오염 개선은 통일 이후 바로 고용창출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1993년 이후 연방정부와 갈탄탄전이 있는 동독지역 주정부 사이에 체결되고, 1994년 12월에 보완된 「생태적 과괴에 대한 재정지원의 행정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VA-Altlastenfinanzierung). 최초의 5개년 재정지원단계는 1997년 말로 끝났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정지원은 보완된 행정협정(VA-Braunkohlesanierung)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매년 12억 마르크 정도로 제공될 것이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방과 주정부는 총 91억 마르크를 갈탄탄 오염정화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다. 노천탄광 갱도를 메꾸는 작업과 경사면 정상화가 약 1억㎡ 범위에 걸쳐 이루어졌고 400km 이상의 미끄럼 위험이 있는 폐석장이 정상화되었다. 약 45,000헥타의 면적이 다시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5천 8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갈탄탄광의 오염정화는 1998년 정상화조치, 공적 자금의 이용, 고용개선작업이 시행됨으로써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졌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볼 때 동독지역 갈탄탄광의 정상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8년 이 부문에 12,400명이 고용되어 있다.

정상화조치의 핵심과제는 2002년이 지나면 독자적으로 조절되는 수원지 확보로 옮겨 가게 된다.

2002년 이후 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기에 그리고 상호 협의하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 수단을 갖춘 보완된 행정협정을 계획하고 있다.

6.4 산업용지의 개발

「라우지츠·중부독일 광산 관리회사(LMBV)」는 자신의 소유토지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업용부지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화된 구기업부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기업의 정착을 위한 조건을 제고하며, 나아가 구조가 취약한 광산지역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

LMBV의 기업용부지 중에 19개 장소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선 브란덴부르크주의 선발된 4개 지역(뤼베나우, 그로스래센, 브리스크/젠프텐 베르크/회르리츠, 라우흐함머)을 기업용토지로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주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고 투자자의 투자문의도 있었다. 총비용은 약 5년에 걸쳐 1억 3백 6십만 마르크로 분할되어 지원된다. 이 비용은 대체적으로 지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자금으로부터 조달된다.

6.5 오염의 정화

지표면의 오염은 신연방주에 있어 대단히 비중이 큰 환경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오염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 외에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며 중요한 투자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1990년 환경법의 면제조항을 통해 특정한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토지나 시설의 유증자·점유자·관청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약 70,000건의 면제신청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중에서 약 70%가 인정되었다.

주정부가 면제를 인정하고 오염 정화에 대해 어떠한 책임자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면제조치는 주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신탁청 관리하에 있던 기업에 의한 생태적 오염정화 조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미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는 1992년 겨울에 결정된 행정협정이다. 이에 따라 신탁기업에 대한 정화조치의 면제로 발생하는 정화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방이 60%, 주정부가 40%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10년간 매년 약 10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60억 마르크가 연방 75%, 주정부 25%의 재정비율로 확정되었다. 각각의 경우 연방과 주정부 사이에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긴밀한 협의 하에 정화작업이 진행된다. 갈탄탄광의 오염정화 외에도 총 23개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

1996년 1월 11일 행정협정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금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1996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 있는 선박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일괄개산금을 협의한 후, 1998년 작센주 작소니아 프라이부르크와 작센-안할트주 만스펠트의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었다.

1999년 2월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오염정화를 위한 일반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에서 생태적 오염의 정화에 대한 재정부담이 궁극적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인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사이에는 생태적 오염에 대한 재정규정에 관한 최종적 협약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개별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주정부 전체에 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협약으로 오염 정화에 대한 유일한 책임은 주정부로 넘어갔다. 실행되어야 하는 정화조치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합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6.6 광산의 방사선 오염

작센, 튀링엔 그리고 작센-안할트에 있는 오래된 광산과 우라늄광산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정책적·환경정책적 도전이다. 부분적으로는 오염의 원인을 찾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전후 곧 바로 소련에 의해 채취된 우라늄광산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우라늄채광과 선광의 결과로 방대한 환경침해가 야기되었다. 독일통일에 따라 우라늄생산이 중지된 후 방사선에 오염된 시설과 토지 및 광산과 선광의 방사선 오염상태가 남았는데 이로부터 라돈, 라듐, 우라늄 그리고 여타의 해로운 물질에 의해 공기와 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 후에 즉시 가동중에 있던 6개의 우라늄광산에 대한 해체 및 정상화 책임과 광산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떠맡았다. 비스무트 지역의 해체 및 정상화 계획을 위해서만 130억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중에서 1998년 말까지 약 57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6.7 방사능 오염의 조사

통일조약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광산에 의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광범위

하게 조사하는 특수과제를 위임받았다. 이를 위해 방사선보호청(BfS)은 “광산오염에 의한 방사능 측정·조사·평가”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서가 1999년에 출판되었다. 조사결과는 조사된 광산지역의 대부분이 방사능보호 기준에 의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는 조건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문제는 이로써 근거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의혹지역에서는 단지 적은 면적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정화조치나 사용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지는 각각의 사실상태에 따라 책임있는 관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6.8 우라늄광산 유산의 해체와 정상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

연방기업인 비스무트 유한회사는 1991년 이래 작센과 튀링엔에 있는 우라늄광산의 유산을 처리하고 있다. 룬네부르크, 제링슈타트, 쾨니히슈타인, 아우에, 크로센 그리고 드레스덴-기터제에 있는 우라늄광산에 대한 해체 및 정상화 작업은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 사이에 이룩한 정상화진전, 특히 지하갱도의 폐쇄와 폐기 및 폐수시스템의 교환에 의해 환경침해는 뚜렷이 감소하였다. 지하갱도의 개선과 폐쇄는 방사능 방출을 매우 미미한 양으로 줄게 하였다. 향후 환경의 개선은 2000-2005년 사이에 완료되는 갱도의 해체에 의해 현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정상화 노력은 시설해체, 노천탄광 갱도메꾸기, 부지 및 슬래그더미의 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러한 것들이 뚜렷한 정상화 진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핵심과제는 향후 8-10년 사이에 시행될 노천탄광의 갱도메꾸기, 룬네베르크와 아우에의 슬래그더미 정화 그리고 크로센과 제링슈타트에 있는 해체시설물의 처분 등이 될 것이다.

생태적 의미 외에도 비스무트 유한회사의 정상화프로젝트는 광산지역의 경제 및 구조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방기업은 미래지향적 직업에서의

직업훈련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엑스포 2000에서는 룬네베르크와 아우에/쉬레마가 우라늄광산 활성화의 표본으로 제시될 것이다.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해체 및 정상화작업은 2010-2015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수, 정화시설과 환경탐지장치 정비같은 장기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6.9 원자력발전 시설의 해체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과 라인베르크에 있는 소련식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점검 후 연방정부에 의해 1991년 해체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적 안전기술로 추가시설을 보완할 경우에도 전체적 조화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적 가동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의 안전평가에 기초해서 시설 및 원자로안전회사(GRS)는 중부 및 동유럽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소련식으로 지어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평가 척도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현대적 안전기술에 의한 추가보완시설이 모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추가보완시설의 경우 계속적 사용과 발전소를 해체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경제성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6.10 자연보호

독일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경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전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자연경관중 보호가치 있는 부분의 설정과 보호”라는 지원 프로그램의 틀에서 연방정부는 재정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독일의 자연유산과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1990년 이래 이 프로그램의 틀에서 신연방주에 총 11개의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지원되었다. 늦어도 2007년까지 종료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억 4,387만 마르크의 연방자금을 포함하여 총 3억 3,319만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총비용에 대한 연방의 재정자금 참여가 73.67%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브란덴부르크의 저습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해안호, 작센의 소택지, 작센-안할트의 드림링 운하, 튀링엔의 폐각석회 및 퀴프호이저 산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관청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단체가 프로젝트의 책임과 연계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일부분은 과거 서독과 동독의 국경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지원은 “녹색벨트”의 유지에 있어 자연보호와 경관보호에 대한 소관관청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11 보호지역의 매각금지

연립정부 협약은 신연방주에 있는 보호구역의 매각 금지를 계획하였다. 1998년 12월 말 베를린에 소재한 토지평가·관리회사에 대해 구매자가 연방 또는 주의 자연보호프로젝트의 담당자, 유럽연합의 생명-자연보호프로젝트의 담당자 그리고 주정부 외에 인정된 자연보호단체 또는 자연보호계획의 특별 담당자일 때는 제17조 자연보호지역 구입규정에 따라 토지유통매매가 허용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립정부 협약에 반하는 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었다.

매각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재산권과 다른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해 연방정부가 1999년 9월 1일에 제출한 법안의 결과로 생겨났다.

6.12 생물 서식공간의 연결체계 형성

연립정부 협약은 면적의 약 10%를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적인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참여하는 관계당국 사이에 의견을 조정중이다.

제4장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진전

혁신능력 및 경쟁력은 점점 더 전문성, 지식, 역량, 인간의 창의력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 학문에 대한 투자는 사회전체의 미래를 밝게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연방주에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강화이다. 기업과 연구시설간 전문지식의 교환은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신연방주에서 생태적 삶의 기반보장은 지난 몇년 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즉 환경 하부구조 구축, 환경 폐기물처리(특히 갈탄지역에서), 도시(환경)개선과 생태학적 혁신의 지원, 자연 보호구역의 유지와 지속적 발전 등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1.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직업교육과 재교육의 강화, 청소년 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직업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독일의 경쟁력은 확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퇴치와 직업교육은 연방정부에서 최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연방주에서 그러하다.

1.1 1998년 직업교육상황

1998년 9월말까지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노동청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직업 훈련생 자리 증진노력 및 매년의 특별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자리는 부족했다. 물론 특별프로그램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훈련생 자리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소기업에서 이중 직업훈련을 위해 특색있게 마련된 구조는 신연방

주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생 자리 공급은 아직 만족할 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새로 체결되는 기업차원 직업훈련계약의 약 70%는 경우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조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직업교육영역이 얼마나 국가의 보조에 의존도가 높은지를 말해준다.

1.2 청소년실업 퇴치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틀 안에서 연방정부의 긴급한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기회와 전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이 만들어졌다. 1999년도의 경우 이 지원계획을 위해 20억 마르크가 준비되었으며, 6억 마르크는 유럽연합 사회구호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긴급구조 형태의 이 계획은 10만명의 청소년에게 단기적으로 직업훈련, 전문화, 그리고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긴급지원프로그램이 청소년실업 해소책으로 구상되었을 때, 1998년 10월의 노동시장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연방주에서는 25세 이하 131,000명의 청소년들이 실업자로 등록되었는데, 이것은 실업자 비율의 15.5%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아직 직업을 소개받지 못한 약 10,500명의 취업희망 청소년이 존재하였다.

긴급지원프로그램은 1999년 1월 1일 시작되었다. 기금의 40%가 신연방주로 유입되었다. 신연방주에 대한 기금 할당량은 이 지역에서 실직자로 등록된 25세 이하의 실직자에 대한 독일 전체에서의 비율 (1998: 30.5%) 보다 많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에 대하여 중점을 두기로 했던 연립정당간 합의가 실현되었다.

신연방주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은 1999년 9월 초에 이미 7억7천8백만 마르크에 이르렀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청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99년 8월까지 200,200명의 청소년들이

신연방주의 노동청과 상담하였고, 117,600명의 청소년이 구체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이미 65,200명의 청소년이 긴급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점은 31%(20,500명)의 청소년들을 위해, 특히 실업 청소년이 취업교육에서 실제 고용되는데 필요한 추가자격증 취득이다.

직업적 전문화를 동반한 취업조치에는 22.1%(14,400)명의 청소년들이 응했다.

17%(11,200명)의 청소년들이 기업 외 직업교육을 시작했고, 단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던 10.8%(7,000명)의 청소년들이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했다.

8월 말에는 41,500명의 청소년들이 임시프로그램 조치에 의한 지원을 받았다.

이에 상응하여 25세 미만의 젊은 층에 있어서의 실업은 평균 이상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1998년 3월에 비하여 총실업자 111,600명의 약 12%(15,900명)가 감소한 것이다. 1998년 12월 말 경에는 실업이 전년기준의 약 10%에 못 미치는 반면, 젊은 층의 실업자 수가 약 1% 또는 1997년 평균 보다 700명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단일 노동행정 구역에서의 실업률은 전년과 비교해서 지난 몇 달 사이에 약 20% 이상이 감소했다. 이로써 임시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고용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실업의 극복이라는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청소년 실업과 직업교육 기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들은 청소년 구호(Jugendhilfe)범위 내에서도 주어졌다.(참고: 5부. 청소년·가족정책)

1.3 고용과 직업교육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

앞으로는 직업교육 기회의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고용, 직업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의 장에서 이미 1998년 12월에 경제인 단체 및 노동조합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고, 직업훈련상황의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1999년 7월 6일 연방정부와 고용, 직업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의 파트너들이 합의한 사항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젊은이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연대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목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였다.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작 년도인 1999년 초까지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지원자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희망직업 분야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1.4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그 밖의 프로그램과 자발적 시도들

《1999년 동독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일찍이 신연방 주정부들과 1999년 동독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17,500개의 추가적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청소년들은 연방노동청의 조치 시작 이전에 아직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직업교육 지망자로서 등록한 자들이다. 이를 위해서 2002년까지 약 2,320억 마르크가 필요하다. 신연방주도 같은 수준의 금액을 출자하게 된다.

《“견습자리개발자”, “직업교육상담자”, “견습자리홍보자” 프로그램들》

1995년 7월부터 1998년 12월 31까지 신연방주 기업은 “견습자리개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직업교육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약속된 약 15,000개의 추가적 견습자리는 사실상 약 70%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연방정부는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을 200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01년까지는 총 약 1억 마르크가 연방기금에서 출자된다. 연방경제·기술부와 신연방주 의회에 의해 시행된 “직업교육상담자”와 “견습자리홍보자” 프로그램은 1998년에 약 6,000개의 직업교육자리 창출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유럽 부흥 프로그램 (ERP)》

이 프로그램의 기금에서 나온 약 1억9천만 마르크에 의해 전체 연방 중소기업

업에서 6,300개의 직업교육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1996년 8월 이래로 16,500개의 직업교육자리가 재정적으로 공동지원될 수 있었으며, 약 2억 마르크가 장려기금에서 1999년을 위해 계획되었다.

《범기업적 직업교육장소, 견습생지도》

범기업적 직업교육소(ÜBS)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간규모 수공기업에 있어서 직업교육능력 향상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소 설립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범기업적 직업교육소 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구서독 지역에서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지금까지 장기적 필요에 따라 10,000개의 범기업적 직업교육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특히 건축분야의 직업희망자를 위해 약 7,900개의 자리가 창출되었다. 그 외에도 6,000개의 이론(실습)자리와 1,400개의 합숙(실습)자리가 마련되었다. 180개의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기금에서 12억5천만 마르크가 마련되었고, 그 중 1998년에만 26개의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억5천5백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기업의 직업교육에 대한 보상으로 연방경제기술부에서는 1999년 수공업에 있어서 범기업적인 견습생교육을 위해 계속 자금을 증액할 것이다. (1998년 7천2백만 마르크 / 1999년 8천4백만 마르크)

《직업교육담당자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1991년 이래로 신연방주에서는 직업교육 담당자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장려되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총 약 1억6백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목표는 직업적 재교육에 있어서 강사, 직업교육담당자 및 시험관들의 재교육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문화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상담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직업적인 교육과 재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확대생산자(Multiplikator)」로 교육된다. 지금까지 약 144,00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11,000회가 넘는 행사가 시행되었다.

《추가적인 전문화》

체계적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이중적 직업교육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 전문화를 위한 연방교육과학부의 시도에 대하여 신연방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속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세부적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특히 많은 소규모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직업교육연맹의 범위 안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직업교육에 참여하였다. 인력시장에서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실업 청소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전문화에 대한 주선도 연방정부의 긴급지원프로그램에 속한다.

《연방군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방군은 신연방주에 해마다 13개의 직업분야에서 총 약 620개의 직업훈련자리를 공급한다. 1999년에는 견습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자리를 약 200개 늘릴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자리는 신연방주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주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와 연합하여 직업훈련자리를 마련하려는 또다른 노력들이 계획중이거나 또는 이미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연방군은 청소년 실업퇴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임시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신연방주에서 5,000명까지의 실업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본 병역 근무가 끝난 후에 실업으로 내몰리게 될 청소년들은 12달까지 군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시간동안 그들은 군복무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민간직업에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화를 달성한다. 이렇게 일하는 삶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국방예산 중 약 1억 마르크는 신연방주의 미래를 위한 양질의 투자이다.

1.5 직업교육의 혁신

기업에서의 충분한 직업교육자리를 중장기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연방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이동을 위한 최선의 준비
- 전문화 필요성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 활동의 강화
- 개인간 차별화와 추가적 전문화를 통한 재교육에의 연결
- 취업하기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청소년을 위해 또 다른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의 직업교육 가능성의 창출과 확보
- 취업하기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 직업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젊은 성인의 비율의 감소

계속해서 중요한 점은 신속한 현대화, 차별화, 직업교육의 유연화, 노동수요면에서 팽창하는 그리고 혁신적인 직업영역에서의 새로운 직역의 개발 등이다.

1.6 구동독에서의 직업적인 전문자격의 인정

1997년 10월 12일 연방행정법에 기초하여, 구동독 시절 취득한 상경분야의 전문직업에 대한 등가성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융통성있게 작성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91년 결정과는 다른 1998년 4월 24일 주교육문화장관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경제학, 신문(방송)학, 표현예술 분야의 대학졸업 학력은 대학졸업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문화장관회의체는 현재 그 판결에 의해서 다른 교육 부문에 대하여도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있다.

2. 동독지역 연구부문의 확충

대학과 연구는 혁신을 장려하고, 구조변화를 달성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동독의 대학·연구체제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1 동독 대학의 현대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정적 역할이 대학에 주어진다. 연구와 교육, 학문에서 미래투자 범위 내에서 정부는 대학과 대학교육의 현대화가 촉진시킬 것이다.

연방정부는 1999년 대학특별프로그램과 학자금대여 그리고 대학확충을 위해 약 10억 마르크를 신연방주에 제공한다.

2.2 대학특별프로그램(HSPⅢ)

대학특별프로그램은 신연방주 대학구조 재편에 크게 기여했다. 연방과 연방주들은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약 8억8,300만 마르크를 동독대학 현대화 과정과 신연방주 기술전문대학의 긴급한 확충을 위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멀티미디어 시설설비, 기술전문대학에서의 새로운 학업과정 신설, 대학에서 민간 경제로의 혁신의 전파, 특허와 관련된 상담활동의 증대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활동의 지원과 국제적 대학간 협력 등이 지원된다.

2.3 교육의 장려

연방정부는 1999년 말까지 교육장려 개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이 계획 내에서 학자금대여법에 따른 기본적인 필요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미 동독과 서독에서 동일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주거기준과 주거보조비들이 신연방주와 구연

방주에서 서로 균등하게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2.4 대학확충의 강화

대학의 개선과 증축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과제와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이 감소한데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다. 신연방주에서 건물과 기계적 설비에 있어서도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신연방주의 대학건축 장려를 위한 연방책정금액(1999년 동안 약 6억 마르크 - 연방 총대학건축기금의 약 30%)의 대폭적 인상과 함께 신연방주에서 대학증축의 계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1997년 이래 생겨난 제3자에 의한 재정적 지원계획이 대학확충 기본계획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대안적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산자금 조달로 가능한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빨리 아직도 존재하는 보충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2.5 대학 교육의 현대화

현재 대학정책개혁에서는 학업시간 단축, 실습교육과의 긴밀한 관계, 고용시장 요구에 상응하는 직업교육 등과 국제적 방향에 맞게 강화된 교육 등의 문제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2.6 국제적 수준의 학위과정

연구와 교육은 국제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어 강좌나 다른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구성된 학업과정 혹은 학사, 석사학위 과정이 대학강좌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주와 공동 모형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수준의 학위과정”을 개발했다. 신연방주 대학에서는 이를 통해 국제적 학위과정이 제공될 수 있다. 이 대학들은 특히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인기있는

학위과정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학사, 석사학위과정의 도입, 학업의 다양한 조정 혹은 학점체제의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Ilmenau, Jena, Weimar, Leipzig, Greifswald, Madeburg 대학과 Neubrandenbrug의 기술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약 150만 마르크가 지원된다. 신연방주의 석·박사과정은 국내외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새로운 학위과정에 있는 대다수의 외국 학생들은 동남아시아나 중·동부유럽의 개혁국가, 근동지역, 남·북아메리카지역 출신이다.

2.7 “통신대학교육”의 장려

1993년 연방·주위원회(BLK)에 통신대학교육 전문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통신대학교육이 연방과 주들의 공동계획으로 확립되었다. 1997년 이래 멀티미디어 교수법과 학습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 중점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통신대학교육의 보완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일자리 혹은 대학교의 지명도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대학교가 적은 지역에도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연방의 재정원조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지역적 혹은 범지역적 상담 및 지원구조와 관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2.8 새로운 교육매체의 투입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매체의 투입으로 두가지 선도프로젝트를 장려한다.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세 동독지역 기술전문대학이 기술, 정보, 경제를 위한 가상전문대학이라는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가상전문대학에서는 경제공학원리와 정보공학과에 있어 잠재적·원격적으로 지원되는 조정된 학업·재교육기회 형성이 중요하다. 연방은 이 프로젝트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 동안 약 4,200만 마르크를 지원한다.

- “네트워크화된 화학연구”라는 선도프로젝트는 화학과 기본학습에 있어 교재, 강의, 세미나, 실습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 것처럼 연구활동을 최신 기술의 도움으로 준비하고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센과 작센-안할트 대학이 이 계획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총 800만 마르크 이상이 드는 4개의 부분계획이 연관되어 있다.

2.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자

연방교육연구부의 기술공학 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확충하고 종합하는 것이 성공해야만 경제성장과 긍정적 고용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몇 년간 활발한 창업열기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한 잠재력이 있다. 만약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에서의 창업열기와 같은 관심을 대학에서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 독일에는 향후 5년간 70,000개의 미래지향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자” 프로그램이 여기에 착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 전체에 걸쳐 실시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적 전문지식 연합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기술기반기업의 창립과 성장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창출한다. 대학, 기업, 자본가 그리고 지역적 하부구조 담당자들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며, 잠재적 창업자에게 동기지원, 교육지원 및 상담, 보호를 위한 합의된 일괄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1년까지 신연방주를 위해 총 4,500만 마르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지역의 5개 계획에 지원되는데, 그 중 두

가지 계획은 신연방주에 해당된다. “GET UP(기술 지향적 창업자 양성)” 이라는 자발적 시도는 Ilmenau공과대학, Jena대학, Jena와 Schmalkadeln전문대학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BOE(하이테크 지역 Dresden의 예로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자)”라는 자발적 시도의 주역은 드레스덴 공과대학이다. 다양한 자발적 시도가 계획되었는데, 사업계획 경연대회, 창업자 코치의 제공, 창업자의 날, 주제별 창업세미나, 창업자 강좌의 설치나 확대, 안정된 기술기업이나 연구소에 실습을 중재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장려된 지역에서 창립 건수의 현저한 증가와 신연방주와 연방에 걸친 다른 대학소재지로의 광범위한 확산을 기대한다.

2.10 대학의 연구 강화

독일연구협회(DFG)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방법으로 넓은 분야에 걸쳐 그리고 모든 학과의 상호협력에 있어서 대학교에서의 기초학문연구에 대한 지원과 학문적 후진 장려를 연계시키고 있다.

특별연구영역과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원 강좌 및 혁신강좌 지원 등과 같이 독일연구협회에 의한 구조형성의 요소는 본질적으로 신연방주 대학환경의 강화에 이바지한다.

- 11개 대학에 21개 혁신강좌 신설을 통해 동독대학과 경제계의 요구에 유동적으로 대응되었다. 혁신강좌는 전체독일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에서 최고 5,150만 마르크의 지원이 계획되었다.

이 강좌들은 정보학이나 새로운 재료분야 그리고 분자생물학 체계 등의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연구협회를 통해 3개 지

역(베를린, 라이프찌히, 포츠담)의 6개 정신과학센터를 지원한다.

- 신연방주 대학에 있어 연방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특별연구분야의 설치를 위한 전제조건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연구협회에 의해 지원된 대학내 특별연구분야(SFB)의 숫자는 1994년 7개에서 1998년 28개로 증가했다. 학문적 중점은 자연과학분야에 놓여 있다.
- 대학원 강좌는 양질의 학문적 후진양성을 위한 중요한 혁신기구로서 신연방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94년도에 독일연구협회(DFG)에 의해 승인된 대학원 강좌가 19개에 달했다면, 1998년에는 57개로 상승했다. 1998년 말 총 4,000명의 장학생 중 신연방주 강좌와 연관된 인력이 700명에 달했다.
- 대학원 강좌의 학과적인 중점은 생물학과 의학, 수학, 자연과학 영역에 놓여 있다.

2.11 국제적 대학협력

지난 몇 년간 동독의 대학들은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때 중부와 동부유럽 대학과의 전통적인 긴밀한 관계가 중요한 교량기능으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설계된 학업·연구 프로그램의 과정 속에서 서유럽과 서방 외국 대학과의 풍부한 국제적 협력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은 현재 279개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이룩함으로써 독일대학 중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12 동독의 연구환경의 확장

신연방주에서 연구환경의 확장은 연방정부 정책의 중요 사항이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지속적인 동독에서의 연구구축과 현대화를 위해서 1999년

예산에 책정된 기금이, 대부분 청색목록(Blaue Liste)에 가입된 시설인 막스-프랑크협회(MPG), 프라우엔호퍼협회(FhG), 헬름홀츠협회(HGF) 그리고 WGL 학술협회(Gottfried Wilhelm Leibniz)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연방교육연구부 전문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기술적 프로젝트지원을 위한 약 8억 마르크의 기금으로 신연방주를 위해 확실한 재원을 확충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의학연구, 분자 의학, 정보기술, 레이저 기술, 생태·기후연구, 사회적 이동성과 교통이다.

2.13 연구 하부구조의 증축

연방정부로부터 동독의 연구 현대화와 증축을 위해 조달된 기금은 새천년의 시작에 발맞춰 신연방주가 유럽의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정도로 초현대적 연구 하부구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 학문의 기반구축 보장을 위해 1999년 예산 중 막스-프랑크협회에 15%, 프라우엔호퍼협회에 20%, 독일연구협회(DFG)에 8% 이상이 상향 조정되었다. 헬름홀츠협회를 위한 기금은 약 3억3천2백만 마르크에서 3억6천6백만 마르크로 증액되었다.

- 신연방주를 위한 막스-프랑크협회(MPG)의 기금 할당량 증액으로 신연방주에서 막스-프랑크협회(MPG) 시설의 계속적 증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늦어도 2-3년 안에 연구소 증축이 종결되어야만 한다. (MPG는 1990년 이래로 신연방주에 18개의 연구소, 연구직 그리고 헬름홀츠협회 분소를 창설했다.) 이로 인해 막스-프랑크협회(MPG)는 구연방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 약 20% 정도의 예산의 지출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연방주에서 헬름홀츠센터 증축으로 포츠담 지질연구소, 분자의학을 위한 베를린 막스-데브뤼크(Max-Delbrueck) 센터, 라이프찌히-할레(Leipzig-Halle)의 환

경문제 센터,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의 플라스마물리학을 위한 연구소의 분소가 지질학 연구분야와 분자생물학분야 그리고 유전기술, 환경·에너지연구 영역에서, 현대성과 미래지향성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와 같은 예를 찾을 만큼 잠재성을 키워냈다.

신연방주 18개 프라운호퍼기관(9개의 독립적인 연구소, 나머지는 분소와 출장소)을 위해 1999년 예산에서 1억7,600만 마르크 이상이 책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증축조치를 위하여 약 2,500만 마르크가 예산에 첨가되었다. 연구기관 중 많은 기관이 이미 경제적 환경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프라우엔호퍼협회(FhG)의 일반적 표준에 도달하였다.

프라우엔호퍼협회(FhG) 시설의 구축과 확충은 산업적 경쟁능력의 지속적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신연방주 일자리의 창출과 보장에도 기여한다.

신연방주 청색목록 학술협회의 34개 연구소들은 구동독 연구잠재력을 의미있게 이용하고 성공적으로 독일 연구환경에 귀속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를 했다. 그들 중 다수가 인접한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위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강의와 혁신강의 그리고 특별연구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가 뛰어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연구는 자유공간이 필요하고 융통성있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막스-프랑크협회(MPG)는 1999년 초 이래로 계획된 예산을 소유하고 있고, 막스-프랑크협회(MPG)에 투입된 예산을 융통성있게 또한 학문을 위해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14 기반연구의 강화

연방정부는 막대한 자금으로 신연방주의 기초연구용 주요시설 두 개 BESSY II 와 Wendelstein 7-X를 지원한다.

- 그라이프스발트에 있는 독일연구협회(MPG)의 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IPP)의 연구시설인 Wendelstein 7-X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핵융합연구 실험시설이 2005년까지 세워진다. 동시에 이 연구시설은 유럽 핵융합연구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구시설이 될 것이다. 연방교육과학부는 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 건축 총액의 총 2억9천 마르크에 달하는 금액과 초기 가동단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연구소가 활용단계로 접어들면 그라이프스발트에는 300명의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 1998년 후반기에 가동된 베를린-아들러 호프의 고속련 하전입자방사능원전 BESSY II로써 학문과 산업계는 기초지향적 연구나 응용관련연구를 위해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현대화된 방사능원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ESSY II의 총체적인 건축비용 약 2억 마르크의 반정도까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였다.

2.15 기술지향적 연구의 강화

투자에 있어서 세계적 경쟁에 이기려면 국제적으로 안목있는 전문지식센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와 과학기술축진에 있어서 「주전자」 원칙은 구연방주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에서도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명백해졌다. 동독에게 있어 이것은 독자적인 힘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지원한다.

- 연방교육과학부 예산에서 출자된 생태학연구를 위한 40%이상의 연구장려 기금이 신연방주에 유입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특히 과중된 인구밀집지역의 환경의 재생과 보존을 다루는 라이프찌히-할레의 환경연구센터이다. 여기서 중점은 개선방법과 환경생물학, 생태독물학 그리고 환경설계에 놓여있다.

- 생물공학을 위한 연방교육과학부 장려기금중의 26%이상은 신연방주로 유입된다. 특히 생물지역 Jena의 구상은 연방교육과학부의 생물지역 경연에서 특별표결로 숙고되었다. 바이오지역 경연은 신연방주의 생물기술기업의 거대한 창업 원동력이었다. 당시 독일에는 400개 이상의 생물기술기업중 다수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 분자의학을 위한 Max-Delbrueck센터와 Berlin-Buch의 생물의학 연구단지 내 약 30개의 회사와 함께 베를린에는 주제별로 특색있고 하부구조적으로 현대적인 연구공원 모델이 생겨났다. 생물의학적 기초연구는 여기서 최적의 방법으로 즉 임상적, 기술적, 경제적 응용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흥미있는 사실이다.
- 차후 10년 내에 성취될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도전은 「300mm-기술」로의 이전이다.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된 드레스덴의 유럽 최대 전자공학 프로젝트 “300plus”를 위한 1억8천7백만 마르크 규모의 장려기금으로 신연방주에서 마이크로전자공학 영역은 전략적으로 강화된다. 이미 새로이 진입한 350개 기업의 교육훈련소와 연구기관, 작업장 등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센터로 발전한다.
- Frankfurt/Oder에 있는 반도체물리학연구소(IHP)에 세워진 현대적 청정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는데(1999년 말까지 약 1억3천만 마르크 규모의 투자로 지원- EFRE기금의 75%, 연방·주기금의 12.5%), 이것은 신연방주 반도체연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물리학연구소(IHP)와 Motorola 콘체른은 오데르 강가의 이도시에서 무선통신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칩세대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되려고 한다. 반도체물리학연구소를 위해서 Brandenburg주는 해마다 연방으로부터 2,100만 마르크 이상을 지원받는다.

- 레이저 연구의 선별된 영역에서 동독 연구소들은 오늘날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특히 레이저광선-물질대체효과(Dresden, Halle, Rostock), 현대적 레이저광선-광학(Jena) 분야에 해당되는데, 이에 연방교육과학부(BMBF)에서 제공된 프로젝트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향후 몇 년간 레이저 연구분야에서 모든 연방교육과학부의 지원금 중 25%가 동독지원금 할당량으로 고정될 것이고, 이는 신연방주에 커다란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Rudisleben(Tuebingen)에 초현대화된 박막-태양전지를 생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신연방주 태양열기술 영역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포토볼타익 200”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연방교육과학부는 개선된 공정공학과 태양전지 고효율을 위한 선두연구에 약 7백만 마르크를 지원한다. 약 50개 전문기술자를 위한 일자리가 이것이 완성될 때 생겨나고, 그외 재가공 주도기업에서 700에서 1,000개의 일자리까지 생겨나게 된다.

연방에 의한 특별 지역적 연구의 잠재력을 장려하는 것은 “기술적·고립적 여건”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기업의 창의성 강화, 지식의 교환

동독지역에서 1990년 시작된 구조변화는 연구·발전 역량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공업환경 감소는 여기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었다. 이것은 특히 연구·발전영역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에서 나타나는데, 1990년 86,000명에서 1995년 16,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연구집중적 기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콤비나트구조와 연구구조 붕괴 후에 동독에서는 공급과 연구관계에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성되어야 했고, 서독에 있는 연구기관과 혹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연방과 주들이 사용했던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투입된 8백만 마르크에 가까운 장려기금으로 해서 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연방주에서 「연구 및 개발」(FuE)이 추진한 모든 기업 중의 80% 이상이 지난 몇 년간 장려기금을 받았다. 장려기금은 경쟁력있는 연구·발전능력과 기업 혁신능력의 강화에 기여했다.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 최근의 공업연구인력의 가벼운 상승
-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업 수의 증가
- 연구 및 개발(FuE)을 위해 동독 기업이 투입한 자금의 증가

그러나 서독지역 산업의 구조 및 성과와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한 수준 차이가 드러난다.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볼 때 신연방주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대략 3분의 1 정도인데, 서독지역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비율이다.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수출과 관련하여 전체 독일 기업 중에 동독지역 기업들의 비율은 1997년 겨우 2.5%에 불과했다. 동독에서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두터운 네트워크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독에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동독에서의 상실된 혁신능력을 다시 확충하고 기업과 기술단지, 연구시설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새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독립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대부분 독자적인 자원과 양질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영역에서 소규모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 높은 고용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3.1 기업관련 혁신지원정책의 새로운 역점들

새 연방정부는 그러므로 신연방주들을 위한 기술지원 영역에 역점을 둘 것이

다. 지원체계는 새로이 정비되었는데, 단순하고 목표가 분명하게 신연방주의 중산층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졌다.

- 많은 중소기업들로 특징지워지는 신연방주 경제구조는 특히 연구활동의 지역적 연결을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달려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InnoRegio를 통해 연구시설, 교육장, 혁신기업과 행정 사이의 지역적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 전독일에 걸친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신연방주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기업과 연구시설 간의 협력에 기여했다.
 - 새로운 Pro-Inno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상호간 연구협력이 지원되고, 일정기간의 인력교환을 포함한 국내외의 연구시설을 통해서 협력이 촉진된다. 상황변화 속에서 소규모 기업과 특히 수공업회사에서 독자적 연구와 발전이 용이해진다. 신연방주에서의 신청자는 특별한 특혜를 받는다. “Pro-Inno”는 1998년 9월말에 구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중산층 경제연구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뒤를 잇는다. 동독의 기업이 지원자금 중 약 40%의 할당량을 획득할 것이 기대된다.
 - 연구기관과 경제계 사이의 정보교환은 새로운 프로그램 “Pro-Inno”를 통해 집중되어야 한다. 지원을 통해 여러 연구시설과 기업 사이에 당사자 통합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기술지향적 기업설립은 동독지역의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적으로 지향적 기업설립(TDU)”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해결책으로 마련된 조치인 FUTOUR를 통해서 신연방주에서 혁신적 기업설립이 보조·참여자본의 결합을 통해 지원된다. 1999년 말 이 기한인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3년동안 160개 이상이 창설 지원되었다. 이 기간에 예산정책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검토된다. 연계지원을 위해 특히 연방 전체에 걸친 “기술집약기업을 위한 참여자본(BTU)”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2 “Inno-Regio - 지역을 위한 혁신적 동인” 프로그램

신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지역적인 자발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경연인 “Inno-Regio - 지역을 위한 혁신적 동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것은 연방의 새로운 지원정책에 있어서 본보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발성의 목표는 스스로가 조직한 지역의 혁신잠재력과 혁신능력을 경제적 가치창조, 경쟁능력, 고용상황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강력히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의 현존하는 잠재력과 경제, 행정을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지역적 자발단체가 경연에 참가했다. 이것은 신연방주의 현존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3.3 정보교환을 위한 또다른 프로그램들

이 외에도 몇 년 전부터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업으로의 전문지식 전달이 지원되었다. 기술이전과 혁신지원을 위해 21개 지역에 설치된 기술중개소는 주로 소규모기업과 기술집약적인 창업자들의 일반기술적 상담을 위해 설치되었다. 그래서 기업은 비교적 발전이 미비한 지역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게 된다. 여기에 기술전문적인 상담에 치중하고 혁신적인 지역하부구조를 지원하는 14개의 분야별, 기술별 전달센터가 추가된다.

이로써 공적인 기술지원은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경제소재지가 생성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 한다. 혁신적 기업은 종종 외부의 산업연구시설 직근 지역에 자리 잡는다. 이로써 그 상승효과가 각각의 소재지를 넘어서는 전문협력센터가 생겨나게 된다.

세 가지 예들:

- 연구·기술공원 아들리호프(Adlerhof)에는 2,000개 혁신적 기업과 연구시설이 자리잡았는데, 이들은 3,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섬유와 합성수지연구를 위한 튀링엔(Thuringisch)의 연구소 주변으로 이미 50개의 기업이 자리잡았는데, 그 중에는 미국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 지멘스와 모토롤라, Adanced Micro Devices 등의 대기업과 함께 드레스덴과 프라이베르크 주변에는 마이크로전자공학 고기술 소재지가 생성되었는데, 이는 많은 소규모 기술 및 노동집약적 기업에 생존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4 연구와 발전 그리고 혁신의 장려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신연방주에서의 혁신잠재력 증축을 위한 장려구상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토대는 「연구개발」(FuE)프로젝트·인력장려 구성요소 보조금 장려와 더불어 신연방주들에서 연구와 발전 그리고 혁신의 장려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고도의 시장성이 있는 고가치의 위험부담이 높은 혁신들을 현실화시키고 국제적인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기업, 소규모 영업회사 그리고 외부 산업연구시설의 연구계획을 지원한다. 연구와 발전 인력이 생산중심기업의 중소기업에 더불어 지원된다. 그리하여 기업이 독자적인 혁신잠재력을 시장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히 투입할 수 있다.

1998년 하반기까지 이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약 4,100개 기업이 약 21억 마르크를 받았다. 장려기금 중 71%는 100명 이하 고용인력을 가진 기업에 돌아갔다. 종합해서 보면 동독의 중견기업 중 총 4분의 1이상이 이 지원기회를 이용했다.

신연방주에서의 공업연구를 위해 연방 전역에 걸친 프로그램 “공업지역 연구”에서 많은 자금(1998년까지 3억5천4백만 마르크)이 제공되었다.

신연방주 대부분의 젊은 기업에게는 적어도 혁신 우호적 조건이 최소한 집중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낮은 기업세와 공과금, 신속한 허가절차 그리고 투명하고 접근용이한 참여자본시장 등이 속한다. 새 연방정부는 전독일적인 시도라는 범위 안에서 제한조건 개선을 통해서도 경제의 혁신 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정책 목적은 자력으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실하게 더욱더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률있는 동독 경제의 구축이다.

제5장 사회 보장과 삶의 질

1. 지불가능한 주거지와 살 가치 있는 도시, 과거 부채

신연방주의 주거요건과 삶의 환경은 통일 이후에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45,164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 중에 239,842채가 단독·두 가구 주택이다. 신건축은 이로써 임대주택시장에 유용한 주택의 다양한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신건축과 동시에 처음부터 연방정부 주택정책의 주안점은 현존하는, 종종 손상된 그리고 붕괴된 주택지의 현대화와 개선이었다. 여기에 세금경감과 사회주택건설과 저리대출분배 등의 조치는 현재 약 7백만 채의 주택 중 반이상, 구주택지에서는 심지어는 3분의 2 이상을 현대화하거나, 최소한 부분적으로 현대화 하는데 기여했다.

1.1 주거는 지불가능하다.

가격에 연계된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소득중대의 고려 하에 임대료 비교체제로 옮긴다는 통일조약에서 제시된 임대정책적 임무는 성공하였다. 또한 1998년 초반 이래로 임대료 비교체제는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된다. 이것이 임대료 폭등으로 연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임대료 상승은 1998년 동안 계속 감소했다. 연평균 상승률은 1997년 3.1%에서 1998년 연평균 1.4%로 감소했고, 이때 마지막 분기의 상승률은 단지 1%에 불과했다. 이로써 신연방주에서의 변화율은 처음으로 구연방지역에 해당되는 변화율로 절감되었고(1998 연평균 1.8%) 그리고 1998년 몇 달간은 심지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2000년 하반기까지 임대부담을 서독지역보다 현저하고 강력하게 흡수하는 신연방주 주거보조비 특별규정과 함께 최고가격 임대체제로의 이행은 재정지원된다. 1997년 약 720,000 가구가 주거보조비를 받았고, 연방과 주의 주거보조비 지

출은 약 13억 마르크에 달한다.

연립여당간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전독일의 주거보조비 개혁작업에서 주거보조비를 임대료와 임차인의 소득 그리고 가족상황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 여기에는 주로 동독과 서독의 주거비 수혜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더불어, 보조비 증액의 일반적인 틀 안에서 동독지역의 보조비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주택지의 현대화 진행

구건물 개조는 연방정부에서 최우선순위를 지닌다.

연방에서 1990년 이래로 지원된 주거현대화프로그램으로부터 신연방주 주택소유자들은 수선과 현대화 조치 그리고 현존건축물 내에 새로운 임대주택의 마련,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본래 7백억 마르크로 제한된 프로그램의 규모는 새 연방정부를 통해 1999년에는 7백5십억 마르크, 1999년 6월에는 7백9십억 마르크로 상향 조정되었다. 저리는 연방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총 138억 마르크의 부담을 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백억 마르크의 대출과 함께 특히 자금이 필요한 현대화·수리조치에 집중되어야 할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그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신연방주들이 반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1998년에는 시행되는 프로그램에서 92억 마르크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그래서 276,000채의 주택에 있어 현대화 및 수리조치가 지원되었다. 1990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현대화, 부분 현대화 혹은 수리된 주택의 수는 약 333만채로 증가했다. 여기에 건축지에 새로 조성된 약 96,900채의 주택과 39,000개의 강제이주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도 포함된다. 대출액의 58%를 차지하는 주거개선 이외에도 신용기금중 약 25%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위하여 지원되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지원지역법에 따른 조세규정을 대신한 투자보조

금제도에 따라 기존건물의 현대화에는 도심지역에서 10% 정도 보조받은 임대주택신축에 대한 지원보다 더 많은 15%나 지원된다.

1.3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사회주택건축과 관련한 연방과 연방주의 주택건설지원조치는 저소득가구 및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거공간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 조치들은 이 외에도 주택사유화 촉진 특히 자녀를 가진 가족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돕는다.

연방은 연방주에게 사회주택 건설과 기존건물의 수리를 위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준비된 자금의 약 37%가 신연방주로 유입된다. 이것들은 자가 주택소유와 주거건물 현대화 및 수선조치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임대주택의 신축요구는 폭넓게 충족되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방은 신연방주에 (동부 베를린 지역을 포함하여) 사회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 7조4,240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연방주의 연계자금을 포함한 이러한 재정적 지원으로써 273,000채의 주택신축과 600,000채 이상의 주택을 현대화하거나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다. 1999년 동안 연방은 신연방주에 4억1천만 마르크의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정책적, 도시건설적 이유에서 미래에는 자금이 기존주택의 현대화 및 수선 조치에 더 집중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등한시 되었던 시중심지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다.

1.4 자가주택소유의 촉진

신연방주에서 주택사유화 장려는 연방정부의 주택·사회정책의 중심적 목표이다. 1993년 이후 단일가구주택 자체에만 약 230,000채가 건설 허가를 받았고 182,000채 이상의 가구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1996년부터 직접적인 수입의 증가와 무관하게 책정된 보조금으로 전환된 주택사유지원금은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그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특히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주택사유화는 많이 진전

되었다. 자가소유의 비율이(서독지역이 42% 정도인데) 신연방주에서 30%이상으로 상승했다.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현대화프로그램(KfW)은 그사이 130억 마르크의 신용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상승에 기여했다.

모든 완성된 주택에서 새롭게 건설된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의 비율은 40% 이상에 달한다. 건축량에 있어 이 비율은 임대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주거 면적 때문에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다가구 주택 중에 일부는 자가사용자를 위해 건설되었다는 사실도 작용한다. 건축경기의 형성과 이와 관련된 고용효과라는 점에서도 이 분야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5 부채탕감을 통한 건설부문의 효과적인 작업보장

과거부채원조의 일환으로 280억 마르크의 주택건설부문 부채경감과 약 50십억 마르크의 이자 지원은 신연방주에서 사회보장적으로 의무 지워진 기업적 주택건설부문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구부채지원법을 통해 기존주택의 현대화 및 수리조치를 위해 준비된 투자액은 약 660억 마르크에 달한다. 사유화의 의무비율이 15%였으나, 실제로 매각된 주택 350,000채 중 70%가 넘었다. 그중 약 3분의 1 이상 다시 말하면 족히 100,000채의 주택을 임차인이 취득했다.

이 수치는 활발한 참여의식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의 주택기업과 동업조합의 경제적인 성공을 입증하고 있다. 어려운 시작에서 벗어나 적절한 주거마련뿐 아니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데 한 몫을 하는 시민과 지방단체의 파트너로 발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택기업의 일부분에 있어서 구부채지원법에 근거한 의무를 적절한 조치로 충족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거대한 인구감소와 높은 실업률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주택을 파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 결과로 집이 비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거부채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나아가 주택경제에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연방정부는 특히 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과거부채법안의 높은 목표 성취율을 낮췄다. 첫번째 조치로써 연방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담당자, 주택건설업계의 대표자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가 소속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아직 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기업과 협업단체(Genossenschaft)에게 사유화의 무와 구부채지원법의 특별 부과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부과금을 다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이 주어졌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신용·투자 능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5%의 민영화의무를 이미 달성한 성공적 건설기업은 즉시 부흥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으로부터 최종확인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 기업들은 구부채지원법안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003년까지 “해방”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야 했었다.

부흥은행은 이러한 완화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1999년 9월 말까지 구부채지원법안의 의무로부터 약 960개 주택기업을 해방시켜 주었다. 이를 통해 구부채지원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하자는 연립정당간 합의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주택건설업계와 긴밀한 연관하에서 연방과 주정부간에 이 법률의 개정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완화조치의 경험 또한 이에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6 부동산 법률의 정비

구동독의 민주적 붕괴 이후 거의 10년 동안 개방적 사유재산 문제와 신연방주 부동산법을 위한 입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사유재산법과 물권법개정법률, 채권법현실화법률, 그리고 보상금부법 등으로써 당사자들간 사회적 이해조

정을 위한 기본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각각의 경우에서 발생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이해조정을 통해 맺어진 규정으로 지속적, 법률적 평화를 위한 기초상황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 연방정부는 여기에 신연방주 및 베를린과 함께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연방법무장관과 신연방주의 동료들은 체결된 법률안을 완성해야 할 공동 연방주-작업단체를 결성했다.

또한 휴양지 및 차고지의 사용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또한 체결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조기 계약 해제시에 정당한 이해조정이 중요하다. 또한 예전 동독으로부터 인정되었으나 더 이상 이행되지 않는 손해배상(이른바 정채된 손해배상)과 그리고 더 이상 반환될 수 없는 동산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비실용적인 규정이 대체되고 절차상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연방주에서 공공재산 관리자로서 국가는 그들에게 이미 1990년 10월 3일 공적목적 특히 도로용지로 사용된 사유지를 특별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법적 규정을 필요로 한다. 신연방주 기초단체와 그리고 소유주를 찾아낼 수 없는 “주인없는 토지” 사용자의 이해를 위해서 법원에서 임명된 대리자를 통해 법원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토지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7 살 가치가 있는 도시들

연방은 도시건설 자금원조로써 오늘날 어디서나 명백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동독도시와 지방의 보존과 개선을 추진하였다. 도시와 지방은 다채로워지고 더 매력적이고 살 가치가 있게 되었다. 도시건축적 개선은 양 독일에서의 삶의 관계가 동등하게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1990년이래 연방은 도시건설 지원의 중점을 신연방에 두었다. 도시건설을 위한 연방자금지원의 78%가 1990

년부터 1998년까지 신연방주에 할당되었다. 현재는 심지어 87%에 달한다. 동시에 다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도시내부와 외곽도시중심의 재생과 지속적 발전
- 무엇보다도 역사적 구도시들에서의 건축문화적 유산보존
- 도시내부 공한지의 재사용 가능화
- 대형신축지역 주거환경의 개선(아파트단지)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이 과업을 위해 신연방주에 70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연방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자금과 더불어 총 155억 마르크가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도시장려를 위한 연방자금원조는 지금까지 639개 도시와 지방에서의 779개 도시건축적 개선·발전조치와 127개의 도시에서의 “도시건축적 기념물 보존”프로그램 및 19개의 모형도시와 도시건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약 585,000채의 주택이 위치한 167개 대규모 주거지역에 그리고 3,700개 이상의 다른 도시건축적 조치(주거지역의 계획과 개발을 위한 조치)들에 도움을 주었다.

1999년 연방은 신연방주에 계속적으로 5억2천만 마르크를 도시건축 조치들을 위해 공급한다. 여기에 1999년 처음으로 “사회복지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자금원조가 추가된다.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 외국인 비율의 상승, 등한시된 공공 공간과 건물이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시건축적 문제로 위협받고 있는 도시를 도와야 한다. 새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투자적 그리고 비투자적 조치들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연방은 이를 위해 신연방주에 1999년 총 1,000억 마르크를 추가로 지원한다.

도시건축적 개조는 신연방주 도시와 지방에 경제소재지로서도 가치롭게 한다. 도시장려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지방에 대한 경제분석은 이곳에서 건축분야의 8개 일자리 중 한개는 도시건축지원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도시건축적 개선은 다른 한편으

로 도시로 하여금 기업을 정착시키고 일자리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유연한” 소재지의 이점이 있다.

연방정부는 특히 대규모 신건축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새건축지역인 Leipzig-Gruenau의 예에서 조립건축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미래적 비전이 도상실험 속에서 연구된다. 목표는 대규모 신건축지구를 차세대를 위해서도 독립적이고 도시적 시구(市區)로서 미래적이고 매혹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1.8 연방수도 베를린의 증축

1999년 9월 1일 이후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그들의 거처를 연방수도 베를린으로 옮겼다. 그와 함께 1991년 6월 21일 독일 연방의회의 결의 8년 후, 베를린에서 의회와 정부는 책임과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에 업무능력을 구축하고, 약 5,500명의 고용인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초반까지 계속 2,800명의 고용인력이 추가될 것이다.

연방정부 이전은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연방소유건물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수상청 신축 이외에도 외무부, 경제기술부, 교통건설부에만 필요한 추가건축이 이루어진다. 연방내무부는 건물을 임대했다. 인력적인 전체계획에 필요한 조치로 실제로 이동하는 당사자 수는 옮겨야 하는 일자리 수보다 현저히 작다.

이주로 필요한 총 9,100채의 주택은 무엇보다도 이전의 연합군이 보유한 주택과 베를린의 신축임대주택을 통해 충족된다. 그외에도 베를린과 부란덴부르크주에서의 소유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로 자가주택과 건축가능한 토지의 형태로 공급될 것이다.

신축임대주택과 사유재산조치의 점진적 완성은 시대와 수요에 맞게 1999년

중반부터 의회와 정부의 일부분의 단계적인 이동과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주택도 충분한 숫자가 마련되어 있다.

2. 연금보험, 노령층의 자립성, 시민참여

2.1 연금보험

연방정부는 노령층보험의 현대화를 위해 포괄적인 구상을 준비한다. 이 새로운 노년층예방책 일괄처리법안은 종전 연방정부의 단기적이고 신뢰를 깨뜨리는 복구정책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차세대들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료율은 환경세 개혁에서 나온 기금공급을 통해 낮춰진 수준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과 활동층 소득의 적절한 관계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대책수준을 추가적 자가예방책 기금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연금보험과 전체노령층 보장체계의 미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연대적인 노력이 불가피하다.

미래 보장을 위한 연금생활자 보험료는 2000년과 2001년에 연금이 각각 전년 가격상승률과 동등하게 적정화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2000년도 연금 적정화는 0.7% , 2001년도에는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는 연합정부는 순소득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돌아간다. 연금은 다시 임금과 봉급에 따라 상승해야 한다. 만약에 임금 적정화가 성취되지 않으면, 구연방정부의 인구통계적 연금하락 요소로 인해 최소 15년동안 임금에의 연계가 미루어졌을 것이다.

구연방정부 연금개혁법안은 순봉급 연금수준 64%까지의 하락을 예상했다. 새 구상 이후에는 67% 선에서 안정된다.

낮은 연금 적정화는 신연방주들에서 연금자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신연방주들을 위해 통일적으로 실시된 연금 적정화의 기초는 전체독일의 인플레이션 비율이다. 신연방주들에서 최근에 서독지역보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낮으므로, 이러한 단일 측정조건으로 동독지역 연금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물가에 따른 적정화로의 전환은 특히 낮은 연금과 높은 보충 총액을 가진 연금자들에 있어서 아주 미미하게 혹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00년 그리고 2001년의 협소한 연금 적정화로 인해 보충 총액의 감소만이 지연될 뿐이다.

1990년 이래 지속되던 연금 동등화 과정이 2년동안 중단될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연금의 발전으로 이미 평균적 수량 총액의 3배가 되었다. 말하자면 경제·통화연합에 500 마르크와 600 마르크 이었던 남성의 연금수준은 1999년에는 1,926 마르크로 상승했다. 여성은 무엇보다도 노동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1,167 마르크로 구연방주들의 여성보다도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연금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즉, 물가상승의 감소이후에 이로써 1990년 6월 30일 이후 신연방주 연금자에게 평균적으로 약 70% 이상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금수준의 사회정책적인 평가는 신연방주의 연금은 당사자들에게는 대부분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배경하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구연방주에서 흔한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다른 사적 예방조치(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들에서 나오는 수입이 신연방주에서는 그만큼 규모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2 추가·특별구호체계를 위한 권리의 법정연금보험으로의 전이

연방헌법재판소는 1999년 4월 28일에 권리전이법(AAÜG)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연방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된 영역에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연합여당의 권리전이법(AAÜG)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증명되었다. 사민당(SPD)뿐만 아니라 녹색당(Gruenen)도 그 규정의 헌법상 위험을 경고했었다. 이러한 위험은 예전 연방정부가 특히 보상한계규정으로 직면했던 것이었다.

연방정부는 포괄적 판단근거의 집중적 분석과 평가 후에 새 규정을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때 이와 연관있는 1999년 8월 3일의 연방사회재판소의 판결이 고려될 것이다.

2.3 노인의 사회적 참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전체 인구중 60세 이상이 오늘날의 20%에서 2030년도에 약 35%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기간에 줄어드는 출생률에 비해 늘어나는 평균수명은 이러한 격심한 노화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90년대 전반에 급격한 출생률 감소이후 다시 출생률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노화과정은 근본적으로 신연방주에도 해당된다. 신연방주에서 평균수명은 구연방주보다 더 낮은 하지만, 그러나 개선된 생활환경으로 인해 10년에서 15년 후면 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연령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통독정부는 노인들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할 것이다. 오늘날 생업활동후에 인생의 제3기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성하고 활동적이며 계속해서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조직체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대간 대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세대간 연대의식은 모든 노년층이 자신들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주요 요소이자 연결고리이다.

사회는 노인들의 참여와 경험을 도외시할 수 없다. 여기에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스포츠와 관련된 참여가 내재해 있는데,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최근 독일연방공화국에는 노년층 활동에 있어서 폭넓은 층이 형성되었다. 노인들은 자체기구 내에서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인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자발적 단체를 형성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부분적으로 구 서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나 혹은 연방전체에 걸친 여러 기구들 내에서 동등한 위치를 찾았다.

노인사무소의 모델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써 노인들의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장려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문화와 교육, 건강과 공공산업 및 주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명예직 활동영역이 생겨났다. 그 예로 튀링엔주는 노인들에게 개방된 일자리의 새로운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튀링엔주는 노인사무소 건립이나, 재교육 혹은 경험교환을 주 전체로 결합시키는 일 등을 위해 노력한다. 연방가족노인청소년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할 것이다.

2.4 노년층의 주거

연방정부의 노인문제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의 테마는 “노년층의 주거”로 이것은 노인들의 독립성과 만족감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통독에서는 거주 수준에 있어서 구 서독에서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택의 수선과 현대화 그리고 복구에의 활동을 철저히 지속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것과 연관된 경제적 부담이 극소화되어야 하며 위험도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특히 새롭게 공표된 “노후의 자립적 거주”이라는 모델프로그램으로 노인문제 보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연방주의 상황도 역시 고려하고 있다. (예: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택의 개조, 보호자를 두는 주거, 시골에서의 구조적 문제 등) 또한 연방주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에 상응하는 주택마련상담이 연방차원에서 지원된다.

2.5 노인을 위한 새로운 체제

노인정책에 있어 특히 중점은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대략 1,150개의 노인간병요양소가 있으며, 대략 100,000명의 노인들이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간에 의한 양로원의 인수는 꽤 진전되었다.

수많은 주택의 신축과 현대화를 통해서 양로원의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간 계속되어질 것이다. 주택최소건축규정은 통독조약에 따라 균등화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동시에 특히 기존의 대상물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신연방주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외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의료보험조합 직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999년 7월 1일 까지 신연방주에서는 대략 2,850개 긴급 구호시설이 인가되었다.

또한 이때 노인들을 위한 법률적 규정개혁에 있어서 현저한 정체상태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 작업은 노인보호법 초안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이 법으로 연방정부는 노인보호교육에 대한 연방통일적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1990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때 구연방의 다양한 규정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이제 마련된 연방통일적인 규정에 의해 해결된다.

2.6 자발적 참여의 촉진

80년대 중반에 구 동독에서 첫 번째 자력구제단체들이 생겨났고 특히 이것은 교회의 주도하에 생겨났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시민들 사이 자력구제사상

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졌다. 그 때까지 산발적이던 사회복지의 자력구제활동들은 하나의 자력구제운동으로 귀결되어졌다. 5년간의 “신연방주의 사회적 자력구제에 대한 지원”이라는 모델프로그램 내에서 연방은 이 운동을 지지했다.

자력구제연락소 형태로 자력구제 인프라구조를 설립함으로써 또한 전담직과 명예직 활동자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과 자력구제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 조성으로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와 각 주로 하여금 자력구제지원을 자신들의 과제로 만드는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추어 졌다.

통독 연방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거듭 노력하였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사회적 참여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여를 차단하는 법률적·제도상의 장애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예직 활동의 참여를 규정하는 현존 조건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점검된다. 여기에는 조세상의 문제점들과 책임법상의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즉 근무면제와 같은 문제도 포함된다.

2.7 복지후생사업의 체계구축

신연방주에서 자유로운 복지후생사업은 평화적 혁명 이전에는 정치적 범위 내에서 단지 부차적으로 교회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신연방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근무를 통해서 시민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1996년 초 자유복지후생사업단 근로자조합의 보고에 의하면 복지후생사업의 대표적인 여섯 개 연합(노동복지사업단, 독일카톨릭 사회복지사업단, 독일 기독교 교회 구제사업단, 독일 동등한 복지후생연합, 독일 적십자와 독일 유대인 중앙 복지사업소)은 신연방주에서 131,013명의 전담직 노동자가 407,558개의 침상 및

자리의 보호시설을 갖춘 14,491개의 기관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으로 1993년 이래로 보호시설의 수용능력은 거의 이전의 두 배로 되었으며, 각 시설의 수는 50%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근로자 수는 대략 2/3배 증가했다.

복지후생사업협회에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현대식 구축과 증축을 위해 사용되어진 회전신용기금(Revolvingfonds)은 신연방주에서의 다급한 시설보완과제로 인해 100만 마르크로 증가했다. 신연방주에서 1998년 말까지의 회전신용자금에서 최고 1억 7,720만 마르크까지 지출되어졌으며, 그리하여 총 175개의 조치들이 9억 3,600만 마르크의 비용으로 지원되었다.

3. 광범위한 건강보호, 재정지원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공공의 의식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를 위해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선 국민보건시설의 발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구 동독의 민주적인 출발 10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었다.

물론 동독의 국민보건체제는 급속한 속도로 구 서독의 상태에 부합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때 다양한 의료진의 더 나은 공동작업과 종합병원이나 외래진료 시설에 있어서의 외래와 입원영역에 대한 더 나은 협력과 더 나은 경영상의 국민보건복지 등을 꼽을 수 있는 동독의 보존된 보건체계의 구조도 사라졌음을 알고 있다.

구 동독 국민보건체계 중, 단지 몇 개의 보존된 요소들만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예로 구 동독의 암리스트는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재정적인 지지를 받아 계속 보존된다.

적응과정의 이러한 빠른 속도는 다양한 접근을 위한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

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급속한 진행과정은 몇 년 내에 동서독 관계의 평준화에 있어 현저한 진척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개정된 부분 중 중요한 것은 세분화된 의료보험시스템의 도입과 개업의와 치과의사(그에 상응하는 협회와 의료보험조합의사의 연합을 포함해서)체계의 도입, 약국의 민영화, 그리고 수요 입장에서 병원부문의 재구조화, 요양기관과 재활기관의 설립, 그리고 외래 정신병원의 설립과 지금까지 소홀했던 환자를 위한 보호체계와 복지체계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신연방주에서 국민보건복지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어질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부와 서부사이의 질적 차이는 없게 되었다. 그 예로는 병원과 의원에서의 기계적인 장비뿐 아니라 모든 필요한 약과 기타 의료품들을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보장체계 특히, 법률적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신연방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분없이 최고 수준의 의학적인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력이나 개인적인 수입이 책정기준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신연방주에 있어 특별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무 한계에 있어 혹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 추가지불금액, 의사나 기타 치료직의 사람들에게 요금규정에 있어서 그러하다.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 때문에 법정의료보험(GKV)에 있어 여러 가지 권리자 그룹이 유지된다. 그러나 첫 해의 급격한 경제 성장률에 따라 동시에 자동적으로 평준화되길 기대했던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과 특히 구조적 실업의 결과로 수입면에 있어서의 독일의료보험조합이 갖고 있는 문제는 법정의료보험재정강화법으로써 고려되어졌다. 이 법률은 구연방주의 개별적 의료보험 유형에 따라서 또한 1999년부터 통일된 경제능력조정을 통해 동독의 의료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동독지역 의료보험조합 수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복지와 그에 상응하는 보장제도의 계속적 발전이 신연방주에서 보장되

어야 한다.

새 연방정부는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나 생활측면에서 생겨나는 격차를 계속 균등화시키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생각한다.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써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정의료보험 연대강화법에서 모든 법정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이미 알려진 개선조치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법정의료보험재정강화법에 2001년까지로 규정된 동서독 의료보험조합 사이의 재정적 지원기간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신연방주에서 의료보험조합은 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견지하기 위해서 경제시장조건과 노동시장조건으로 인해 부실한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보장받았다.

3.1 보건복지

《외래진료》

신연방주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외래진료의 질은 오늘날 구 서독에서의 질과 비교될 만한 수준이다.

신연방주에 있어서 의학적 진료의 90%이상이 총 41,449명의 의사와 11,144명의 치과의사들에 의해(이것은 340명의 주민에 1명의 의사가, 1,268명의 주민에 1명의 치과의사가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당된다. 구 서독에서는 통계학상으로 282명의 주민에 1명의 의사가, 1,336명의 주민에 1명의 치과의사가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 서독의 의사 밀집도가 큰 것은 부분적으로 특히 인구와 공장 밀집지역에서 초과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연방주가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

전체 41,449명의 의사 중에 17,659명이(1991년엔 대략 5,400명 이었음) 자신의 병원을 개업했고, 19,897명은 종합병원에 그리고 3,894명은 연구 혹은 행정직에 근무한다.

1990년 이래 비로소 가능해진 개인병원 설립과 서독의 지원결과로 신연방주에서 새롭게 개업한 의사들은 대부분 현대적 의학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의료기 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진단·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래진료의사들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확대시켰고 이는 환자에 의해 감사히 받아들여졌다.

《입원진료》

투자에 대한 보충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입원진료의 복지 수준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연방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신연방주 병원을 위한 투자로 한 해 최고 7억 마르크의 자금지원을 보장했다. 각 주들은 이에 최소한 같은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외에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보험은 매년 대략 3억 5천만 마르크의 비용을 조달한다. 최소 전체적으로 볼 때 210억 마르크로 추정되는 이러한 공동프로그램은 신연방주에서 입원진료가 2004년까지는 구 서독지역의 수준에 다다를 것을 보장한다. 병원 투자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은 짧은 기간에 이미 - 부분적으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까지 약 30억 마르크에 이르는 연방자본의 투입은 주와 의료보험에서 투자한 추가자본을 포함해서 병원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개선사항 외에도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투자된 100만 마르크 마다 6개에서 8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정신병치료》

통일시점의 신연방주에서의 정신병치료는 1960년대 말 구연방주에서의 정신병치료 개혁의 시작시기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연방정부는 수많은 조치를 통해 긴급한 구조전환과정을 지원하였다. 동독재건 공동작업, 자치단체의 자금대출계획 혹은 병원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계획과 같은 주요투자지원계획 외에도 전문화프로그램과 모델지역계획의 지원 및 외래 및 보충적 정신병진료 영역에서 개별모델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입원치료분야에서의 보충적 조치들을 포함하여 14개지역에서 상존하는 외래, 보충, 재활치료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결함을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 모델지역계획은 1995년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이를 위한 재정은 약 2,580만 마르크가 동원되었다. 이 조치들은 현대적 정신병원 진료로 구조전환하는 과정을 진척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의약품조달》

신연방주에서는 대략 2,000여 종의 의약품이 있고, 이것 또한 심각한 조달상의 문제에 놓여있는 반면, 오늘날에는 50,000여 종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 이전 14일 간의 약국에서의 의약품 지급은, 지금은 구 서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여러번 이루어진다.

또한 의약품 공급의 개선에 기여했던 과거 국영약국의 민영화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구 서독지역에서와 같은 동등한 구조가 구축되었다. 현재 20,400명의 종사자를 가진 3,200개의 민영약국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신연방주에서 4,890명의 주민당 1개 약국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구 서독지역에서는 3,640명의 주민당 1개의 약국이 있었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의 조달을 보장하고 있다.

《공중보건서비스》

보건분야를 떠받치는 세 번째 지주인 공중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신연방주의 수준은 양적·질적 면에서 구연방지역에서의 수준과 일치하고 있다. 모든 행정구와 지방관청에 속하지 않는 도시들에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 보건소비자보호, 국민보건의식계몽이나 시민상담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보건조직이 생겨났다. 그동안 의약품과 생필품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 처음의 질적인 차이나 무역제한 만이 전 유럽에 걸쳐 제거된 것이 아니라, 질과 안전에 있어서도 유럽과 같은 수준이 보장되었다.

3.2 장애인 돌보기, 재활 및 적응

《보호시설》

1990년 신연방주에서의 특별한 상황은 약 85,000개의 보호병상의 전체적 숫자를 2002년까지 수요량에 근거하여 새로 짓거나 근본적으로 정비하여야 되는 점에 있었다. 대부분의 보호병상은 건축자재와 설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적어도 심각한 수준의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상태의 병원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를 진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보호병상의 상태는 병원최소건축규정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축이 더 바람직했다.

이러한 복구의 필요성은 1994년 연방의회 입법과정에서의 간병보험법 처리에 있어서도 이미 인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은 간병보험법 52조에 따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에서도 주민의 입원치료나 부분입원치료, 혹은 완전입원치료의 수준이 여타 연방지역내 보호수준으로 가능토록 1995년에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약 8억 마르크 수준의 재정지원을, 즉 총 64억 마르크를 보호시설 투자에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보건부에 의해 승인된 개개 연방주에 대한 투자계획은 1999년 7월 1일까지 70억 마르크의 투자액을 794개 개별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승인된 각 사업을 포함하여 각 주에 대한 투자액 분배는 부록의 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간병대상자의 간병상황개선을 위한 모델프로그램의 틀안에서 1991년 이래 64개 사업에 1,280억 마르크가 외래진료시설, 일일 간호 혹은 단기간 간호나 입원시설을 위해 지출되었다.

계속해서 양로원과 요양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 측에 의해 많은 노력들이 경주될 것이다.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 치료의 수준 또한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수준에 명백히 미달되었다. 그래서 독일통일은 장애인의 재활과 적응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로 가져왔다. 우선 통일적, 법적,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 또한 독일 전역에서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삶의 여건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에서는 수많은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시설이 연방의 지원을 받아 사회보장 담당자들에 의해 설치되었다. 특히 12개의 의학적 치료 시범시설이 총 1억8,700만 마르크 수준의 지원자금에 의해 약 3,000여석의 재교육자리를 가진 7개 성인장애인 재교육을 위한 취업지원교육시설, 약 2,380명의 교육이 가능한 장애청소년 초기교육을 위한 8개 직업교육기구 등이 약 18억 마르크 금액에 의해 지원되었다.

그 사이에 신연방주에는 172개의 승인된 장애자용 작업시설이 있었는데,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약 27,000명의 장애인이 여기서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거나 능력에 적합한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노동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시설의 건립 및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숙소의 건립과 확충을 포함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10억 마르크 이상을 투입하였다.

《사회적 재활》

연방사회지원법(BSHG)이 의도한 장애자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연방주에서는 아직 곳곳에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없었던 사회적 시설과 서비스의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연방주에서는 몇 개의 제한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BSHG에 의한 장애자들의 적응지원을 위한 법적 청구권은 사회부조 시행기관이

이에 필요한 시설과 조식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한 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부조 시행기관들에게 가능성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정비와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장 큰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정신적 장애자나 복합 장애자를 위한 시설분야에 있다.

앞으로 장애자 수용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입원시설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범위의 개방적 지원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사회부조법 제3의a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원 이전의 응급 조치”의 원칙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구현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 영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설비의 구축시 입원 설비와 바람직한 상황에서 동시에 공급개방적 지원이 만들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법정 의료보험에서의 재정

기본적으로 사회법전 제5권(SGB V)-법정 의료보험-은 신연방주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 실태가 균등화될 때까지 법정 의료보험은 몇몇 재정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된다.

- 분담금 측정한계는 신연방주에서 낮게 확정되고 1999년 1월부터 5,400 마르크에 달한다.(구연방 6,375 마르크)
- 선의의 피해한계는 신연방주에서 지금도 구연방보다 낮다. 그래서 독신자는 1999년 월 소득이 1,484 마르크(구연방 1,764 마르크)까지 정해진 추가지불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또한 예측 가능한 고유부담 한계(소위 과대요구조항)도 구연방주보다 낮다. 그러나 의약품과 구호재에 대한 추가지불금 면제

에 있어서는 1993년 1월 1일부터 의약품과 구호재의 가격수준이 통일되어 구연방주의 소득한계가 신연방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독신자의 경우 월소득이 1,764 마르크 이하인 경우 추가지불금이 면제된다.

- 병원 입원치료, 재활치료, 산모 간호에 대한 추가지불규정(신연방주 매일 14 마르크, 구연방주 매일 17 마르크)과 예방조치 및 재활조치에 대한 추가지불규정(신연방주 매일 20 마르크, 구연방주 매일 25 마르크)을 제외하고는 연방 전역에 걸쳐서 동등한 규정이 적용된다.
- 신연방주에서의 법정의료보험(GKV) 재정확충은 통일 후 처음 몇 해동안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도 분담금 수준은 서독법정 의료보험 수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신연방주 의료보험은 동독법정의료보험이 1998년 말 약 17억 마르크의 부채를 갖게 될 정도의 높은 손실을 이겨내야 했는데, 이 부채는 물론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분배되었다. 당연히 평균적인 분담 수준도 서독법정의료보험 평균상위층 분담점 0.35사이의 13.87%에 머물렀다.

구연방주와의 비교에서 특별히 높은 실업률, 높은 연금자 비율, 낮은 자유 보험자 등이 수입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출란에는 병원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담영역, 바로 그 부분에서 매 보험자마다 구연방주 수준을 부분적으로 현격히 초과하였고(예 : 의약품, 교통비, 행정비), 마찬가지로 동독법정 의료보험의 재정상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1998년 매 법정의료보험 구성원의 보험료 변화비율(서독 +1.66%, 동독 -0.48%)은 연대강화법의 규정에 따라 또 병원진료와 계약직 의사의 영역에서 가격합의치료제, 치과치료, 병원운송 등 1999년 지출이 많이 증가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다.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서의 상이한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신연방주에서의 의료보험수입 결손증가를 막기 위해서 계약직 의사가 돌보는 영역을 위해 법정의료보험재정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도입된 상이한 기본급 상승의 재정이전을 통해 안정화시켰다.

2000년부터 법정의료보험의 개혁을 위한 연방정부 법률초안과 더불어 신연방주에서의 분담의무 소득의 불리한 발전을 효율지출과 개개의 지출영역에서 자동적으로 효율발생과 지출영역에서 낮은 상승으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지속적 발전이 시도된다.

4.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의 여성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통해 신연방주 여성의 상황은 특히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존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새 연방정부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서독지역에서보다 신연방주에서 여성의 삶의 설계는 장기간의 직업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는 역시 오늘날도 많은 여성에게 해당되며 경제적 상황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서방 국가들과 유사하게 전통적인 가치·역할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부담이나 전환으로의 강요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유 및 기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동서독 간의 결혼연령의 평준화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의 창업에서도 반영된다. 동·서독지역에서 여성의 정당한 이해에 부합하기 위해서, 직업활동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과 가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평등정책은 신연방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닌다.

4.1 사회적 변화 속의 여성

다원화된 사회구조의 발전과정 속에서 신연방주에서는 통일변혁기 이후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자발적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 직역이 수도 동독지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그간 약 1,000개에 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신·구연방주 여성간의 경험교환을 장려하는 여성단체의 조치를

지원한다. 여성이 주위에 자신들을 위한 조직, 기관 그리고 자력구제단체의 제안을 관망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여성을 위한 정보거래소는 신연방주들에서 계속하여 커다란 호평을 얻고 있다. 모든 행사의 절반 이상이 1998년 신연방주에서 개최되었다.

신·구연방주들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균등화시키는데 있어서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외에도 특히 학교 수업에서 의식형성방법을 통하거나, 새로운 본보기를 선전함으로써 아직도 고착화된 역할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표는 동등화된 파트너쉽, 즉 양성을 위한 정치이다. 이때 미래지향적인 직업에서 여성을 위한 새로운 활동분야를 개척하는 것과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방의회임용법의 개정을 통해 결정권을 갖는 고위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행동계획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구동독에서는 금기화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특별한 구조장치도 없었다. 지난 몇 년간 비로소 이 문제가 신연방주에서 논의되고 그 범위가 인식되었다. 그래서 여성의 집 내지 여성보호용 주택건설은 통독 이후에 120만 마르크의 후원자금으로 지원되었다. 현재는 신연방주에 120개 이상의 여성의 집이 존재한다.

새 연방정부는 금년 가을에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 남녀 평등업무원, 외국인·사회·청소년 관청 및 연방·주·지역사회 차원의 관청과 상담소간의 협력에 중점을 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에 걸친 구체책의 네트워크화와 가해자 과악의 집중화 및 공공의식의 민감화 등이 속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여성에 대해 주택의 배분을 간소화하는 등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가정내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개선된다. 폭력적 배우자가 가족과 여성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민사법적인 보호규정 또한 태도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폭력행사자에

대한 조사 및 체벌절차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해야만 한다.

사회적 예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경멸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든 조치들을 포괄한다. 비폭력적 행동은 부모와 교육자, 교사나 대중매체들이 '폭력없는 갈등해소'를 통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다.

4.3 경제적인 개혁 내의 여성

독일에서의 여성을 위한 인력시장 상황은 1998년 서독과 동독의 주들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인력시장적 정책수단을 투입함으로써 개선되었다. 1998년 전독일의 연평균 여성실업률은 전년의 14.5%에 반하여 12.8%였다. 서독의 실업률 감소는 약 1.3% 그리고 동독에서는 심지어 약 2.5%로 기록되었다. 신연방주에는 그 외에도 남성에 비해 본질적으로 높은 여성실업률의 높은 격차가 줄었다. 여성의 실업률은 1998년 연평균 21.8%(1997: 22.5%), 남성은 17.4%(1997: 16.6%)이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여성이 실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정도에 따라 고용정책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법전 제3권 제8조(§8 SGB III)의 목표가 공공근로에서나 재교육 지원에 있어 초과달성되었고, 구조적응조치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여성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업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직업활동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취업률은 구동독(60.5%)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73.5%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직업적 평등화는 정부임무의 주요 관심사이다.

“청소년 실업의 극복을 위한 긴급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젊은 여성의 교육·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긴급프로그램의 모든 조치에 있어서 젊은 여성

들은 재교육자리 희망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리고 실업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4.4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세계에서 평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는 1999년 6월 말 마지막 내각집회에서 가결한 「여성과 직업」이란 프로그램에서 일원화된다.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직업에서 여성의 교육기회개선
- 여성창업시 착수자본과 외국자본 조달상의 불이익 해제
- 유동적 노동시간 규정과 시간제 근무의 조건개선
-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의 조화를 지원
- 여성의 수입·임금차별의 저지
- 견습과 연구에 있어 여성비율의 증대

4.5 여성의 창업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직업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창업을 위한 경제연합이나 경영에 있어, 후임 규정을 위한 공동사회자발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은 직업적 독립성을 위한 시작에 있어서나 기업 후속규정에 있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와 연합, 은행과 같은 전형적인 기관에서도 여성 특유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사회자발단체의 핵심은 공동 기업거래소이다.

4.6 자립여성이 지역의 구조발전을 형성한다

특히 불이익을 당하고 성취하기 힘든 여성을 겨냥한 인력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방가족여성부는 독일연방여성단체의 모델 “자립여성이 지역의 구조발전을 형성한다.”를 지원한다. 신연방주 주단위 지역에서의 여성을 위한 인력시장 문제와 특히,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프로젝트기관은 해당지역 주여성단체 업무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제 막 시작된 SELF 프로젝트는 주단위 지역에서 창업자를 위한 접근 용이한 상담제공자이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연방농업부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는다. 현재 이 프로젝트 내에서 44개의 창업계획(1998년 12월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다.

4.7 여성의 직장생활로의 편입을 돕는 다른 자발단체들

연방과 신연방주들 그리고 주단위의 자발단체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적 경제원조”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체 업무의 방법으로 경제원조를 위한 전형적 기구는 주단위 경제를 강화하고, 특히 여성의 자격취득과 사회적 편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노이란트(Neuland)는 역시 1998년 이후부터 장려된 모델 “혼자사는 무주택 여성의 직업적 장려” 로써 여기에 가담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특별히 집 없는 여성들을 위한 긴급구조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실시된 모델시도의 결과는 목표집단이 소생되고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경험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목표는 무주택자의 구호를 직업적 재편입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슈베린(Schwerin)에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경제를 위한 교육기구와 함께 여성연금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참가자들을 제1·2 고용시장에 중개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자격취득 조치가 실험되고 있다.(일반고용시장을 제1고용시장이라고 하는 반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취업이 이루어지는 고용시장을 제2고용시장이라고 함)

5. 청소년 및 가족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가족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전 독일 가정들이 가진 폐해를 없애고, 가족들의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조치들에는 업무와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세대와 성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것 등이 담겨 있다.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어떤 곤궁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

5.1 모든 가정의 승인과 지원

《변화하는 가정 형태》

인구의 대다수가 아이가 있는 가정 형태로 살아간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런 가정형태의 비율이 서독과 동독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다. 통독에서는 1991년과 1996년 사이에 5년 동안에 이런 가정형태 비율이 64%에서 59%로 하락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로 1989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결혼률을 들 수 있다. 통독에서 90년대 초에 결혼률이 급격히 떨어진 이후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결혼률이 다시 약간 상승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다시 구연방지역에서 처럼 결혼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90년대 초에 출산률이 엄청나게 하락 한 후에 출산률은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연방지역에서는 약간의 증가 추세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산률을 보였다. 신연방주에서는 1995년부터 다시 증가한

출산률이 1997년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그러나 이는 서독의 증가율에는 못미치는 것이었다.(구독일: 1,000명의 인구 당 10.7명의 어린이, 동독은 6.5명의 어린이)

생활 형태에서의 동서독의 차이점은 상당 부분이 동독에서는 지금까지는 더 젊은 나이에 대부분이 가정을 형성하고, 대부분이 어린이를 가지며, 동독 시절에 극도로 높았던 이혼률과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향 확산 등의 결과이다. 동독의 부부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새 연방주에서는 결혼을 안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사는 부부의 비율이 서독보다 훨씬 높다.

동독과 서독의 동등화는 서서히 일어난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통일 이후 10년 동안에도 여전히 가계의 주수입을 담당하는 아버지와 일을 하지 않거나 부업을 하는 엄마 그리고 주로 개인적으로 양육되는 아이로 구성된 가정 형태가 나타나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집밖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풀타임 직업을 가진 두 부모들로 이루어진 가정 형태와 젊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생활 형태가 지배적이다.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의 형태 또한 바뀌고 있다. 다중적인 사회 속에서 생활 스타일이나 가정 생활형태의 다중성도 반영되고 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전통적 가정 이외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가정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든 가정 형태는 비록 지원 급부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이가 있는 곳은 곧 가정이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인 책임감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적인 가정이든, 양부모의 가정이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정이든, 돌보는 가정이든,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아이와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가든, 그 형태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법적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독일연방정부는

가정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서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있다. 목표는 가정의 형태를 법적으로 동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 단체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정후원과 가정상담》

가정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화적 혁명이후에 우선 가사일과 가족 관심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구조가 구축되었다. 동독에 연합구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연방중심의 네 개의 가족연합(독일 가정지원단, 신교 가정문제해결공동단체, 독일 카톨릭 가정 지원단, 독신부모협회)에 보조재정으로서 약 2백5십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1994년부터 가정지원단체는 독일 전역에서 지역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의미와 함께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가정정책의 실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자신의 문제여야 한다. “우리는 참여한다.”라는 모토아래 가정지원단체의 회원들, 자발적 부모들의 단체, 어머니들, 가정센터, 이중국적의 가정과 다른 가정자력구제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있어 함께 도우며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연방 전체에 걸쳐 활동하는 단체와 기관들에게 약 150만 마르크를 해마다 지급 하고 있다.

가정이 바로 생활 공간적인 영역에서 곤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짐을 덜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와 상담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가정우호적인 보호, 가정 센터, 가정상담소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어린이와 가정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자로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주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결혼, 가족, 생활 및 양육상담과 가정형성에 대한 상담은 직접적으로 목표설정, 지원, 상담 및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

므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도 가정중심상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연방은 결혼, 가족, 생활상담이란 목표를 계속 발전시키고, 연방차원의 상담담당기관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의 자질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 있다.

Löbau라는 단체는 “낙태와 관련하여 산모들의 상담을 위한 상담기준 발전”을 위한 연합 모범계획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계획으로 상담작업과 연결된 작업은 계속 발전되었고 학계의 도움과 상담 하에서 현장에서 바로 시험되었다. 이 계획은 1998년 이후 3년에 걸친 계획단계를 위해서 재정 지원되었다.

연방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신연방주에 가족유원지를 설립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3,300만 마르크를 투입하였다. 지난 몇 해 동안 공익을 위한 가족휴양지로 사용되기 위해 공급된 집들은 우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가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2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개선

동서독 가정의 경제능력은 여전히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서로 비슷해지고 있다. 서독의 많은 가정들은 수십년에 걸쳐 그들의 수입과 재산축적으로 전체 경제발전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특히 주택사유화에 관여하였는데 주택을 사유화하는 것은 동독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때문에 동독과 서독 가정생활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의 수입과 지출의 무작위 추출검사에 따르면 27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은 구연방주에서는 지불소득 및 세와 자본에서 나오는 수입을 포함한 평균 순수입이 5,880 마르크, 신연방주에서는 4,270 마르크였다.

동독과 서독에서 독신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양진영에서 모두 같은 수준으로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에는 독신부모 중에서 서독에서는 49%, 동독에서는 78%가 한달에 3,000 마르크 이하의 수입이 있었다.

새 연방정부에서는 가정과 어린이들의 물질적,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가정급부조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자녀수당(Kindergeld)을 이미 14대 입법부 임기의 시작 때부터 월 30 마르크 인상하였다.

1999년 1월부터 자녀수당(Kindergeld)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에게는 월 250 마르크, 세 번째 아이에게는 월 300 마르크, 네 번째와 그 이후의 아이에게는 월 350 마르크가 지급된다. 약 1,810만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약 1,080만명의 권리자에게 자녀수당(Kindergeld)이 지급되는데, 이들 중 약 18.5%는 신연방주에 81.5%는 구연방주 지역에 산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출은 1998년 회계연도에서는 약 501억 마르크에 달했다.

헌법에 제시된 대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그 이상의 세금 공제는 계획된 가정지원법 범위내에서 실현될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어린이 부양을 위해서 획일적 면세액이 1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3,024 마르크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심적인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연령에 제한없이 보호 면세액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수당은 어린이 부양을 위한 면세액에 계산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자녀수당이 2000년 1월 1일 부터 매달 250 마르크에서 270 마르크로 20 마르크 인상된다.

계획된 가정지원법은 불가피한 재정정책적 조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과세를 위해서 헌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다.

자녀를 위한 교육의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실행은 두 번째 법제정 절차에서도 2002년부터 실현화할 목적으로 제외된다. 연방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법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할 것인데, 이 법의 윤곽은 교육지원의 개혁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현존하는 재정 정책적 영역에서 가정급부조정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다른 부모측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사는 아이를 위한 생계비를 불충분하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편부모는 생계비보조법에 의거하여 특별하게 국가로부터 생계비보조금을 받는다.

생계비보조법에 따른 보조금이 약 52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들 중 약 23%는 신연방주에 그리고 77%는 구연방주에 산다. 지출은 1998년도 회계연도에는 약 1조 6천6백7십억 마르크에 달했다.

양육비와 양육휴가를 보장하는 법인 연방자녀양육비법은 1991년 이래로 신연방주에서는 1991년에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그때부터 신연방주에서 양육비와 양육휴가는 구연방주에서와 같이 가정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1997년에 새로 출생한 자녀를 가진 가정의 약 94%가 양육비를 받았는데, 이는 약 75만 가정(구연방주에서 93%, 신연방주에서 96%)이다. 아이의 세 번째 생일날까지 가능한 양육휴가는 여전히 독일 전체에서 아주 강력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1997년에 구연방주에서는 권리가 있는 가정의 약 95%와 신연방주에서는 약 94%) 1997년 해당 가정 중 서독에서는 약 48%, 동독에서는 약 80%가 600 마르크의 양육비를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받았다. 연방노동청에 속한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의 1997년 조사에 따르면 동독 여성들은 서독 여성의 3배 가까이 2년간의 양육 휴가 후에 자신의 직업에 복귀하고 있다. 이 이유는 별이가 없다는 것, 더 높은 능력지향,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서독에서 보다 더 나은 어린이 양육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육휴가에서 아버지들의 비율은 연방 평균(약 1.5%)보다 약간 더 낮다.

젊은 부모들이 파트너끼리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가지려는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좀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소망은 연방자녀교육비법을 개정하려는 의도의 범위내에서 고려될 것이다.

5.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회

독일 양 진영의 통일 이후에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독일의 공동적 미래

를 형성해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동독과 서독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발전을 지지해 주고 불이익을 저지해줄 수 있는 도구적인 틀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실업의 극복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5.4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의 수립과 수행

연방의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은 독일 통일 이후 수년 동안 신연방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과제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었다. 독일청소년기구(DJI)에 의한 1992년과 1997년의 청소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 과정이 사회정책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에서의 출발상황과 변화과정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차이점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베를린을 제외한 5개의 신연방주의 지출 금액이 1996년에는 약 79억 마르크로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총액의 23%에 달한다. 1998년 6월에 제출된 DJI의 “청소년 선도과 사회적 변화”라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신연방주의 사회법전 제8권(SGB VIII)의 영역에서 재정적·전문적 발전을 증명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는 서독수준을 부분적으로 능가하지 않는다 해도 서독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신연방주의 청소년청 건설은 그 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선도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연방의 지원 프로그램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유 단체의 건립과 확충(AFT)”과 “적대감과 폭력퇴치를 위한 프로그램”(AgAG)을 통해서 혹은 주의 프로그램 및 노동청의 지원을 통해서 그 다양성에 있어 구연방주의 수준을 부분적으로 능가하고 있는 자유 단체가 생겨났다.

모든 연구결과가 연방의 특별프로그램에 의해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를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극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선도규정의 구조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듯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당국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연방주에서의 조치들”과 같은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연방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선도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1995년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약 1,015만 마르크(그 중에서 1998년에 230만 마르크가) 63개의 조치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시작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체제의 설립이 계속 공고히 되고, 여러 형태의 시범적인 청소년 선도사업이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신연방주 시골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제공과 성과가 부족한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그룹을 위한 실험적 업무 형태를 발전시키고 실험하려는 12개 실험계획이 주로 연방자금에서 지원되었다.

5.5 일일탁아시설

1990년 이래로 신연방주에서는 출생 감소 때문에 탁아시설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아소, 유치원, 방과후 학교의 자리에 대한 수요가 -서독과는 다르게- 항상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다. 특히 전일제 유치원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는데, 이는 가족과 직장을 여전히 이전처럼 조화시켜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 서독에서도 3살 이하 및 취학아동을 종일 돌보아 주는 시설 공급을 동독 수준에 맞추어 확장시킬 계획이다.

보육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신연방주의 유치원에서 교육학적 업무를 좀더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연방 청소년부에서 장려한 모델프로젝트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1997년에 완성된 “어린이들의 상황” 이란 프로젝트가 신연방주 전체에 커다란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 Brandenburg, Sachsen, Schleswig-Holstein이 참가하고 있는

“전일제유치원” 프로젝트는 지금도 이미 다른 기관의 교육학적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6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의 만남

독일의 내적통일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정치적 청소년 교육 담당자들의 중심 테마인데 이를 위해 1999년 어린이 및 청소년지원계획의 범주에서 약 2,100만 마르크가 지원된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분야에서는 1999년에도(총규모 약 1,460만 마르크) 동서독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한데 모으는 다양한 문화적 경연을 펼친다. 그 예로 연방차원에서의 경연대회인 “청소년이 연주한다” 같은 것이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의 청소년간 만남은 신연방주과 구연방주의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는데 기여한다.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국가적 특징들이 상대화된다. 국제적 교환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간 만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연방주의 프로그램들을 특히 많이 고려하였다. 독일-폴란드 청소년 단체는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에 가까운 지방에 지원의 중점을 두고 있고, 체코와의 청소년 교환제도에서는 국경에 인접한 협력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적 만남이 국가간의 장애극복을 돕는다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1999년 11월 9일 베를린에서는 대대적인 유럽 청소년축제가 열렸다. 연방가족여성청소년부는 연방수상도 참여하게 될 이 계획을 유럽 청소년들의 공통적 미래를 위한 긍정적 시도로서 지지하고 있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각각의 주정부 및 운영단체들과 공동으로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청소년 교육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유스호스텔 그리고 청소년 숙박시설을 지원한다. 이 지원의 도움으로 1990년 이래 1998년까지 약 4,650만 마

르크를 투입하여 60개의 설립계획이 지원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약 2,570만 마르크가 유스호스텔에(51개 조치) 2,080만 마르크가 청소년교육과 청소년 만남의 장소(9개 조치)에 쓰였다.

1998년 총 740만 마르크로 두개의 청소년 교육소와 청소년 만남의 장소 그리고 두개의 유스호스텔 신축과 수리가 이루어졌고, 한 개의 청소년 교육소와 청소년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한 개의 유스호스텔 개조 및 현대화가 새로 시작될 수 있었다. 유럽 청소년 만남의 장소가 착공된 후 “1999 유럽 문화도시-바이마르” 축제해에 완공된 것은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주목받았다.

5.7 청소년 실업 문제 제거

1998년에 서독지역 청소년 실업이 처음으로 그 이전 해에 비해 감소된 반면, 동독에서의 청소년 실업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청소년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원조의 중심은 동독지역에 놓여있다. 청소년 선도는 긴급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전되는 단계에서 보호와 상담의 형태로 사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핵심적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들 특히 독일 출신이 아닌 청소년에게 도움이 미치지 위해서는 청소년 선도는 새로운 연결망을 가진 체계로 가야 한다. 사회적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개별선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구조적 선도가 필요하다. 이에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새 프로그램인 “사회 중심 속의 젊은이들을 위한 발전과 기회”가 시작된다. 이처럼 어렵게 성취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통합은 학교, 기업, 기관 그리고 자유 단체의 지역적 협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초석은 첫 번째 노동시장으로의 가입을 돕기위해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총 3천만 마르크의 돈으로 시행되는 모델프로그램 “직업세계와 관계된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이다. 이 계획은 학교와 직업학교의 재통합, 청소년 보조기업에서 자격획득, 개인 경제적인 기업에서의 직업적 장려를 위한 공급을 포함한다. 총 23개 소재지 중에서 단지 신연방주에는 10개만이 있다.

직업교육 조치와 자격획득을 위한 다른 조치에 의해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기간과 같은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 도시구역 개조나 병원, 보호소, 사회복지 병원이나 다른 공익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작업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노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그 이상의 자질향상과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FSJ)와 자발적 환경의 해(FÖJ)의 자원봉사는 청소년들의 직업기회를 지원하고 개선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시민적 참여를 위한 가능성을 부여한다. 특히 신연방주에서의 성공이 이를 증명한다. 그 당시 총 12,3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참가자 수에 있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FSJ와 FÖJ에서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직업 오리엔테이션 기회와 자격획득 기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5.8 청소년 폭력, 외국인에 대한 적대 그리고 범죄 예방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특히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극우적인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기회의 증가와 교육 및 일자리 주선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연방은 연구계획 및 모델계획을 제창함으로써 중요한 자극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적 구상안인 “스포츠와 안전”을 통해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지역의 청소년범죄를 연구하는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의 연구계획, 튀링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베를린에서의 어린이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지역적 모델 프로그램 평가 단체 및 범죄동기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극우이념 확산에 대한 그 밖의 연구계획들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연방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실험계획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뮌헨의 독일 청소년 기관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범죄예방과 폭력예방을 위한 중앙분과가 설립되었다.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미화, 인종차별, 포르노물 등 위험한 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가 더 강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법적규제뿐만 아니라 대중매체가 가진 능력을 중재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장려된다. 어린이 학대 및 어린이 방치, 미성년자 섹스관광, 어린이포르노물 등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는 어린이, 청소년 긴급전화의 연결망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1998년부터 2001까지 이것이 계속 확장되고 부모를 위한 전화의 건설도 지원된다.

5.9 어린이 권리 강화

독일 어린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정부는 UN회의에서 어린이 권리에 대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어린이의 권리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연방가정여성청소년부의 “캠페인 프로그램: 어린이 정책”은 어린이와 관계된 활동을 폭넓게 다루어 주고 있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폭력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적 참여 가능성의 지원, 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의 강화와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등에 놓여있다.

긴급한 일은 폭력없는 교육에 대한 어린이 권리를 민법전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민법전 제1631조의 개정안이 연방법무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여전히 부모의 2/3가 그들의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폭력은 적당한 교육수단이 아니며 가정불화에 대하여 비폭력적 해결방법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것이 더 중

요하다. 이런 목적에서 부모를 그들의 교육관에 있어 지지하고 가정 내 갈등을 가질 때 불안감 및 절망감을 제거하고 비폭력적 갈등해결방법을 꾀하는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제6장 예술, 문화, 체육분야 통합을 위한 기여

1. 독일 통일에 의한 문화적 확장

동일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같은 언어와 국경을 넘나드는 매체들 덕분에 독일 양 진영이 수십년이 넘는 분단을 극복하고 동일한 문화국가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결국은 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이주하거나 추방을 당한 지식인들이 기여했다. 문학, 음악, 표현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정치적 참여에 대한 그들의 기여가 모든 독일인들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생생하게 유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분단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일상 문화에서 문화적 차이점이 나타났다. 특히 동독의 예술과 문화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독에는 서독에 없었던 특별한 문화시설들이 있었다. 요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기업과 노동조합의 문화관과 젊은이들을 위한 클럽 등이 특히 그 지역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통일은 독일의 문화적 확장을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문화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기념비, 대학교 그리고 자유 교육 시설과 점차적 훼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많은 역사적 도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통일로 인해 다양한 사례에서 문화적 전통에 다시 접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통일은 또 한편 공동의 현대문학 발전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문화의 담당자와 후원자는 주로 연방과 지방자치단체이다. 연방의 공동책임은 국가 전체중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수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궁지에 빠져있는 분단상황을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연방정부는 문화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조직적 전제로서 독일수상이 국가수상의 지위에서 “문화적 매체와 관계된 일을 위해 정부에 의해 위임된 자” 차원에서 연방의 문화정책적 관할권과 권능을 총괄하고 있다.

각 주 장관은 연방의 문화정책을 위한 대화상대자와 자극제로서 이해된다. 연방문화정책의 제도적인 강화는 주와 시군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주로 신연방주에서 특히 적용된다. 연방정부의 노력은 내적인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한 시기에도 신연방주에서 문화건설을 위해 새로운 지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관할권, 전통, 좋은 의지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에 대한 문화정책에서 연속성과 개혁을 똑같이 고려한다.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 예를 들어 전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지원하거나(소위 등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문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 해야 한다.

2. 문화적 명소와 건축물의 보전, 새로운 프로젝트

2.1 전국가적으로 의미있는 문화 시설 지원 “등대-지원”

연방은 전통적으로 구연방주의 전국가적 의미있는 문화시설을 지원한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과 함께 우선 신연방주에서는 문화적 대상물을 보존하는 일이 중심이 되었다. 연방이 총 3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연방주에서 엄청난 양의 문화시설을 보존하는데 성공했다. 중요한 구조적응은 그림

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대전과 동독의 방치로 인해 망가진 많은 문화건물을 개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 배려가 신연방주에서는 각별히 강조된다. 이런 시설들은 문화국가로서의 독일을 위한 본보기이다. 이 시설들은 방문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주민들의 자의식 성장을 강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서방기준에 맞추는 일 또한 불가피하다. 연방의 원조는 문화유적지를 시대에 맞게 건물을 개조하고 역사적인 표본에 따라서 재생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인적, 물적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은 해마다 약 7,500만 마르크를 다음의 신연방주에 있는 문화시설 유지와 현대화를 위해 투자한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프러시아성 및 정원을 위한 재단
- 바이마르의 고전주의 재단
- 데싸우의 바우하우스 재단
- 소르벤인들의 문화시설
- 라이프치히 소재 바하 자료관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
- 작센-안할트의 루터 기념관 재단
- 스트랄준트의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
- Halle에 있는 프랑케 재단
- 데싸우-뵈리츠의 문화재단
- Bad Muskau에 있는 퀴르스트-퀴클러 공원재단
- Pückler박물관과 Park Cottbus-Branitz 재단
- Eisenach에 있는 Wartburg재단
- Frankfurt/Oder에 있는 Kleist 기념 연구소
- Kamenz의 Lessing기념관

- 중부독일의 바로크음악 연구 공동체
- Güstrow의 Ernst-Barlach-기념관, Bad Frankenhausen의 Panorama 박물관, Leipzig의 동시대 예술을 위한 갤러리 그리고 Usedom의 Otto-Niemeyer-Holstein-Atelier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참여범위 내에서 신연방주에 있는 가치가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적 참여범위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행동요구가 가장 크고 전체 통합된 유럽에서 독일을 위한 문화시설이 어떤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이다.

연방의 이러한 참여가 거둔 효과는 각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Stralsund에 있는 독일 해양박물관은 정치·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60만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방문하는 북독일의 가장 사랑받는 박물관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Halle에 있는 Franckeschen 재단은 폐허 속에서 훌륭하게 재건되었다. 6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프러시아 성 및 정원을 위한 재단’이 역사적 표본에 따른 재건작업을 하고 있다. Wörlitz, Branitz 혹은 Bad Muskau의 정원지역도 위와 마찬가지로이다. 나이췌 강 양쪽편으로 흘러들어 가는 Muskauer Park를 위해 폴란드와 독일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이를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 “신연방주의 문화” 건설프로그램

연방과 주 사이의 재정보전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신연방주가 1995년부터는 문화 영역에서의 그들의 임무를 재정적으로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결론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재정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환경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보존될 수 있었지만, 이미 기한이 오래 지난 건설적, 기술적 현대화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은 부족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그들의 선임자의 입장을 수정하고 새로운 독일 정책적 측

면을 강조한다. 이런 새로운 문화정책의 표현은 “신연방주에서의 문화”라는 건설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와 대중매체 업무를 위한 연방정부의 위탁자에게 1999년 회계연도에는 이를 위해서 9천만 마르크 수준, 2000년도에는 3천만 마르크 수준의 돈을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기적인 재정계획에서 이 건설 프로그램은 2003년까지 해마다 3천만 마르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연방자금은 동일한 액수의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보충되는데, 따라서 문화 건설을 위해서 총 약 5억 마르크가 사용된다.

“신연방주의 문화”라는 건설 프로그램은 그 핵심에 따르면 투자프로그램이다. 건설조치와 문화재 입수가 그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가능하다. 이 지원계획은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그리고 Thüringen 이 5개 주의 리스트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리스트에는 중요한 대상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계획지원에 대한 제안 등이 담겨 있다. 대규모의 개별적 계획들에는 예를 들면 Dresden의 위생박물관과 Leipzig의 Grassi 박물관의 개조 혹은 극장 및 박물관 기술영역에서 이미 시기를 놓친 보수를 하는 것 등이 속한다. 자금이 허용되는 한 도서관 소장품들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도 준비되고 있다.

주에 할당되는 비율은 각 주 인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1999/2000년 첫 번째 지원시기에는 연방자금 1억2,000만 마르크 중에서 3,850만 마르크가 Sachsen에, 2,300만 마르크가 Sachsen-Anhalt에, 2,200만 마르크가 Brandenburg에, 2,100만 마르크가 Thüringen에 그리고 1,550만 마르크가 Mecklenburg-Vorpommern에 배분된다.

2.3 기타 투자자금

연방정부의 제안대로 연방은 상당한 자금으로 신연방주의 다음 투자에 참여한다.

연방은 Leipzig에의 종합예술 박물관 건축을 위한 비용의 25%를 담당한다. 이는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총 3천만 마르크 정도이다. 이로써 그 이전 제국법원 건물이 이주한 이후에 신연방주의 가장 중요한 명화전시관이 새로이 도시중심에 그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종합예술에 대해서도 구연방주에서의 많은 가치있는 박물관 신축에서 처럼 거창한 신축이 이루어진다

4개의 중요한 장기간 건축계획은 각각 5백만 마르크의 보조금을 받는다. 즉 Brandenburg의 돔, Wismar의 Georgenkirche, Quedlinburg의 Altenburger Schloss와 Altstadt 의 4개의 장기 건축계획이다. 1995년 Dresden의 Frauenkirche 재건을 위한 원조를 표본으로 삼아 기본법 50주년 기념일을 위한 10 마르크 기념주화로부터 얻은 순이익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신연방주에서의 연방의 문화정책은 곧 문화유적지의 건축적 개조가 눈에 띄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이미 시기를 놓친 현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초지역적인 비교에서 소재지 매력을 촉진하고 일거리와 관광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 국가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 10년 동안 신연방주는 유럽내 독일국가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증명하였다. 유럽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상호성장이 외국과의 비교와 경쟁을 촉진한다. 여기서 신연방주는 그들의 문화유적지를 시대에 맞게 보수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 연방은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도와줄 것이다.

2.4 베를린

연방정부는 수도문화지원에도 역시 새로운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6천만 마르크의 투입이 2000년부터는 1억 마르크로 증가할 것이다. 이로써 베를린의 문화적 수준이 다른 유럽국가 수도의 문화 수준에 급속히 맞추어 져야 한다. 1999년에 추가적으로 수도문화 지원을 위하여 6천만 마르크

크를 제공받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건설적 투자와 행사를 위해 쓰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문화시설 비용이 부분적으로는 연방에 의해서만 (독일역사박물관, Haus der Schutzmächte, Deutsche- Russisches Museum Karlshorst; 총 약 4,700만 마르크), 부분적으로는 소재지 주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되었다.(Deutsche Kinemathek 재단, Berliner Festspiele GmbH, Zentrum Internationles Theaterinstitut; 총 약 7,600만 마르크)

독일연방의 수도에서의 문화지원의 핵심은 Preußischer Kulturbesitz재단인데 (1999년 연방의 부담부분은 2억5,100만 마르크이다) 그들의 재정에는 베를린 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 참여한다. 전쟁시 심하게 손상된 베를린 심장부에 있는 도시 건축적으로는 유일한 박물관섬의 개조가 주요 임무이다. 20년을 목표로 한 지금까지의 계획을 연방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방은 그 이유로 베를린과 공동으로 개조시기와 재건설기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2.5 기념물 보호

독일 양 진영의 통일로 우리의 문화적 건물유산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수십 년 동안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있는 기념비를 보호하는 것을 방지한 결과 거기에 연방정부의 아주 특별한 자금지원이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문화기념비와 역사적인 도시중심부 보수과 보존을 위해서 여러 문화적 특별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25억 마르크에 달하는 연방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을 지출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였다.

그 핵심에 있어 이미 끝난 특별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연방정부는 1999년 3천2백만 마르크 수준의 자금을 신연방주에 있는 기념비 보호조치를 위해 제공할 것이다. 이 자금으로 신연방주에 있는 약 365개 문화기념비가 향후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고 복구될 것이다. 이 지원금에는 1999년에도 “도시건설적 기념비보호”를 위한 2억 마르크의 막대한 자금이 추가되는데, 이 돈으로 127개의 동독도

시에 있는 역사적 도시중심부가 개조되었다. 예전 동독정당과 거대조직의 자산에서 나온 그밖의 5천억 마르크에 이르는 자금은 1997년에서 2004년까지 문화기념비 보장과 보존을 위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독일기념비보호재단에 투입될 것이다. 이런 지원조치로 기념비보호는 신연방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문화정책중심에 속한다.

2.6 문서관리

문서관리에 있어서 그 사이에 완결된 통합과정은 베를린의 연방기록보관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여기서 약 400명의 공무원과 함께 9개의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연방기록보관소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일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각 곳에 분산되었으며, 이전에 Koblenz와 Potsdam에 보관된 문서를 통합한 이후에 최초로 1871년에서 1945년까지의 독일제국의 전체 문서자료가 Berlin-Licherfeld의 새 연방기록보관소의 자리에 집적되었다. 여기에는 이전의 Berlin Document Center의 자료들도 해당된다. 사용자들의 문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국가사회적 전체정치에 대한 주제에 관련되는 것에도 관심도가 높다.

Berlin-Licherfel 연방기록보관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도 또한 동독의 중앙부서의 자료가 보존되는데, 이들은 두 번째로 많이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다. 자료들이 통일당시까지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엄청난 추가수요가 있다. 동독정부 문서와 당과 사회 단체(SED, DBD, NDPD, FDGB, FDJ)와 관련된 문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것은 동독역사와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수집 그리고 도서관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비자치적인 “구동독정당과 대중조직의 문서관리재단”에 속한다. 동독의 CDU, LDPD 자료들은 St. Augustin의 Konrad-Adenauer 재단과 Gummersbach의 Friedrich- Naumann 재단의 문서보관소에서 자료로서 보존된다.

통합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필름보관소에 속하는 베를린의 연방영화자

료관리청도 베를린에 자리하고 있다. 통일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임무를 위해 연방기구와 맺은 조약을 통해서 DEFA-Filmstocks의 최종적 거처는 연방영화자료 관리청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Dahlewitz-Hoppegarten에는 최근 베를린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전한 고위연방기관을 임시보관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연방기록보관소의 두 개의 건물이 지어졌다.

Koblenz에 있는 주보관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간관련 주요기관의 문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당, 단체, 부속기관, 그림, 포스터 그리고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테이타들을 관리한다. 군사영역의 자료들은 Freiburg/Br에 있는 연방군사자료보관소에 집결되어 있다.

3. 체육, 황금 빛 동부계획

2,6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86,000개 이상의 스포츠 단체들은 독일의 사회와 문화생활의 필수 요소이다. 스포츠 단체들의 회원 수는 특히 신연방주에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의 통합력은 기능스포츠나 대중스포츠 경기에서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의 사람들을 더욱 긴밀하게 모았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증대시키고 서로 상이한 구조나 시스템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서독과 동독의 스포츠기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공동의 성장 과정을 촉진시켰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기능스포츠뿐만 아니라 대중스포츠를 그들의 관할 범위내에서 필수적인 지원과 장려를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강화된 스포츠 정책상의 참여에의 가시적인 증거는 1999년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스포츠부문 재정지출이 긴축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10만 마르크 정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3.1 황금 빛 동부계획

특별지원프로그램인 “황금 빛 동부계획”의 성공으로 연합정부는 이전의 연방정부가 외면했던 스포츠 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연방은 1999년에 신연방주 및 구동베를린에 대중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도록 1,500만 마르크 정도를 지원한다. 올해 7월에 연방정부는 6개주 68개 건설조치를 위한 연방자금을 할당해 주었다. 연방은 이것으로써 분단후유증을 극복하고 연방지역에서 동등한 생활상태를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기여한다.

연방, 주, 시군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시행된 특별지원프로그램에 연방이 1/3의 자금으로 참여한다. 이 자금은 신연방주 시민들이 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연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금은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에만 국한되지 않는 생산과 고용에 대해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이 특별지원프로그램은 독일 스포츠연합(DSB)에 의해서 1992년에 소개된 “황금 빛 동부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5년 이내에 신연방주의 전반적인 스포츠 시설제공이 90년대 초의 구독일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 당시 DSB는 약 250억 마르크로 이른바 기본스포츠 시설(실내체육관, 운동장, 실내외 수영장)에 있어서의 신축과 개축에 대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황금 빛 동부계획”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DSB는 연방, 주 그리고 시군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였다. 비록 그 사이 약 7년이 지났지만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 스포츠시설의 차이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다. 그 이후 “황금 빛 동부계획”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투자 중 채 15%가 못 미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금 막 시작한 특별지원프로그램 외에도 1995년 이후부터 새 연방주와 Berlin은 통독건설투자지원법(IfG)에 따른 연방보조로(1년에 66억 마르크) 스포츠 시설도 개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연방이 일차적으로 IfG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스포츠 시설의 개축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아주 훌륭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황금 빛 동부 계획”은 스포츠 시설지원을 이룩한다. IfG와 특별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연방보조는 신연방주와 구동베를린의 스포츠시설의 결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방의 폭넓은 기여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스포츠시설 건축에 있어서 발빠른 만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별지원프로그램은 때문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존재하는 부족을 신속하게 메꾸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연방장려는 대중스포츠에 대한 주의 관할과 책임을 그대로 부여한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원과 함께 체육공간건립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특별지원프로그램의 지원금을 신연방주들의 활동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신연방주와 베를린이 스포츠 시설 축진에 있어서의 참여도를 높이고, 개별적 지원분야에 분배하는 것은 각 주가 결정하는 IfG에 따른 연방지원금을 적절한 규모로 스포츠 시설정비에 투입하는 데 대해 기대하고 있다.

3.2 스포츠학 기관

베를린의 FES연구소(스포츠 기계의 연구개발 연구소)와 라이프찌히의 IAT(응용 트레이닝연구소)를 보호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성공한 이후에 이제까지 세 개 지역에 나누어져 있던 FES를 하나의 지역에 모으는 것과 IAT를 개조함으로써 이런 시설의 수행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었다. 연방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이런 조치들에 참여한다.